

연구총서 03-18

#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 방안

감영운  
김수암  
배정호  
박종철  
손기웅  
여인곤  
이금순  
최춘흠  
황병덕

통일연구원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 방안

◆  
목 차

I. 서론..... 1

II.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 지역별 실태와 방안..... 6

1. EU — 6

가. 정부차원 · 6

나. 민간차원 · 57

다. 정책적 고려사항 · 67

2. 오세아니아 지역 — 75

가. 지역개관 · 75

나. 호주 뉴질랜드의 전략적 가치와 대한반도 중요성 · 88

다. 대호주 뉴질랜드와의 관계 현황 및 전망 · 99

라. 오세아니아지역에 대한 통일외교역량 강화방안 · 125

마. 결론 및 정책적 과제 · 130

3. 국제적 통일 역량강화 방안: ASEAN — 148

가. ASEAN의 현황과 전망 · 148

나. 한국의 대ASEAN 관계: 평가 및 전망 · 160

다. 북한의 대ASEAN관계 · 164

라. ASEAN에 대한 통일외교역량 강화방안 · 171

4. 비동맹 — 176

가. 비동맹운동과 한반도 · 176

나. 인도의 대한반도 정책: 비동맹회원국 사례연구(1) · 207

다. 아랍국들의 한반도 인식: 비동맹회원국 사례연구(2) · 221

2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 방안

부록 1. 비동맹운동의 조직과 현황 · 229

부록 2. 비동맹회원국 현황 · 237

부록 3. 비동맹회의 정상회의 개최현황 · 239

5. 통일 북한정보관리권 국내외 전문가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방안 — 240

가. 인터넷과 국제협력 환경 · 240

나. 통일관련 지식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조건 · 243

다.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와 지식네트워크 · 252

라. 결론 및 향후과제 · 266

III. 결론 ..... 268

1. 국제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 268

2. 세부추진 방안 — 271

가. 정부차원 · 271

나. 민간차원 · 276

다. 국제기구차원 · 280

3. 통일인프라 구축 — 282

참고문헌 ..... 287

◆  
**표 목 차**

<표 1> 한국의 대EC 교역추이(1983~1990) — 10  
 <표 2> 한국의 대EU 교역추이(1995~2002) — 14  
 <표 3> 한-EU간 투자 추이(1999~2002) — 15  
 <표 4> EU의 대북한 교역량 — 24  
 <표 5> 독일의 대북한 교역추이(1990~2001) — 38  
 <표 6> 최근 3년간 영국-북한간 교역 현황 — 46  
 <표 7> EU국가 재외동포 현황(2003.7 현재) — 63  
 <표 8> 재외동포 대상 주요 사업 — 65  
 <표 9> 재외동포 대상 주요 교류사업 — 65  
 <표 10> 뉴질랜드의 주요 경제지표 — 88  
 <표 11> 2000년 호주 대외 원조 지원 내역 — 95  
 <표 12> 한국의 대호주 수출입 동향 — 107  
 <표 14> 한국의 대호주 주요 수입품목 — 108  
 <표 15> 한-호주 투자동향 — 109  
 <표 16> 업종별 대한국 투자동향(2003.3월말 누계) — 109  
 <표 17> 연도별 대호주 투자동향 — 110  
 <표 18> 호주 교민 현황 — 114  
 <표 19> 한-뉴질랜드 교역동향 — 119  
 <표 20> 한-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 120  
 <표 21> 한-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 120  
 <표 22> 한-뉴질랜드 투자동향 — 121  
 <표 23> 인도 네투대학교 한국연구프로그램 석·박사 일람 — 219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정보제공 서비스> — 255

4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 방안

<자유게시판 사례> — 257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링크 서비스> — 258

<통일진단> — 261

<쟁점과 여론> — 262

<통일·북한 관련 뉴스> — 264

## 1. 서론

1989년 동유럽에서의 공산주의의 몰락에 이어 1991년의 소련연방의 붕괴, 1990년에 발발한 걸프전에서의 미국 주도의 전쟁 수행 등의 일련의 상황전개는 냉전시기에 형성된 양극체제를 붕괴시키고 탈냉전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일초다극체제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범지구적 차원의 역학구도 변화는 국제안보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되도록 하였다. 탈냉전 시대의 도래에 따른 세계질서의 다원화 및 국제사회의 다극화, 국제관계에서 경제력의 비중의 증대에 따른 힘 개념의 변화, 국제적 상호의존의 증대, 첨단기술의 혁신과 하이테크 전쟁의 도래 등의 변화로 인하여 안보환경도 안보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변화를 보이고 있다. 탈냉전의 전환기적 상황에서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국제 테러리즘, 마약, 환경, 인권, 국제조직 범죄, 사이버 테러, 해적 행위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9·11테러와 같이 무차별적 목표를 대상으로 시간·공간·수단의 구분 없이 가해지는 국제테러가 21세기의 새로운 주목되는 안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범지구적 차원의 일초다극체제의 형성은 동북아 지역의 역학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탈냉전기의 역학 구도인 미국 주도의 일초다극체제 아래 놓여 있는 동북아지역의 역학구도는 미국 지역패권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수용 태도와 더불어 협력, 견제 및 경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동북아지역의 일초다극체제는 강대국들간의 협력, 견제 및 경쟁 등의 다층적 구조를 형성하면서 일초다극체제의 유지세력과 다극체제(세력균형 체제)로의 변화세력간의 경쟁, 갈등,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탈냉전 이

## 2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 방안

후 동북아지역은 중요한 전략환경의 변화를 경험해 오고 있다. 소련의 붕괴, 식민지 지배경험, 중국의 부상, 북한문제, 일본의 우경화 경향, 미국의 일방주의 등으로 인하여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다.

동북아시아 역내국가들은 현재 21세기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전쟁 등의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의 동북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만주 등을 식민지로 삼는 뼈 아픈 과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은 동북아 협력보다는 갈등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 문제 이외에도 동북아의 고립된 섬으로서 북한문제는 역내 국가들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동북아시아 역내질서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역내질서 변화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는 지역내 패권경쟁, 나아가 미래의 세계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간의 암장된 갈등문제를 들 수 있는 바, 이 중미간 갈등문제는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심대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간의 갈등 요인도 주요 변수 중의 하나로 보인다. 경제적으로도 동북아시아 역내국가들의 산업화 수준이 점차 근접되어 감에 따라 역내 경제분업에 있어서 갈등 소지가 증대될 수 있다.

이처럼 전략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동인중의 하나는 이른바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위상 증대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일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세계질서를 견인하는 미·중·일·러 등 핵심 권력보유자가 포진해 있고, 고도성장의 신화를 창조한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역동성에 힘입은 바 크다. 아울러 동북아 지역은 세계적 정치·군사강국들의 집결지로서 재래식 및 핵 군사력이 고도



로 밀집해 있어서 역내에서의 정치·군사적 힘의 균형이 지역적 차원 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전략적 안정에 중추적 역할을 더해 가고 있다. 이렇듯 세계 정치·경제·안보관계의 지리적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상 증대가 이 지역에 대한 국제관계 주요 행위자들의 인식의 폭과 깊이를 확대시키는데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 정세가 극히 유동적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대북정책으로 평화번영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이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방식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계승하는 측면은 화해협력, 평화공존, 점진통일 등이며, 발전시키는 측면은 동북아로 시야를 확대하여, 동북아 평화번영의 틀 속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한반도 → 동북아/ 대북 → 통일·외교·안보/ 화해·협력 → 평화 번영으로 정책의 외연과 내용을 발전시킴으로써 남북교류협력 진전에 상응하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실현하고 경제와 안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참여정부 대외정책의 기본목표이다.

한반도 평화 증진, 한반도·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주요 추진원칙으로는 목표 달성을 위한 4개 원칙이 있다. 우선 첫 번째 원칙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으로서 전쟁은 절대로 안되며, 남북대화·다자대화 등 다양한 대화채널의 활성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상호 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원칙으로서 동북아 역내 국가간 상호 신뢰를 통해 서로 이익을 얻고 협력하는 바탕 위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원칙이며, 한반도 문제는 실질적 당사자인 남북간 협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원

#### 4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 방안

칙은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으로서 법·제도에 따른 정책추진 및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평화변영정책의 추진전략은 단계적 접근전략에 입각해 있다. 우선 당면 북한 핵문제 등의 안보위기를 북한 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우리의 적극적 역할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 한반도 안보불안이 해소되고, 평화체제에 대한 대내외적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러한 평화 체제 구축 토대 위에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축을 추구한다. 남북 경제협력의 실질화·제도화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속에서 남북관계의 증진을 모색한다.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의 대외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 주변정세가 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동북아 정세가 갈등 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변영정책은 주변 4강과의 관계 설정 이외에도 EU,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 등 다른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에서 추진되어야 그 실효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21세기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해 북한 핵위기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지여론을 강화하고 그 조직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기존 주변4국(미·일·중·러) 중심을 벗어나서 5+5 국가인 EU·오세아니아, 아세안, 북한의 활동무대인 비동맹국가 등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평화변영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친한·지한인사를 확대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국제적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이들 전문인력·기관을 다양한 한반도 상황 전개 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화 방안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월드컵으로 고양된 재외동포의 민족적

자극심을 해외 통일역량 강화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통일역량을 다면적·포괄적으로 강화하는 참여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국제기구, 각국 행정부·의회·군·기업·NGOs 등의 전문인력 및 현지 재외동포 등이 참여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자료·정보 공유체제와 협의 통로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친한·지한 인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조직화 방안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이 연구가 우선 1차 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도 깊은 분석에 의한 추진방안을 연구하기 보다는 개략적인 구조와 개론적인 차원의 방안 연구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국가선정 역시 중점적 역할을 하는 나라에 국한하였음을 밝혀둔다. 2004년도 계속사업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연구방법으로는 지역적 특색을 살린 정책연구의 특성상 지역자료를 통한 실증적 연구조사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장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지는 현장조사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해당지역 기관 및 한국 교포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해외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당지역과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유리한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6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 방안

### II.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 지역별 실태와 방안

#### 1. EU

##### 가. 정부차원

###### (1) EU 개관

서독,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국은 1952년 7월 석탄, 철강, 철광석, 고철의 공동시장을 위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발족시켰다. 1958년 1월에는 공동의 농업·공업시장 뿐만 아니라 상품, 인간,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왕래와 개별 국가경제의 점진적 폐기를 목표로 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가 발족되었다. 이와 함께 핵에너지와 핵연구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대체에너지, 환경, 원자로안전 분야에서 협력을 위해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도 발족되었다. 상기 3개의 공동체는 1967년 7월 집행기구 통합조약의 발효로 「유럽공동체」(EC)로 개편되었다.

또한 EC는 냉전종식 이후 유럽의 경제적 통합을 발판으로 궁극적으로는 유럽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로 「유럽연합」(EU)으로 개칭되었다. EU 회원국은 냉전시대에 12개국이었으나 1995년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가 정식 가입하여 2003년 현재 15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이다. EU 본부 소재지는 벨기에 브뤼셀이며, 연 2~3회 개최되는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최고 정책결정기구로서 회원국 각료들로 구성되는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집행기구로서 20명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입법기관으로 626명으로 구성되는 의회(European Parliament), 소송처리를 위한 사법재판소(Court of the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등의 조직이 있다.<sup>1</sup>

경제적으로 EU는 2002년 기준으로 총 3억 8천만 명의 인구에 국내 총생산(GDP)은 약 8조 5천억 달러로 미국의 약 81% 수준이며, 교역규모는 3조 9,209억 달러로서 세계교역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단일 경제 통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EU 수출액은 2조 65억 달러로 세계대비 31%를, 수입액은 1조 9,144억 달러로 29%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스웨덴과 덴마크를 제외한 12개국은 2002년부터 단일 화폐 '유로'(Euro)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로 지역의 GDP 성장률은 2000년 3.5%, 2001년 1.5%, 2002년 0.8%를 기록하였고, 1인당 GDP는 22,500달러로 높은 편이다.<sup>2</sup>

최근 EU는 NATO 일변도의 유럽안보질서를 EU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모색하고 있고,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

1 Mario von Baratta and Jan Ulrich Clauss, *Fischer Almanach der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95), pp. 183-229. <<http://www.mofat.go.kr/file/addmenu/EU>"1, hwp>등 참조

2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3.9), p. 6&9, <<http://www.mofat.go.kr/file/addmenu/EU>"1, hwp>, p. 1.

## 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 방안

and Security Policy: CFSP)을 도입하여 국제정치 무대에서 자신의 일체감을 제고시키고 있다. 따라서 EU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4년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10개국, 2007년에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그 이후에 터키 등이 EU에 가입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따라서 세계의 가장 큰 국내시장이 유럽에서 탄생할 뿐만 아니라 전체 유럽에 평화, 안보,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한편 참여정부는 단기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동북아 경제중심을 건설하는 것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을 잘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국제적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기와 같은 EU의 국제적 위상 및 안보와 경제면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참여정부가 국제적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EU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EU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남북한과 EU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한·EU관계

#### (가) 냉전기의 관계

한국정부는 1963년 7월 24일 EEC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는데 주스위스 한국대사가 대사직을 겸임을 하였다. 1965년 11월에는 한국이 벨기

에 브뤼셀에 EEC대표부를 개설하여 주 벨기에 대사가 대사직을 겸임하였으며, 1983년 3월부터 한-EC간 연례 각료회담이 개최되었다. 각료회담은 외무장관급 각료회의와 차관보급 실무회의로 개최되었고 경제와 통상 문제를 협의하는 등 한-EC 관계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9년 7월까지 6차에 걸친 각료회담이 서울과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되었고 서울에 EC 대표부 설치가 합의되었다.

경제면에서, 한국의 대 EC관계는 대일 및 대미관계 보다 뒤진 제3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EU간 교역량은 1970~80년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약 172억 9,700만 달러에 달하였다. 한국의 대EC 수출액은 약 88억 7,600만 달러로서 총 수출액의 13.7%, 대EC 수입액은 약 84억 2,100만 달러로서 총 수입액의 12.1%를 차지하였다. 이 기간 중 한국은 계속 교역흑지를 기록하여 1990년 교역흑지는 약 4억 5,500만 달러였다(<표 1> 참조).

<표 1> 한국의 대EC 교역추이(1983~1990)

(단위: 백만 달러, %)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수출	3,312 (5.7)	3,596 (8.5)	3,568 (-0.8)	4,326 (30.5)	6,618 (53.0)	8,161 (23.3)	7,415 (-9.1)	8,876 (19.7)
수입	2,419 (25.9)	3,105 (28.4)	3,417 (10.0)	3,219 (5.6)	4,618 (43.5)	6,050 (31.0)	6,499 (7.4)	8,421 (29.6)
합계	5,731	6,701 (16.9)	6,985 (4.2)	7,545 (8.0)	11,236 (48.9)	14,211 (26.5)	13,914 (-2.1)	17,297 (24.3)

주) 괄호는 전년대비 증가율  
출처) 관세청

한편 유럽국가들은 1977년까지 한국으로부터 182만 달러 상당의 27개 사업을 유치하였는데, 이는 1968년 이래 한국 대외투자의 2.7%에 해당하였다. 이 당시 한국의 대유럽 투자는 주로 수출시장 및 분배시설 구축에 목적이 있었다. 1980년대 초부터 삼성, LG 전자 등이 최초로 제조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1987년까지 한국의 대유럽 투자는 2,32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반면 유럽의 대한국 투자는 미·일에 비해 부진하여 1981년 1억 2,3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한국에 대한 외국투자 전체의 6.6%이었다. 1986년까지 EC의 대한국 투자액은 2억 4,100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외국의 총 투자액에 대한 비율은 사실상 거의 동일하였다.<sup>3</sup>

정치면에서, EC는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북대치의 상황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EC는 1983년 11월 22일 버마 랑군

3 Christopher M. Dent, *The European Union and East Asia: An economic relationship*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p. 196.



사태 관련 북한의 테러행위를 규탄하는 성명과 1988년 3월 10일 KAL 858기 폭파사건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1987년 10월 29일 남북 대화 촉구 및 남북한 UN 동시기입과 교차승인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확인시켜주었다. 동서 냉전기에 한국과 EEC/EC는 미국이 중심이 되는 국제정치질서 속에서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각자 개별적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양자관계는 상기와 같이 정치협력이 미약하였고 주로 경제·통상 분야 위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나) 탈냉전기의 관계

##### 1) 한-EU의 인식변화

1990년대 초 냉전종식과 함께 한-EU의 상대측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 북미는 「범대서양자유무역지대」(TAFTA)의 구상을 비롯하여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유럽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동아시아와 북미간의 관계도 1989년 발족한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중심으로 역내협력을 꾸준히 지속,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유럽 관계는 역사적, 지리적 배경으로 인해 냉전기에 연계성이 미약하여 북미·유럽이나 동아시아 북미간의 관계에 비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냉전종식과 더불어 경제·사회적으로 세계화 추세가 대두되면서 동아시아, 북미와 유럽 3개 지역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특히 유럽통합의 진전에 힘입어 15

개 서유럽 국가들로 구성된 EU가 신 국제질서의 새로운 중심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서 냉전기에 경제·통상 분야 위주로 관계를 발전시켜 오던 한국은 EU와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관계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EU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었다. 지리적으로 동북아 및 동남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에는 약 19억 명이 거주하고 있고 세계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1960년 동아시아의 GDP는 전 세계의 4%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따라서 1996년에는 25.9%에 이르렀다. 그리고 전 세계 총무역량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에 8.9%, 1980년에 13.9%이었으나 1996년에는 24.8%로 증가하여 북미 및 유럽과 함께 동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중심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및 멕시코로 이루어지는 북미는 19.0%, EU 15국은 39.1%를 각각 차지하였다.<sup>4</sup> 이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적 지위의 향상으로 냉전종식 이후 세계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부상하였고 세계 정치, 경제분야에서 전략적인 가치가 증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점증하는 가치를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싱가포르·홍콩·대만·한국 등 아시아 신흥 경제국가들과의 관계강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EU는 그 동안 미국이 선점해 온 동아시아 시장의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됨에 따라 미국 주도의 APEC을 견제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EU는 1994년 7월 『신아시아 전략을

4 C. M. Dent(1999), pp. 17 & 289 참조

향하여』(Towards a New Strategy for Asia)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중·일과 ASEAN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시장경제의 투명성, 인권문제를 포함한 민주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 EU는 과거 경제교류로 인한 통상마찰 해결 위주의 한국과의 관계를 정무·문화 등 제반분야로 확대하고 보다 심층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로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EU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한국이 ASEM 및 ASEAN+한·중·일 회의를 주도하는 등 아태지역의 중심국가로 부상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한국과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는 인식, 최근 남북화해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EU회원국과 북한간 외교관계가 수립되는 등 유럽과 북한간 관계강화 움직임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등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2) 한·EU 경제관계

「주한 EC집행위원회 대표부」(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가 1990년 1월 16일 발족되었습니다. 이는 완전한 특권 및 면책권을 보유한 외교적 사명을 가진 기관으로 한국에서 EC의 실행기구를 대표하는 집행 위원회와 한국과의 공식적 관계를 수행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위원회 대표는 대사급으로 한국 정부에 대해 EC를 공식적 대표하며, 이 대표부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① EC 정책에 대한 홍보, 설명 및 수행, ②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진척 현황에 대한 보고 및 분석, ③적절한 경우 위원회의 강령

14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 방안

에 따라 한국 정부와의 협상 수행, ④ 무역, 농업 및 환경과 같은 EC 정책에 구체화된 바에 따라 유럽의 이해를 진작시킴으로써 유럽공동체에 부과된 권한 행사<sup>5</sup>

주한 EU 상주대표부가 설치되고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세계화 추세가 도래함에 따라서 한-EU간 교역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1996년 시기에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1997년 말에 IMF 금융 위기 사태를 맞으면서 한-EU간 교역은 전년도 대비 1997년 -2.0%, 1998년 -18.7%를 기록하였다. 다행히 1999년부터 증가추세가 다시 나타났고 2001년 일시 감소하다가 2002년에는 전년도 대비 12.3% 증가하였다. 2002년 한국의 대EU 수출은 약 216억 9,400만 달러, 수입은 약 171억 700만 달러로써 한국이 약 45억 8,7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표 2> 참조).

**<표 2> 한국의 대EU 교역추이(1995~2002년)**

(단위: 백만 달러, 경상가격,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출	16,302 (44.9)	15,325 (-6.0)	16,864 (10.0)	18,171 (7.7)	20,241 (11.4)	23,424 (15.7)	19,627 (-16.2)	21,694 (10.5)
수입	18,191 (25.1)	21,204 (16.6)	18,934 (-10.7)	10,928 (-42.4)	12,629 (15.6)	15,788 (25.0)	14,921 (-5.5)	17,107 (14.6)
합계	34,493	36,529 (5.9)	35,798 (-2.0)	29,099 (-18.7)	32,870 (13.0)	39,212 (19.3)	34,548 (-11.9)	38,801 (12.3)

주: 괄호는 전년대비 증가율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2003. 11), pp. 161~162.

5 [http://www.delkor.cec.eu.int/kr/about\\_us/delegation.htm](http://www.delkor.cec.eu.int/kr/about_us/delegation.htm)

EU는 2002년 현재 한국의 제4위 교역 상대국이다. EU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3위 수출 지역이고, 일본과 미국 및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4위 수입 지역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EU의 제2위 교역 상대국으로서 제18위 수출시장이며 제8위 수입시장이다. 한편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8~2002년 기간 중 한국의 EU 투자는 579건에 약 74억 3,289만 달러이고, EU의 한국 투자는 3,138건에 약 245억 7,949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EU는 미국에 이어 제2위의 한국 투자국이고 한국의 제4위 투자 대상지이다. 상기와 같은 한-EU 경제관계 발전에는 「무역과 협력에 관한 기본협력협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표 3> 한-EU간 투자 추이(1999~2002)

(단위: 건 천 달러)

	1999		2000		2001		2002		총누계 (1968-200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한국의 EU 투자	32	321,677	49	172,709	52	2,190,450	52	766,813	579	7,432,887
EU의 한국 투자	312	623,715	375	439,459	306	3,061,989	264	1,662,850	3,138	24,579,492

출처: 산업자원부

1995년 EU는 한국과 「무역과 협력에 관한 기본협력협정」을 협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한국이 세계 경제와 아시아에서 보다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고, 군사독재를 공식적으로 청산한 이후 민주주의를 성

공적으로 발전시키고 군부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최초로 1992년 한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 결과 1996년 10월 『기본협력협정』이 서명되었다. 이는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이 모두 참여한 협정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국의 비준을 거쳐야 했다.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EU간 『기본협력협정』의 협상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2000년 3월 19일 EU이사회는 2001년 4월 1일 발효되는 『기본협력협정』을 수용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협정은 무역(제5조), 농수산(6조), 해운(7조), 조선(8조), 지적재산권(9조), 기술규격 표준(10조), 경제·산업협력(12조), 마약 및 돈세탁(13조), 과학 기술협력(14조), 환경(15조), 에너지(16조),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17조), 제3국 개발(18조), 공동위원회 신설(19조) 등 구체적인 실질협력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통상·과학기술·환경·문화 등 양자간 협력관계가 확대·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기본협력협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운송, 교육, 금융 등도 과거보다 대화의 필요성이 한층 증가하였기 때문에 협정의 진보조항(evolutionary clause)은 이러한 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놓았다.<sup>6</sup> 『기본협력협정』에 따라서 설치된 한-EU 공동위원회는 양측의 경제현황 및 정책, 통상현안과 협력증진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1997년 한국의 IMF 금융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한 바 있는 EU는 한국의 경제개혁 노력을 환영하고 있고 WTO 뉴라운드, ASEM 등 다자 및

6 <[http://www.delkor.oec.eu.int/kr/eukorea/eu\\_relations.htm](http://www.delkor.oec.eu.int/kr/eukorea/eu_relations.htm)> 참조.

지역차원의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긴밀한 협력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한국의 금융부문 및 대기업의 구조개혁 조치, 자동차 시장개방, 조선 및 지적재산권 등 개별 통상문제에 있어서 국제규범의 준수, 무역불균형 시정 및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등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EU 회원국들과의 경제관계 활성화와 회원국 들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위해 꾸준히 협의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3) 한EU 정치관계

오늘날 한EU 관계는 ① 정치적 가치의 공유, ② 양자간 무역 및 투자 규모를 반영하는 확고한 경제적 관계, ③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EU의 지지 등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에서 민주적 가치와 시민 사회가 정착되고 보다 투명한 시장경제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EU와 한국은 정치 면에서도 보다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sup>7</sup>

한EU 관계는 1990년 1월 주한 EC대표부의 설치를 계기로 이전의 경제·통상 위주의 협력관계에서 탈피하여 정치관계로 발전되었다. 양측은 UN총회 및 ASEAN 확대 외무장관회의 등 국제회의를 이용하여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EC는 1991년 11월 20일 「한반도 비핵선언에 관한 EC 성명」, 1993년 3월 19일 「북한의 NPT 탈퇴 결정에 대한 EC 성명」등을 통해 북핵 관련 문제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한국과 EU는 수교 이후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으나 이

7 <[http://www.delkor.oec.eu.int/kr/eukorea/eu\\_relations.htm](http://www.delkor.oec.eu.int/kr/eukorea/eu_relations.htm)> 참조

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는 미약한 수준에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기본협력협정」과 「정치공동선언」이 1996년 10월 체결되었다. 한국측은 이를 계기로 한-EU 정상회담과 외무장관회의 및 차관보급 회의 등 각급 협의채널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한-EU 관계에 관한 이사회와 의회에 보내는 커뮤니케이션을 채택하였다. 이에는 경제개혁 지속, 시장접근 확대, WTO 뉴라운드를 위한 협력, 경제협력 강화, 정치대화 강화를 통해 아시아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표상으로서의 한국의 위치 강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99년 7월 19일 EU이사회는 집행위원회의 이러한 내용을 지지하는 결정사항을 채택하였다.<sup>8</sup> 1999년 7월에는 EU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정책인 「한반도에 관한 이사회 결론」이 채택되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감안한 정치·경제 등 제반관계 강화, 한국의 경제개혁 노력 지지, 한반도의 안정 및 영속적 평화정착 노력 지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강조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별히 한-EU간 정치협력의 큰 성과는 EU회원국들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 점, 같은 해 11월 제3차 서울 ASEM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sup>9</sup>을 EU 15개 전 회원국과 ASEAN 회원국들의 공동명의로 발표한 점 등이었다.

2001년 5월에는 EU 정상대표단이 방한하였고, 12월 11일 프루디

8 <[http://www.delkor.oec.eu.int/kr/eukorea/eu\\_relations.htm](http://www.delkor.oec.eu.int/kr/eukorea/eu_relations.htm)> 참조.

9 “Erklärung von Seoul für Friede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20. Oktober 2000,” <[www.auswaertiges-amt.de](http://www.auswaertiges-amt.de)> (2000. 10. 20).



EU 집행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스트라스부르크 회담은 양자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EU의 발전, 다국적 무역시대 협력에 대한 유용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2002년 10월에는 제1차 「한-EU 정례 정상회담」이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1963년 외교관계의 수립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양자관계가 한 차원 성숙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EU의 정상회담 대상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7개국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한국이 8번째 정상회담의 대상국이 된 것은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노력, 동북아 지역의 긴장완화에 대한 기여,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EU회원국들의 평가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EU 정상회의는 다년간 외교적 해결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용의를 재확인하고,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정책을 지지하였다.

1990년 이후 한-EU 정치관계에서 우리나라의 통일역량 강화에 크게 이바지 한 것은 통일부에 의해 통일독일에 파견되었던 통일주재관들이었다. 통일주재관은 ① 주재국을 통한 북한관련 정보·자료 수집 및 동향 파악, ②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 및 지지 유도, ③ 국제적 차원에서의 한반도문제 관련 대응능력 제고 등의 목적으로 우리 정부가 통일연구관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독일에 최초로 1990년 7월 파견하였고 그 이후 1996년 8월 마·일·중에도 파견하였다. 주독 통일주재관은 1999년 8월 업무를 중단하였으나 마·일·중 주재 통일주재관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주독 통일주재관의 주요 업무는 독일통일 관련 자료와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통일부·청와대·외교부 및 관련 부처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 정부의 각 부처에서 독일을 직접 방문하여 부처관련 소관 사항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통일주재관들이 현지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독대사관 통일주재관은 독일통일과정이 추진되던 1990년 7월초에 4급 1명이 파견되었으며, 1992년 4월 3급 1명, 5급 1명이 추가로 파견되었다. 독일통일 직후 신동원 주독대사는 독일통일 연구 및 본국에 대한 보고를 대사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관리하면서 대사관 직제 자체도 통독연구 업무 중심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통독연구를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서 통독과정 연구가 통일연구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통일주재관들은 분단시 동독과의 협상을 주관했으며, 통일이후 통합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연방수상실과 연방 내무성을 주로 접촉하였다. 연방수상실 신연방주 조정국(Gruppe 44)에는 70년대 초부터 동서독협상을 담당하였고 통독당시 수상실 독일정책국장이었던 Stem 국장 등 과거 내독관계 협상에 관여한 인사들이 있었고, 연방내무성에는 통일 이후 내독관계성이 해체되면서 잔류한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통일과정에 관한 홍보와 통합을 위한 동독주민 교육·홍보 자료들을 발간하는 공보처, 통일비용 및 미해결재산문제 처리 등과 관련한 문제를 다루는 재무성, 동독경제재건 현황 파악을 위해 경제성, 동독불법행위 청산 및 법적통합 연구를 위해 법무부, 동독의 외교공관 처리와 구동독 대외채무 처리 파악을 위해 외무성을 접촉하였다. 내독관계성 차관이었던 Priesnitz씨가 통일후 내무성 차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한국의 고위관리들은 그를 주로 만났다.

독일정부와의 협력은 상호주의라기보다는 한국측이 독일정부로부터 통일관련 정보자료를 얻어오는 일방적 관계이었다. 예를 들면 1994년 7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1970년 동서독 정상회담시 서독수상의 선물,

기차 객차 배치, Erfurt 호텔 객실 배치 등 사례를 파악하였다. 연방수상실의 「통독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통독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구동독 과거청산 특별조사위원회」(Enquete Kommission)를 연방하원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통일주재관은 동 조사위원회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동 위원회 인사들을 접촉하였다. 또한 동서독 화폐통합추진 현황, 독일 통일비용 재원 조달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방은행」(Bundesbank)을 직접 접촉하거나 연방은행 발간 월간지를 참고하였다. 통합 및 동독 재건 현황과 동독 주민들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구 동독 지역을 방문, 주정부와 시정부 인사들과 면담하였다. 이외에도 통일 과정에서는 「전독문제연구소」와 「독일외교협회」 연구원들과 주로 접촉했으며, 통일 이후에는 통독 후 경제상황이 주된 관심사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독일내 4대 경제연구소인 「독일경제연구소」(DIW), 뮌헨 소재 「IFO 경제연구소」, 「함부르크 경제연구소」(HWWA), 「Kiel 경제연구소」와 접촉하였다.

상기와 같은 연구와 활동을 통해 주독 대사관 통일주재관들은 대사관 차원에서 통일관련 연구결과와 정보를 우리 정부 관련 부처들에 전문으로 보고하는 동시에 「숫자로 본 독일통일」, 「동서독 교류협력사례집」, 「독일 통일백서」, 「동서독화폐통합」 등의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대사관 예산으로 통독관련 책자를 구입하여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 우리 정부의 유관부서에 송부도 하였다. 주독 대사관의 통일주재관들은 독일통일 관련 중요한 자료와 정보들을 우리 정부에 보냄으로써 통일역량 구축에 막대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말에 업무를 중단하였다. IMF 금융위기 사태로 정부조직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부는 1998년 6월 주일 대사관 통일주재관의 감축을 결정하였으나 통일부는 일본 주재관

대신 독일 주재관의 감축을 요청하고 1999년 8월 1일부로 철수시켰다.

### (3) 북-EU관계

동서냉전기에 북-EC 간에는 공식적 관계가 없었고 단지 개별국가 차원에서 덴마크와 스웨덴 및 핀란드(1973), 스위스(1974), 포르투갈(1975) 만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다. 북한의 심각한 흉수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1995년 EU는 최초로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2000년까지 의료·음료수 위생시설·방한복 등 총 3,800만 유로의 인도적 지원, 식량비료·농업협력 등 총 1억 6,800만 유로의 지원, KEDO 이사국으로서 총 7,500만 유로의 핵발전소 건설비 분담 등을 하였다.<sup>10</sup>

개별국가 차원에서 북한과 외교·경제관계를 유지해 오던 EU국가들은 1998년부터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의 맥락에서 대북정책을 수행하였다. 북-EU간 제1차 정치대화가 12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어 북핵, 4자 회담, 남북관계, KEDO, 인권, 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후 1998년 12월 EU 의회대표단과 1999년 1월 집행위원회 대표단의 방북과 11월 브뤼셀에서 북-EU간 제2차 정치대화를 통해 상기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 협의되었다. 그리고 북-EU는 2000년 1월 이태리와의 수교 및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외교관계를 대폭 확대하였다. 백남순 북한 외상은 EU 회원국 중 미수교국에 수교를 제의하는 서한을 9월 발송하였고, 이 결과 북한은 같은 해 12월 영국과, 그리고 2001년에는 네덜란드, 벨기

---

10 김학성, 「북한-독일 수교의 배경과 EU 국가들의 한반도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2001-07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17-18.

에, 스페인, 독일, 룩셈부르크, 그리스 등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국과 수교를 마쳤다.

북EU간 급속한 외교관계 수립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먼저 북한은 EU 회원국들과 관계개선을 통해 2001년 부시행정부의 출범이후 악화된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마.일의 대북 경제지원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EU 국가들로부터 경제지원을 획득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주목하고 1993년에 「신 아시아 전략」을 수립한 바 있는 EU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수교를 통해 동아시아에 대한 외교영역을 확대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한편,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농업과 에너지 분야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2001년 2월 제1차 EU 대북지원 조사단이 방북하였고, 페르손 스웨덴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EU 대표단이 5월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서울 답방문제를 협의하고 인권대화 개최, 미사일 발사유예 선언 약속 등에 합의하였다. 5월 14일 북-EU간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되었고 7월 제2차 EU 대북지원 조사단이 방북하였다. 또한 북-EU는 1998년 12월 제1차 정치대화를 시작으로 2002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친 정치대화를 가진바 있다.

최근의 EU 정상회의에서는 제2차 북핵위기 문제에 대해 EU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6월 19~20일 그리스에서 개최된 EU 정상회의는 특별히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면서 한반도문제가 유럽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북핵문제도 세계화 시대에서는 근거리 위협과 같은 우려 사항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EU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 핵 프로그램 및 IAEA 안전조치협정 불준수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사태 악화를 위한 행동의 자제를 촉구하였다. 또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 및 국제적 비확산 의무의 완전 준수를 촉구하면서 다자간 외교적 해결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기여 용의를 재확인하고,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 정책을 지지하였다.<sup>11</sup>

경제면에서 EU는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 EU의 대북한 수출은 약 2억 6,500만 유로, 수입은 약 7,400만 유로로서 EU가 약 1억 9,200만 유로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EU의 총 수출액 중 북한이 차지하는 비율은 0.03%, 총 수입액 중 북한이 차지하는 비율은 0.01%에 불과하다(<표 4> 참조).

**<표 4> EU의 대북한 교역량**

(백만 ecu/euro, %)

	1988	2001
수출액 (총수출액 대비)	87 (0.02)	265 (0.03)
수입액 (총수입액 대비)	53 (0.01)	74 (0.01)
합계	140	339

출처: EUROSTAT

우리 정부가 EU에 대한 국제적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EU 자체와 북한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EU 개별국가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11 “Thessaloniki European Council, 19 and 20 June 2003, Presidency Conclusions”, <<http://ue.eu.int/pressData/en/ec/76279.pdf>>.

이해도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EU의 중심 국가인 독일과 영국, 그리고 1973년부터 외교관계를 맺어온 스웨덴의 대북한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 (4) 북-독일관계

##### (가) 독일의 대북한 인식

북한에 대한 현재 독일 정부의 인식은 북한이 예측불가의 폐쇄국가일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에 기초되어 있고 경제체제가 붕괴되었으며 인권침해가 심각한 국가라는 것이다.

첫째, 독일은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들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독일의 시각에서 북한은 오래 전부터 내려온 전통과 종교의 영향을 제거하고 주민들을 유아 시기부터 유치원, 학교, 가정에서 '주체사상'으로 세뇌화시켜 당을 무조건 추종하도록 하는 중앙집권적 조직이다. 주민들은 또한 철저한 감시와 소위 '외부 적'들에 대한 공포에 의하여 통치되어진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래로 취해진 대내적 조치들은 현재의 권력구조를 유지하고 김정일이 중요한 지위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요한 결정들은 당에서 이루어지나 점차 군부가 결정권과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논의는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계속 우려하고 있고 파국적인 경제적, 인도적 상황은 북한을 예측불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입장이다.<sup>12</sup>

12 "Korea/Demokratische Volksrepublik (Nordkorea)", <<http://www.auswaertiges-amt.de>>. (2002.1.28); "Lage in Nordkorea, Rede von Staatsminister Ludger Volmer vor dem Deutschen Bundestag am

둘째, 독일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이 중단된 이후 자급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에 기초된 북한의 경제체제는 와해되었고 단지 국제지원 때문에 북한은 완전한 경제적, 정치적 붕괴를 모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에너지 부족의 결과로 단지 북한 산업의 20%만이 작동중이고, 이는 만성적인 외환부족을 야기하고 있다. 약 120억 달러의 대외부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은 대외적 신용을 상실했고 이는 대외무역의 장애가 되고 있다. 북한의 주요 경제분야는 광업 중에서 석탄, 마그네사이트, 흑연, 철, 금, 은, 납, 아연 생산이고 기계제작은 이전에는 공업생산의 30%를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단지 군사 기술 부문에서만 작동되고 있다. 화학부문에서는 수입원유 정제와 화학비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섬유산업 부문의 생산도 축소되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다수의 수력 및 화력발전소가 있고 소형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KEDO에 의한 2기의 경수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식량은 현재 단지 다수의 국제원조기관들(UNDP, IFAD, WFP, UNICEF, 국제적십자사, NGO)을 통해 낮은 수준에서 확보되고 있다.<sup>13</sup>

지난 10년간 얼마의 주민이 기아로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2001년에도 몇 달간의 기쁨으로 인한 기아가 있었다. 독일은 북한의 식량위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앙 뿐만 아니라 경제, 특히 잘못된 농업구조 조정에 원인이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인도적 지원이 북한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으나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점차 경제적, 정치적으로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며

(5.07.2001 (Auszüge)), <<http://www.auswaertiges-amt.de>> (2001.7.5).

13 “Korea/Demokratische Volksrepublik (Nordkorea)”, <<http://www.auswaertiges-amt.de> (Juni 2001)>



‘모든 개방조치가 정상화를 향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sup>14</sup> 대부분의 독일 언론들은 북한이 200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격개혁을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혁·개방의 길로 가기보다는 국가의 재정체계를 좀 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독일은 북한의 철저한 차단정책 때문에 인권상황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북한 탈북자들의 개별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 (나) 북독일 외교관계 수립

2001년 3월 1일 독일과 북한이 대사급 수교를 하였다. 그 배경은 1999년 하반기 미·북 관계의 진전,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의한 북한의 대외개방 의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EU 국가들의 적극 호응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독일이 통일된 이듬해인 1991년 1월 21일 평양의 구동독 대사관은 독일 이익대표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스웨덴이 보호국의 임무를 이양받았다. 동시에 동베를린에 있던 북한 대사관도 이익대표부로 변화되었고 중국이 보호국의 임무를 맡았다. 그 이후 독일과 북한은 외교수준 이하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북한이 경제난에 시달리자 독일은 주로 인도적 지원을 EU 차원과 독자적 차원에서 하였다. EU는 북한의 구조적인 식량난 해결과 인

---

14 “Lage in Nordkorea, Rede von Staatsminister Ludger Volmer vor dem Deutschen Bundestag am 05.07.2001 (Auszüge)”, p. 2.

도적 지원을 위하여 1995~2000년 6월까지 약 1억 8,00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1999년의 경우 독일 외무부는 병원과 사회시설들을 위한 연료, 겨울의복, 이불, 신발, 의약품 등 총 360만 마르크의 대북 지원을 하였다.<sup>15</sup>

한편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3년 간 소위 ‘유훈통치’를 통해 체제를 정비한 김정일은 1997년 10월 당총비서에 취임하였다. 1998년 9월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취임을 앞둔 8월말 북한은 군사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미·북 및 일·북 수교를 위한 외교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는 동북아 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야기하였는데 북한은 1999년 6월 이후 또 다시 사거리 4,000~6,000 km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실험발사 하려고 하였다. 국제사회는 이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미국은 9월 7~12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자제하는 대신 대북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북한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서 클린턴 미행 정부는 페리보고서가 공개된 직후인 9월 17일 「적성국교역법」, 「방산물자법」, 「수출관리법」 등 3개 법에 근거하여 행정부처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 기업의 북한에 대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투자도 허용되었다. 이 결과 9월 25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제54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에 신의 있게 호응할 것이라고 밝혔다.<sup>16</sup>

15 “Staatsminister Volmer ruft zum Dialog zwischen Nord- und Südkorea ohne Vorbedingungen auf”, <<http://www.auswaetiges-amt/de>>. (2000.4.5).

16 신상진 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주변국 협력유도 방안」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99-24), pp. 45-48.

북한이 이와 같이 당시에 대미관계 개선에 적극성을 보이고 대외개방 의지를 갖게 된 것은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2월 25일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북정책의 목표를 두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체제위협을 느끼지 않고 부분적으로 대외개방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 구상 5가지 요소 중 하나는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위한 여건과 환경 조성'이다. 한국은 북한이 안심하고 변화와 개방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마중물·러 등 한반도 냉전과 관련 있는 국가들은 물론 가능한 많은 국가들이 북한과 교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17</sup> 이는 EU 국가들이 북한과 수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2000년 1월 이탈리아가 G7 국가로서는 최초로 북한과 수교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EU 국가들뿐만 아니라 오스트렐리아 및 필리핀<sup>18</sup> 등과도 수교를 하기 위한 전방위의교를 추진하였다.

4월 5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루드거 폴머(Ludger Volmer) 독일 외무부 차관(Staatsminister)과 독일 외무부에서 회합을 갖고 한반도 상황과 양국 관계 문제를 협의하였는데 북한측은 독일 정부에도 수교를 요청하였다. 폴머 차관은 북한의 대량과괴무기 개발과 이미 실험된 미사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이 군축, 비확산 및 핵실험금지조약에 대한 가입을 통해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남북간 직접대화, 4자회담, 일·북 관계정상화 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폴머 차관

17 통일부,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 입장』, pp. 16-17.

18 북한은 2000년 5월 오스트렐리아, 7월 필리핀과 각각 수교를 하였다.

은 북한 당국의 인권존중을 강조하였다. 그는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정의 이행에 대한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북한의 발표를 환영하고 북한이 계속 인권협정들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인도적 지원문제와 관련, 폴머 차관은 “북한에서 공급상황이 매우 나쁘다. 우리는 기꺼이 돕기를 원하나 우리의 지원이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어린이, 노인, 환자에게 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남순 외무상은 베를린에서 이루어진 미·북간 양자협상에 대해 설명하고 최초로 독일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제안하였다. 폴머 차관은 독일정부가 현재 양자관계의 지위를 변화시킬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양국 관계개선은 동북아 지역 긴장완화에 대한 북한의 기여와 남북관계의 개선 정도에 달려있다고 응답하였다. 양측은 대화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sup>19</sup>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5월 오스트렐리아와 수교한데 이어 김대중 대통령과 6월 13~15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였다. 남북관계에 이와 같은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자 폴머 차관은 수교 가능성을 포함한 정치적 대화를 위해 10월 13일 북한을 방문하여 백남순 외무상 및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과 회동하였다. 폴머 차관은 북한측과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고 북한이 선택한 대화와 긴장완화의 길을 계속 나아가도록 북한 지도부에 촉구하였다. 수교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이 군비통제와 군축에 대한, 특히 대량파괴무기와 장거리미사일 문제에 대한 대화에 진지하게 응해야 한다는 점, 둘째, 북한이 남북간 접

---

19 “Staatsminister Volmer ruft zum Dialog zwischen Nord- und Südkorea ohne Vorbedingungen auf”, <<http://www.auswaetiges-amt.de>>. (2000.4.5).

근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 셋째, 북한이 개방을 통해 외국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였다.<sup>20</sup> 독일 대표단은 원조기관인 캡 아나무어(Cap Anamur)와 『독일 세계기아원조』(Deutsche Welthungerhilfe)가 수행중인 프로젝트들을 시찰하였다.

이 방문을 통해 폴머 차관은 북한이 심각한 구조적 경제위기에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북한 관리들은 주민들을 부양할 수 없다고 인정하나 이를 환경재앙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폴머 차관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구동구 경제블럭에 의존하고 있던 북한이 동구권 외해 이후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식량안보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북한에는 향후에도 심각한 구조적 식량위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그는 북한에는 서양인들이 거의 생각할 수 없는 개인송배가 있고 외부세계로부터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어 개혁을 위한 대내적 활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sup>21</sup>

2000년 10월 EU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수교방침을 공식 천명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2001년 1월 29일 EU 의회가 북한과 EU 회원국간의 수교를 촉구한 사실에 대해서도 『로동신문』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라며 반응하였다.<sup>22</sup> 이후 북한은 12월 영국, 2001년 1월 15일 네덜란드, 1월 23일 벨기에, 2월 6일 캐나다, 2월 7일 스페인과 일련의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독일 정부는 광우병 파동으

20 “Staatsminister Volmer zu seiner Nordkoreareise und zum ASEAN-Gipfel-Interview im DLF(Auszüge)”, <<http://www.auswaertiges-amt.de>> (2000.10.19), p. 2.

21 Ibid, p. 1.

22 “급진전 보이는 북-EU 관계”, <<http://www3.yonhapnews.net>> (2001.3.1).

로 인한 자국의 쇠고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축할 예정인 40만 마리의 소 중 20만 마리 분의 쇠고기를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북한측도 철저한 위생검증을 통해 광우병에서 안전한 것이 확인된 쇠고기는 받아들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독일정부는 2월 20일 베를린에서 북한 이익대표부 관리들과 쇠고기 지원 협상을 갖고 쇠고기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① 독립적인 국제구호단체에 의한 지원사업 이행, ② 북한 주민들에 대한 무조건적 분배 보장, ③ 쇠고기 분배를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전문가 검증 등을 요구하였다.<sup>23</sup> 한편 독일정부는 2월 24일 각료회의를 열어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결정하였다. 『로동신문』은 같은 날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정상화가 이룩됨으로써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되었다”<sup>24</sup>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는 독일 외무부 대표단과 김춘국 북한 외무성 구주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간의 수교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에서는 외교관계 수립과 관련한 해당 문건들이 교환되었고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기초하여 양국이 2001년 3월 1일부터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4개항에 관한 의정서도 체결되었다. ① 북한에서 활동하는 독일 외교관과 원조기관의 자유로운 활동보장, ② 원조기관이 원조사업의 진행상황을 직접 관찰할 자유의 보장, ③ 북한내 독일

23 “북한, 독일 쇠고기 지원조건 수용”, <<http://www3.yonhapnews.net>> (2001.3.2).

24 “급진전 보이는 북-EU 관계.”

기자의 활동 편의제공 및 독일기자의 원칙적 입국 허용, ④ 인권, 지역안보, 군비축소,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기술 비확산, KEDO 문제 등 논의.<sup>25</sup> 이로써 독일은 북한의 143번째 수교국이 되었고 북한은 EU 15개국 중 11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다.

북한과의 수교와 관련, 독일 외무부는 “독일 정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을 점차 국제사회로 통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주한 독일대사관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독일 외교안보정책의 중대 관심사에 관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sup>26</sup> 북한 중앙방송은 독·북한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은 자주성의 호상 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에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 발전시켜 나가며 호상 관심되는 문제들에 대한 토의를 심화시켜 나가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게 될 것”<sup>27</sup> 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한국 정부도 3월 2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북한과 독일의 외교관계 수립이 양자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안정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sup>28</sup>고 밝히고 독일 정부가 그간 대북관계 개선 추진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시종 긴밀히 협의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

25 “Beziehungen zwischen Nordkorea und Deutschland”, <http://www.auswaertiges-amt.de> (June 2001); “북한-독일 4개항 합의”, <<http://www3.yonhapnews.net>> (2001.3.2).

26 “Deutschland und Nordkorea nehmen diplomatische Beziehungen auf”, <<http://www.auswaertiges-amt.de>> (2001.3.1); “북한-독일 4개항 합의.”

27 “북한-독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종합 2보)”, <<http://www3.yonhapnews.net>> (2001.3.1).

28 “정부, 북한-독일 수교 ‘환영’”, <<http://www3.yonhapnews.net>> (2001.3.2).

와 함께 북한 농업성은 3월 1일 독일 쇠고기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독일정부가 제시한 3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서 북한과 독일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과 동시에 독일 쇠고기를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도 급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독 북한의 외교관계 수립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독일은 인권, 동북아 지역안보,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기술 비확산 문제 등을 북한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네덜란드와 벨기에에는 주한 대사가 북한주재 대사를 겸임토록 했으며 스페인, 캐나다는 중국주재 대사가 겸임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독일은 직접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함으로써 타국들에 비교하여 유리한 위치에서 북한과 외교협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북한은 EU의 중심 국가인 독일과의 수교를 통해 서방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북한의 대 EU 협력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또한 다른 미수교국과의 수교 협상도 전망을 밝게 하였다. 북한은 독일과의 수교를 통해 당시 진행 중이었던 쇠고기 협상에서도 큰 진전을 보았고 대외개방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었다.

독일과 북한간에 수교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주목할 초대 독일대사에는 여성인 도리스 헤어트람프(Doris Hertrampf)가 취임하였다. 또한 주독일 북한대사 직은 박현보 베를린 주재 북한이약대표부 대표가 직함만 바뀌어 승계하였다. 그는 독일통일 이전인 1980~85년 동독주재 북한대사를 이미 역임한 바 있다.



## (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

현재 독일의 대북정책에서 본질적인 목표는 무엇보다도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의 개발 및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었다가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미·북간 합의가 1994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발표되었다. 이와 관련, 독일을 포함한 EU 외무장관들은 독일에서 개최된 ASEAN-EU 각료 회담에서 이 성명서를 환영하고 미·북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외무장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의무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치될 수 있는 해결책이 찾아지기를 희망하는 한편,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약을 엄수하도록 촉구하였다.<sup>29</sup>

10월 21일 미·북간의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채택되어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하기로 결정되었다. 독일은 EU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통해 KEDO에 기여하고 있다. 1997년 KEDO 회원국이 된 EU는 1996~2000년에 매년 1,500만 유럽통화단위(ECU)의 보조금을 제공하였고 2001년부터는 매년 1,750 만 ECU를 제공하고 있다. EURATOM도 1997년에 KEDO 회원국이 되었는데 2001년까지 7,500만 유로를 제공하였다.<sup>30</sup>

29 “ASEAN-EU-Ministertagung in Karlsruhe vom 22.-23. September 1994”, Dokumente von 1949 bis 1994, p. 1110.

30 “Korea/Demokratische Volksrepublik (Nordkorea)”, <<http://www.auswaertiges-amt.de>> (Juni 2001).

폴머 외무차관은 2001년 3월 31일 베를린을 방문한 최수현 북한 외무상과의 회동에서 양자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는 한편, 북한측에 인권존중, 군축과 군비통제,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 미사일 개발 중지 등을 촉구하였다.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이끄는 EU 대표단의 5월 초 북한 방문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3년까지 미사일 실험유예를 약속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대표단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사일 수출이 교역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보상을 전제로 하는 미사일 수출 중단을 시사하였다. 이에 대해 EU는 “북한이 미사일 판매를 계속한다면 EU와 북한간의 관계는 더 이상 발전될 수 없을 것”<sup>31</sup>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사일 문제에서 북한의 중요한 대화파트너는 미국이나 미·북간 협상이 진척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C8에서 미국과 한반도정책을 협의하고 독일과 EU가 미·북간 협상을 중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 우리춤 농축을 통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다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10월 17일 독일 정부가 과거에 수차례 북한의 비밀 핵개발 가능성을 우려했음을 강조하고 진상공개를 통해 국제적 의무의 준수에 대한 신뢰를 얻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그는 무기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춤 농축 프로그램이 NPT 및 북한이 지고 있는 국제의무들의 중대하고 매우 심각한 위반임을 밝히고 NPT, 「제네바 기본합의문」, IAEA 의무의 명확한 이해를 촉구하였다. 독일 정부는 현재 한반도 안정, 북한에 의한 국제적 의무의 무조건 엄수, 평화적 해결 등에

---

31 “EU, 북 미사일 판매 계속되면 대화 중단”, <<http://www3.yonhapnews.net>> (2001.5.8).

목표를 두고 파트너 국가들과 필요한 조치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sup>32</sup>

#### (라) 북한개방을 통한 경제교류 모색

독-북한간 수교이후 경제, 금융이나 과학 기술 협력에 관한 어떠한 협정이나 합의가 아직 없다. 평양에 있는 유일한 독일의 기업대표는 독일기업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동아시아협회」(OAV)의 현지 대표사무소이다.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은 국제경쟁력 있는 물품이 거의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1990년 이래로 50%이상 감소되었다. 또한 나쁜 국가신용도 때문에 북한의 신용장은 독일은행이나 국제은행에 의해 접수되지 않고 있다. 북한측으로부터 약 2억 마르크의 공식 요구 때문에 헤어메스 수출신용보증금이 차단되어 있고, 약 3억 2,200만 마르크의 대독일 부채는 상황이 유예되었다. 상황이 나이지불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의 대북한 교역은 2001년에 1억 1,670만 유로로서 계속 낮은 수준에 있다(<표 5> 참조).

---

32 “Bundesaußenminister Fischer zu Berichten über ein nordkoreanisches Programm zur Urananreicherung für Nuklearwaffen”, <<http://www.auswaertiges-amt.de>> (2002.10.17).

<표 5> 독일의 대북한 교역추이(1990~2001)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수출	34.7	7.4	82.6	78.1	88.2	61.1	50.9	73.9	22.1	30.9	58.5	91.5
수입	20.7	1.0	134.5	121.4	102.6	58.5	64.2	77.1	27.3	23.4	27.7	25.2

주(1): 단위는 1990~1997년 100만 마르크, 1998~2001년 100만유로이고 1유로는 약 2마르크이다.

주(2): 2001년 수치는 잠정치임.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2002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Wiesbaden, 2002), p. 285; *Statistisches Jahrbuch 1999*, p. 230; *Statistisches Jahrbuch 1996*, p. 239; *Statistisches Jahrbuch 1993*, p. 331.

북한으로부터 독일의 주요 수입품은 광물, 화학 및 약제 원료, 섬유 등이고 북한으로 독일의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기계, 식량, 섬유 부분품, 전자제품, 합성수지, 화학제품 등이다. 북한의 대독일 수출은 북한 총 수출의 5% 이하, 대독일 수입은 총 수입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sup>33</sup>

2001년 6월말 베를린에서는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독-북한간 최초의 협상이 있었는데 독일 정부는 경제교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현재 단지 북한의 개방을 통해서만 독일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될 수 있고 이는 북한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도 급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sup>34</sup>

33 "Beziehungen zwischen Nordkorea und Deutschland", <<http://www.auswaertiges-ant.de>> (2001.6).

34 "Lage in Nordkorea, Rede von Staatsminister Ludger Volmer vor dem Deutschen Bundestag am 05.07.2001 (Auszüge)", p. 2.

## (마) 인권·문화 인도적 지원 정책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독일 정부는 현재는 의미있는 대화가 원칙에서만 가능하나 향후에는 인권에 대해 북한 지도부와 이야기하는 것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폴머 외무부 차관은 평양 방문시 인권문제에 대한 대화에 북한측의 동의를 얻어냈다.<sup>35</sup>

문화면에서는 북한 독문학자 2명이 2002년 전반기에 독문학 연구의 중심지인 「만하임대학교 독문학연구소」에서 3개월간 연구활동을 하였다. 또한 독일과 북한간에 북한 언론인들의 독일 연수와 교육문제가 합의되어 북한 언론인 2명이 「독일 언론인협회」(Journalist Verband) 및 「아테나 워 재단」의 지원 하에 2002년 하반기에 8주간 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

인도적 지원 문제와 관련, 독·한 및 독·조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하트무트 코슈크 (Hartmut Koschyk) 기사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은 5월 초 「세계기아기금」의 주선으로 독일이 지원한 쇠고기의 분배투명성 상황을 확인하고자 방북하였는데 여기에는 독·한 의원친선협회 소속 7명의 의원들이 동행하였다. 이들은 김용순 노동당 비서, 리종혁 조·독 친선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났으며 평양, 남포, 황해남도 벽산군 등을 4박 5일간 둘러보았는데 지원물자의 군사적 오용 우려와는 달리 분배의 투명성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고 한다.

---

35 Ibid, p. 2.

(5) 북-영국 관계

(가) 냉전기 북-영국 관계

전후 영국의 한반도 전략은 깊이 개입하는 것을 회피하면서도, 미국의 동북아정책 및 한반도정책을 지지하는 맥락에서 전개되었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한반도문제 처리에서 미·소의 대결구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무관심한 입장을 보였으나, 냉전의 전개와 더불어 미국의 동북아전략이 명확하게 전개되면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응하는 한반도정책을 전개하였다. 즉, 영국은 강대국 지위의 유지·보존 및 그에 따른 홍콩에서의 국익 확보를 전략적으로 고려하여 미국의 동북아전략 및 한반도전략에 응하는 한반도정책을 전개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영국은 미국의 요청에 응해 상당한 병력을 파견하기도 하였다<sup>36</sup>. 그러므로 냉전시대 영국의 대북한 정책은 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북아 전략과 한영관계의 제약적 틀 내에서 전개되었고, 북-영국 관계는 경제적 분야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이후 냉전이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영국은 1957년에 중국 공산 대륙에 대한 금수완화 조치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도 금수해제 조치를 취해 민간차원의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허가하였다. 1963년에는 「영국 국제무역증진위원회」(British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의 대표인 버저(O. Berger)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대외통상진흥회사」의 대표인 오병익과 민간교역협정을 체결하였

36 황인수, “영국과 북한관계”, 통일연구원 정책간담회 발표논문, 2003.10.15.

고, 1971년에는 「영·조 무역협회」(British Korean Trade Council)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73년에는 11명의 북한 기술자가 영국 GK 철강회사의 초청으로 영국에서 기술 훈련을 받기도 하였다. 또, 1974년에 영국정부는 북한측에 민간투자의 무역사무소(Trade Office)의 설치를 허가하였다.

이처럼, 북·영국 관계는 1970년대에 접어들어 국제환경이 데탕트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경제관계에 국한되었지만, 제약의 틀 내에서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북한은 영국으로부터 1983년말경까지 2,400만 달러를 빌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이 영국에 대한 외채 상황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북·영국 경제교류는 악화되어 점차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나아가 「영·조 무역협회」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되게 되었다.

요컨대 냉전기 북·영국 관계는 정치적 차원에서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접촉은 전개되지 못하였고, 경제적 차원의 교역 및 인적교류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마저도 북한의 외채상환 능력의 취약으로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 (나) 탈냉전기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영국 국교정상화

1990년대에 접어들어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더불어 구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동서냉전체제가 종말을 고하게 되자, 이는 북한의 대외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한은 공산권의 몰락에 따른 국제적 기반의 약화와 경제교류 및 지원 기반의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국가에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와 같은 대서방국 외

교는 유럽에서도 전개되었다. 북한의 대유럽 외교는 2000년 1월초 G-7가운데 최초로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전개되는데, 동년 9월에는 백남순 외상이 유럽 9개국을 순방하면서 국교정상화를 제의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2000년 12월에 영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영국은 미국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햇볕정책의 영향으로 한반도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갖는 등 긴장완화 및 평화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중·러 등 주요국들의 활발한 외교가 전개되자 2000년 11월 마드슨(Mardson) 동아태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여 국교정상화 회담을 갖도록 하였고, 나아가 동년 12월 12일에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 (다) 국교정상화 이후의 북 영국 관계

##### 1) 정치·외교관계

북 영국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영국은 대리대사로 제임스 호어를 임명하고, 2001년 3월부터 공관이 평양에 개설되기까지 서울에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다가 동년 7월 30일 평양에 상주 공관이 개설되면서 현지 근무에 종사하였다. 즉, 영국은 국교수립과 더불어 북한 주재 공관이 개설된 이후 대리대사수준을 유지하다가 2002년 11월에 슬린(David Slinn) 대사의 부임과 더불어 대사급수준으로 승격시켰다. 북한은 런던내 공관 건물 확보의 어려움으로 대사관 개설을 지연하다가 2002년 4월 30일 런던 얼링(Earling) 지역에 개소식을 갖게 되었고, 이시홍 대리대사 등 공관원 3명



으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영 북한대사관의 정상적인 업무는 2003년 9월 이용호 대사의 정식 취임과 더불어 개시되었다.

이처럼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양국의 상주 공관이 개설되고, 아울러 북·영국간의 고위인사 교류도 확대되어 전개되었다. 예컨대, 수교 직후 2001년 3월에 영국 측에서는 외무차관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북한 측에서는 2001년 2월에 지재룡 노동당 부부장이 영국을 방문하였다. 아울러, 최수현 외무부 부상이 2001년 12월과 2003년 4월에 영국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의 증진에 관해 논의하였다. 또한 영국정부는 영국내에서의 북한관료들의 영어 및 인권에 관한 연수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였고, 북한의 3개 대학에 영어교습을 위한 영국인 교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국제문제로 대두되면서 영국은 북한에 대해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는 전략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국제사회의 공조아래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원칙을 표명하면서 2002년 12월에 IAEA 결의안 준수 촉구 성명 및 이와 관련된 항의 메시지를 주영 북한 대사를 통해 평양에 전달하였고, 2003년 1월에는 핵시설 원상회복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영국정부는 2003년 4월 런던 북·영국 외무차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WMD 비확산 및 3자대화 재개, 한국 등 관계 당사국의 참석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2002년 11월에 발표된 「영국-북한 관계 정책검토보고서」에서는 민간차원의 경제활동은 제한하지 않지만,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술협조계획·무역촉진 프로젝트 등 정부차원의 제반 경제활동 및 지원을 중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의 대북 압박정책은 최근 한층 강경해 지고 있다. 예컨대, 2003년 5월 20일 라멜 외무차관은 “북한이 현재의 행동방식을 고집할 경우, 심각한 봉쇄와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

고하였고, 동년 6월 18일 훈(Geoff Hoon) 국방장관은 WMD 확산의 저지를 위해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7</sup>.

## 2) 경제관계

북한의 외채상환 불이행 및 낮은 국가신인도로 인하여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북-영국 경제교류도 점차 정체상태로 악화되지만, 그래도 북한의 입장에서 영국은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1990년대 중후반 영국은 북한의 10대 무역상대국이다<sup>38</sup>. 그리고 나진-선봉 지역의 실행투자 건수를 1997년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화교자본 66.2%, 중국자본 55.8%, 홍콩자본 10.4%, 일본자본 20.8% 등이고, 서구자본으로서는 영국자본이 3.4%이다<sup>39</sup>. 이는 서구자본으로서는 영국의 참여가 두드러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2000년 12월 12일 외교관계 수립이후, 북-영국의 경제교류는 다소 활발해졌다.

북한경제대표단은 유럽경제 운용 연수를 위해 2003년 3월 4일부터 유럽연합의 초청으로 영국·벨기에·이탈리아·스웨덴을 방문하였는데, 3월 12~15일에 영국을 방문하였다. 영국 방문기간 동안, 북한대표단은 중앙은행(Bank of England), 런던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Financial Services Authority), 무역산업성·재무성·외무성 등 경제부처를 방문하

---

37 황인수, 앞의 논문.

38 1998년 및 99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무역상대국 위치를 보면, 제1위 중국, 제2위 일본, 제3위 인도, 제4위 홍콩, 제5위 독일 등이다.

39 『KOREA 북한뉴스레터』 (1998년 10월호).

여 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운용과 관련된 경제계획의 수립, 경제구조,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 등에 관해 연수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수교국기들과 빈번한 경제사절단 교류를 전개하였고, 북·영국간의 교역도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양국의 상호 대사관 개설과 더불어 호전국면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 핵문제가 마·북 갈등을 야기하면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하게 되면서 북·영국간 교역은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재차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표 6> 참조).

<표 6> 최근 3년간 영국-북한간 교역 현황

(백만달러, %)

	2000년	2001년	2002년	02/01 증감률 (%)
북한의 대영수출	4.42	2.05	1.46	-28.57
북한의 대영수입	25.35	40.58	24.80	-38.57

<출처> KORTA 런던무역관(2003.3.21).

(6) 북-스웨덴 관계

(가) 정치·외교 분야

1) 제2차 북핵위기 이전

북-스웨덴 관계는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 발발 이전과 이후로 구별된다. 스웨덴은 북핵위기 발발 이전까지 정전협정과 남북한 긴장완화 지지, 대북 외교관계 격상 등의 정책을 수행하였다.

가) 정전협정 지지

1946년에 유엔에 가입한 스웨덴은 유엔의 활동에 충실히 한다는 입장에서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가장 먼저 한국에 의료품과 야전 병원단을 보냈으며, 1953년 정전직후에는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의 일원으로 한반도의 군

사적 신뢰구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3월 18~21일 엘리야손 스웨덴 외무부 비서장이 중립국감독위원회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정전 협정을 지지한 바 있다. 1973년 남북한과 함께 외교관계를 수립한 스웨덴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군비축소가 실현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2000년 9월 14일 스웨덴 외무장관 안나 린드는 1953년 7월 23일에 단절된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 합의를 지지하였다. 스웨덴 외무장관은 이 철도연결은 2001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지뢰제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녀는 상기 철도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에 공헌하는 단계가 될 것이며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가 되는 시발점이라고 지적하였다.<sup>40</sup>

#### 나) 남북한 긴장완화지지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EU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북한 방문 실현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2001년 3월 스웨덴이 외교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면서 가시화되었다. 3월초 스웨덴 총리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한스 달그렌 외무차관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백남순 외무상 등과 만나 페르손 총리의 방북문제를 협의, 상반기 내 방문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북한은 3월 22일 최수현 외무성 부상을 스웨덴에 파견하여 페르손 총리에게 EU를 대표하여 평양을 방문해 줄

40 “Anna Lindh applauds re-opening of railway l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ress Release, Swed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0.9.14.

것을 정식으로 초청하였다.

EU 정상들은 3월 23~24일 스톡홀름 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안보·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EU의 역할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폐막 선언과 함께 페르손 총리 등 고위 대표단이 5월 2~4일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할 것을 결정하였다. 페르손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과정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시작되어야 하고 한반도의 평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문의 최우선적 목표가 한반도 평화과정을 지원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서방국가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이어서 서울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 방문은 스웨덴이 직접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대화를 촉진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것과 EU가 아시아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는 데서 실현된 것이라 판단된다.

#### 다) 대북 외교관계 격상

스웨덴은 북한보다 먼저 한국과 외교관계를 1959년 3월에 수립하여 여러 방면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 왔다. 1973년 평양에 자국 대사관을 개설한 스웨덴은 2002년 3월까지 북경 주재 스웨덴 대사가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한국에 비해 격이 한 단계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북한외교관의 이편 밀수사건으로 노르웨이가 북한과 단교한 것과는 달리 외교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1997년 5월에 스웨덴 국회대표단이, 1998년 10월에 공산당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보아 스웨덴 정부는 북한과 정치관계 확대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반

해 북한은 1997년 1월 경제대표단을, 1999년 1월 큰물피해복구위원회 대표단을 스웨덴에 파견하여 양국간 경제협력과 홍수피해로 인한 스웨덴의 경제지원을 요청하였다.

2000년부터 스웨덴은 대북 정치관계 강화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3월 18일부터 4일간 스웨덴의 안 엘리아손 외무차관이 1973년 국교수립 후 최고위급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는 바, 이는 2001년 스웨덴이 EU의 순환의장국 직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외교활동의 일환이었다. 방북기간 중 엘리아손 차관은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및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등과 회동, 양국간 및 국제 현안들에 관해 협의하였다. 또한 스웨덴이 원조하는 물품들의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는 한편, 1970년대 이후 북한이 스웨덴에 지고 있는 20억 크로나(2억3천300만 달러)의 부채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0년 11월 스웨덴 외무부 대표단이 방북하였는데 북한 측은 “쌍방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sup>41</sup>고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2001년 5월 평양 방문 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페르손 총리는 EU와 북한과의 수교문제를 비롯해 대북 인도지원 및 경제 지원, 북한의 경제개혁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재 중단 중인 미사일 발사를 2003년까지 유예할 것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개혁 모델을 연구하기 위한 북한의 고위조사단을 같은 해 여름 유럽지역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EU의 입장을 전달했

41 『조선중앙통신』 (2000.11.24).

으며 북한에서 활동 중인 비정부기구의 활동여건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01년 12월 1~4일에는 스웨덴 외무부 정치총국 부총국장 보리에 용그렌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사절단이 방북하여 5월 초에 있었던 페르손 총리의 방북이후 양자관계 발전과 한반도 현안을 논의하였다. 2002년 3월 스웨덴은 평양에 자국대사를 직접 상주케 함으로써 대북 외교 관계를 격상시켰으며 이는 스웨덴이 EU국가 중 독일과 영국이 자국 대사를 평양에 상주시킨 것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EU의 대북 정책과 북-스웨덴 쌍무관계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이었다.<sup>42</sup>

## 2) 제2차 북핵위기 이후

### 가) 북한의 NPT 복귀 촉구

스웨덴은 북한의 핵개발 표명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경쟁과 같이 국제사회 안전에 지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sup>43</sup> 안나 린드 스웨덴 외무장관은 북한의 NPT 탈퇴선언은 한반도의 심각한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역내 여러 국가들이 수년간 한반도의 평화적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북핵 문제를 외교적 대화로 해

---

42 2002년 1월 독일은 서방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에 상주대사를 파견하였으며 당시 스웨덴과 영국도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해 놓고 있지만 대리대사가 대사관을 이끌고 있었다.

43 1998년에 행한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은 냉전종식이후 NPT 체제 유지에 가장 큰 위협이었다. 유엔 안보리는 핵실험을 비난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비핵국가로 있도록 NPT를 준수하기를 촉구한 바 있다.



결하려는 전망을 어렵게 했다고 언급하였다. 스웨덴은 북한의 행동은 국제 사회의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노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북한이 탈퇴 결정을 반복하고 IAEA와 협력을 재개하도록 북한을 설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녀는 북한이 초래한 위기는 가능한 한 빨리 관련 국가들과의 대화와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44</sup>

#### 나) 북한의 국제관계 개선 촉구

스웨덴 정부는 2002년 3월 스톡홀름을 방문한 리광근 북한 무역상<sup>45</sup>에게 북한과의 외교관계 격상은 북한이 세계 기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도울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이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이에 화답하듯 1998년 12월 EU와 제1차 실무급 정치회담을 가진 이래 2002년 6월까지 5차례의 회담을 가졌다. EU는 북한과 인권·대량살상무기·한반도 긴장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현재 북한은 EU와 대화의 정례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할 수 있다.

44 “Anna Lindh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decision to abandon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ress Release, Swed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3.1.10.

45 리광근 북한 무역상은 2002년 3월 9일부터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를 방문하였다.

(나) 경제·사회·문화 분야

1) 제2차 북핵위기 이전

가) 대북 경제협력 증진

1960년대 초 스웨덴은 북한과 민간차원에서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1960년대 말에는 민간친선협회를 결성하였으며 1973년 4월 7일 외교관계 수립을 계기로 11월 북한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995년까지 가시적인 양국간 경제협력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1996년에 가서야 스웨덴은 1월에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공업소유권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합의서는 공업소유권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무료교환과 사절단, 연수단 등의 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며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5년간 유효기간을 지니며 향후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다.

스웨덴-스위스계 합작 다국적기업이자 중전기 및 산업설비 생산업체인 「아세아 브라운 보베리」(ABB: Asia Brown Boveri) 그룹은 2000년 11월에 방북하여 북한의 금속기계공업성 및 전기석탄공업성과 북한 내 배전망을 현대화한다는 「전기기계설비 생산과 전력망 시스템 현대화 협조 합의서」를 북한과 체결하고 전기설비와 발전설비 및 산업설비 개선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2001년 1월 9~16일 ABB 그룹의 헬무트 이르 쉘링거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ABB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에 대표부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sup>46</sup> 3월에는 스웨덴 무역진흥회 한국사무소의 주관으로 스웨덴 기업단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여기에는 SANDVIK

46 평양에 일개 기업의 대표부가 개설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국법인 등 주한 스웨덴기업 5개사가 참가하였다.

5월 EU 의장 자격으로 서구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방북한 이후 스웨덴은 인적교류 등을 통해 대북 경제협력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페르손 총리는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시장개방화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어떻게 선진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지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북한 대표단의 유럽 방문을 초청하였다. 페르손 총리의 방북에 맞추어 5월 1~5일 스웨덴의 트럭 생산업체 스카이나사, SANDVIK, VOLVO, 건설·광산 장비그룹인 아틀라스 코프코(ATALIS COPCO) 등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도 방북하여 북측과 경험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북한의 무역 관계지들과 수송, 전력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002년 3월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의 상주직후 북한은 스웨덴의 대북 경제지원 규모 확대에 관심을 보였으며, 스웨덴은 특히 북한의 광산 채굴과<sup>47</sup> 전력생산 협력 사업에 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3월 리광근 북한 무역상은 경제대표단을 결성하여 유럽 4개국을 순방하면서<sup>48</sup> 스웨덴을 방문, 스톡홀름 대학 경제학부, 민간은행인 노르데아, 트럭제조업체인

47 스웨덴은 국토의 대부분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굴착관련 기술과 기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스웨덴의 기술을 도입하여 북한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국 각지에 땅굴을 파고 군사시설들은 지하에 마련하기 위한 데 사용하였을 것이다.

48 이 대표단은 3월 4일부터 유럽 4개국 순방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방문 목적은 선진 유럽의 경제 운용을 배워 북한 경제에 반영한다는 것과 2001년 EU 회원국과 후속조치 또는 협의를 계속해 양자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표단은 리광근 무역성을 비롯한 경제부처 고위관료 등 모두 12명으로 재정성 김춘섭 부상, 금속기계공업상 안영길 부상, 채취공업성 김광국 부상 등이 포함되어 북한의 대유럽 경제협력 의도를 보였다.

스카니아, ATLAS COPCO<sup>49</sup> 등 스웨덴 업체를 방문하여 스웨덴과의 민간학술교류, 경영실습, 경제협력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북한은 스웨덴에게 1970년대 스웨덴 광산장비 구입으로 인한 채무가 약 1억2천5백만 달러로 인해 그동안 무역관계가 악화되었으나 리광근 북한 무역상의 스웨덴 방문시 북한측 채무변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아 이들 기업의 북한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이리하여 스웨덴은 북한과 2002년 4월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sup>50</sup> 2002년 10월에는 스웨덴 국제공업이사회 대표단이 방북하여 수력 발전소 및 배터리 협력공장의 현대화 문제를 협의하였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는 회사파산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이들 기업들의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02년 6월에 밝힌 KOTRA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조선아연공업총회사」(Korea Zinc Industrial Group)를 설립하여 북한의 아연 생산과 무역 및 수출 독점권을 갖고 아연의 생산 및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같은 해 2월말 이 회사의 사장으로 알려진 조선노동당 중앙위 경제정책검열부 부부장 최관영을 단장으로 하고 이 회사 부사장 및 북한 최대 아연 광산인 검덕광산 관계자 등 5명이 굴착장비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스웨덴의 SANDVIC사 및 스웨덴 현지 철광산 등을 방문하였다. 북한의 아연은

---

49 아트라스 코프코 회사는 스웨덴 굴지의 석유 화학, 전자, 건설 및 광산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공업 장비의 제조·서비스 업체로 한국에 들어와 있다. 과거 스웨덴 산업 부흥이었던 광업, 철강업, 제재, 펄프업의 장래는 매우 어두울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 산업의 대북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판단된다.

50 이 합의서는 김정기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과 스웨덴 국제공업이사회 대표단의 안 발도로프 단장이 서명하였다.

1993년 까지만 해도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비철 금속류의 주요 상품으로서 외화획득의 주 원천이었으나 채굴장비의 노후화, 전력부족 및 이에 따른 품질저하 등으로 인해 아연의 생산과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요약하면 스웨덴은 북한의 대스웨덴 경험모색을 활용해 양국간 경제협력 의정서를 교환하여 경험확대를 모색하였으나 투자실적 뿐만 아니라, 교역 실적도 저조한 상태에 머물렀다. 2001년 기준으로 스웨덴의 대북 수출액은 411만 달러로 주요 수출품은 기계 및 공구류였으며, 수입액은 89만 달러로 주로 가정용 기기를 수입하였다. 다만 2002년 페르손 총리의 방북으로 스웨덴의 대북 투자와 교역이 보다 확대될 전망을 낳았다.

#### 나)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

스웨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실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1995년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자, 북한에 발전원조기금으로 동년에 식량과 의약품을 주종으로 하는 1억 4천200만 크로나(1,656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으며 특히 식량난 완화를 위해 2백5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1997년까지 북한의 식량난 해소 차원으로 약 3200만 스웨덴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1997년에는 약 350만 스웨덴 달러를 지원하였다. 1995~1996년 북한의 홍수와 식량공급 부족을 모니터하기 위해 스웨덴은 스웨덴 국제발전처(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외무부, 유엔 산하 국제기구, 기타 비정부 민간기구들의 북한 정보를 토대로 대북 지원규모를 책정하고 외무부와 스웨덴 국제발전처와 공동으로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스웨덴의 대북 교육지원 사업이 실험적

으로 지속되었다. 스웨덴 정부는 자국의 정부기구와 민간 기구를 통해 북한이 경영기술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지원하였다. 특히 2002년 6월부터는 북한 김일성대학과 인민경제대학 출신 대학생들이 스웨덴에서 2~3개월간 회사 및 사업경영, 행정기술과 경제학 관련 학습을 받도록 하였으며 스웨덴 내 대학교수들이 북한대학에 5개월 동안 상주하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주로 스웨덴국제발전처가 추진한 것이었다.

## 2) 제2차 북핵위기 이후

### 가) 대북 경제협력 정책

2002년 7월부터 추진한 북한의 경제개혁으로 임금과 상품 값이 시장 가격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자유화로 이행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국가의 투자자들은 북한의 핵문제 및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북한 경제가 전면적으로 개방되거나 대규모의 해외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유럽투자자들은 핵문제 외중에서도 북한과 투자 계획 합의를 실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나) 대북 인도적 지원 축소

스웨덴의 2002년 대북 인도적 지원은 271만 1,580달러로 주요 지원국 가운데서 9위를 차지하였으며 2003년 1~10월간 스웨덴은 약 수백만 달러 규모로 유엔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였다. 미국이 가장 많이

한 지원국으로 약 3,100만 달러를,<sup>51</sup> 다음으로 EU는 2,050만 달러, 3번째가 한국으로 1,680달러, 러시아는 1,000만 달러 수준이며 독일, 노르웨이, 호주는 스웨덴 수준에 멈추었다.<sup>52</sup>

#### 나. 민간차원

민간차원에서 EU 지역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EU 개별국가들에 소재하고 있는 정부출연·대학부설·민간연구소와 학자들 및 그 곳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각종 연구소와 학자들은 책의 저술, 언론 기고,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당해 국가들의 대남북한정책과 한반도통일에 대한 입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EU 회원국들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거주국을 통해 우리나라와 거주국의 대북정책과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고려하에 본 절에서는 EU 개별국가내 동아시아 및 한반도문제 관련 주요 연구소·대학부설 한국연구센터·한국어학 과정들과 재외동포들의 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51 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의 24% 수준이다.

52 "ROK's Yonhap: US Largest Donor to North Korea in Jan-Oct Period", FBIS-WEU-2003-1120.

(1) EU내 동아시아 및 한반도문제 관련 주요 연구소

○독일

- \* Germ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DGAP)/Berlin
- \*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tics and Security(SWP)  
/Berlin
- \* Institute of Asian Affairs(IFA)/Hamburg

○영국

- \* The Foreign Policy Centre (FPC)/London
- \* The International Boundaries Research Unit (IBRU)  
/Durham
-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London
- \*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London

○프랑스

- \* Center for International Prospective Studies (CEPII)  
/Paris
- \* Fren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FRI)/Paris
- \* INSEAD Euro-Asia Centre (EAC) /Fontainebleau
-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Relations (IRIS)  
/Paris



○스웨덴

-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Solna

- \* [Swed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SIIA\)](#)/Stockholm

○오스트리아

- \* [Austrian Society for Foreign Poli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GA](#)/Vienna

○덴마크

- \* [Dan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DUPI\)](#)/Copenhagen

○핀란드

- \* Finn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FIIA)/Helsinki

○그리스

- \*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IR)/Athens

○네덜란드

- \* [Transnational Institute \(TNI\)](#)/Amsterdam

○스페인

- \* Research Unit on Securit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UNISCI)/Madrid

(2) 국내외 주요대학 부설 한국연구센터·한국어 과정

○독일

- \* Free University of Berlin
- \* Hamburg University
- \* Humbolt University
- \* Ruhr University Bochum
- \* University of Bonn
- \* University of Regensburg
- \* University of Tuebingen
- \* University of Trier

○영국

- \* Center of Korean Studies, Department of East Asia,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 \*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the University of Sheffield  
/Sheffield
- \* East Asian Studies, Faculty of Oriental Studies, University  
of Oxford/Oxford
- \* University of Durham
- \* University of New Castle Upon Tyne
- \* University of Cambridge

○프랑스

- \* INALCO
- \* Theseus International Management Institute
- \* Universite de Paris VII
- \* Universite du Havre
- \* Universite de Rouen
- \* Universite de Lyon III
- \* Universite de Bordeaux

○이탈리

- \* University of Siena
- \* University Ca'Foscari of Venice
- \* University of Naples
- \* University La Sapienza

○스페인

- \* University of Salamanca
- \* 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

○벨기에

- \* Catholic University of Leuven

○덴마크

- \* University of Copenhagen

○핀란드

\* University of Helsinki

○네덜란드

\* Leiden University

○스웨덴

\* Stockholm University

(3) EU내 재외동포

미·일·중·러 등 전 세계 150여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약 600만에 달하고 있다. 이는 중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 네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외동포들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00만 재외동포 중에서 15개 EU국가 거주 동포는 2008년 7월 현재 약 9만이며 여기에는 거주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 국가들 중에서 우리의 재외동포는 대부분 영국, 독일,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표 7> EU국가 재외동포 현황(2003.7 현재)**

(단위: 명)

영 국	35,000
아일랜드	242
핀란드	94
스웨덴	1,133
덴마크	238
벨기에	516
네덜란드	1,208
룩셈부르크	39
독 일	29,814
프랑스	10,900
이탈리아	5,432
오스트리아	1,618
포르투갈	128
스페인	3,358
그리스	265
총계	90,195

출처: <http://www.hanminjok.net/research/stat/ok6.asp>.

EU국가 거주 재외동포들은 한인회, 학술단체, 한글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인회는 유럽지역 한인회 이외에 영국에 6개, 독일에 1개, 네덜란드에 1개, 스웨덴에 1개, 스페인에 2개, 이탈리아에 1개 등이 구성되어 있다. 재외동포 관련단체로는 유럽 한민족 학자·학술단체·연구소, 유럽 한민족 NGO, 유럽 한민족 경제관련 단체, 유럽 한민족 과학·예술·문화·체육·청년 단체, 유럽 한민족 언론단체 등이 있다. 이러한 재외동포 관련단체는 국가별로 그리스 4개, 네덜란드 12개, 덴마크 3개, 독일 195개, 벨기에 9개, 스웨덴 7개, 스페인 31개, 영국 32

개, 오스트리아 14개, 이탈리아 6개, 프랑스 22개, 핀란드 2개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sup>53</sup> 또한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한인학교는 그리스 1개, 네덜란드 2개, 덴마크 2개, 독일 36개, 룩셈부르크 1개, 벨기에 1개, 스웨덴 1개, 스페인 3개, 영국 16개, 오스트리아 1개, 이탈리아 2개, 포르투갈 1개, 프랑스 6개 등이 있다.

EU지역 재외동포들의 현안과 숙원사항은 북한의 핵개발 중지 및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차세대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유지와 보존 및 모국방문 및 연수기회 확대, 규제완화 등 모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구축, 한상(韓商) 네트워크 등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성화, 현지 한글학교 육성 및 전통문화 보급 확대, 한인화·현지 적응단체와 모국간 상호교류 확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정부의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 문화관광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등이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표 8> 참조).

---

53 <[http://research.hanminjok.net/global/docs/d\\_directory.html](http://research.hanminjok.net/global/docs/d_directory.html)>; <<http://www.hanminjok.net/research/stat/organ5.asp>>.

**<표 8> 재외동포 대상 주요 사업**

주관기관	주요 교류사업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차세대 지도자 워크샵 ○세계 한인회장대회 ○국외입양인 모국문화 체험연수 ○세계한민족문화제전 ○문화예술단 파견사업
문화부	○국제 한민족교류 캠프 ○세계한민족 축전 ○유럽입양 청소년 초청교류 ○각종 재외동포 문화예술 교류사업 지원
교육부	○해외입양인 교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 통일문제 간담회 ○해외 지역협의회 활동

출처: 김신복, “민족문화 교육을 통한 차세대 육성”, 재외동포재단·한민족대표자협의회, 『2008 세계한인지도자 대회』, p. 54 참조.

우리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조국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각종 인적교류 사업, 재외동포 대상 문화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표 9 참조).

<표 9> 재외동포 대상 주요 교류사업

소관부처	주요 사업내용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관련정책 수립 ○재외동포재단 지도감독 - 재외동포사회 발전 및 권익향상 지원사업, 민족문화 및 민족정체성 유지사업, 동포간 교류강화 사업 등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재외한국교육원, 한국학교 운영 및 교사 파견 ○재외동포 학생 단기교육 및 연수 ○재외한글학교 교원 연수 ○재외동포 교육용 교과서 공급
법무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
문화관광부	○세계한민족 축전 등 문화교류 사업 ○한국어 전문가 파견 및 한국어 교사 초청 사업
통일부	○세계 한민족 통일문제 토론회 등 재외동포대상 통일정책 홍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통일지지기반 확충

출처: 김신복, “민족문화 교육을 통한 차세대 육성”, 재외동포재단 한민족대표자협의회, 「2003 세계한인지도자 대회」, p. 55 참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경우, 제11기 국내외 자문위원<sup>54</sup> 수는 14,940명이고 이 중 해외 자문위원은 2,297명으로 68개국의 23개 지역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구주 북부와 구주 남부 지역협의회에 속하는 약 80명 정도의 자문위원들이 EU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해외 자문위원들을 서울이나 현지 주요 도시에 초청하여 해외지역 협의회, 간담회, 강연회 등의 회의를 개최하고 조국의 평화통일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재외동포의 단합과 민족의 내적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자문

54 임기는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이다.



위원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국제사회에 우호적인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을 다짐하고 있다.

EU국가 거주 자문위원들은 타 지역 해외 자문위원들과 함께 2002년 3월 18~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0기 해외지역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북한정세, 대북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위원 정책을 건의하였다. EU국가 거주 자문위원 회장단도 11월 20~22일 서울에서 개최된 민주평통 해외 23개 지역 협의회 회장단 회의에 참가하여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방안’, ‘해외 통일운동 활성화 방안’ 등을 토의하였다.<sup>55</sup>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10월 1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독일·프랑스 학자들 및 해외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과정과 유럽’이라는 주제로 ‘2002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 다. 정책적 고려사항

2004년 이후 EU는 회원국이 15개에서 25개, 인구가 3억 8,000만 명에서 4억 8,000만 명, GDP가 8조 5,000억 달러에서 8조 9,000억 달러, 1인당 GDP가 2만 2,500달러에서 2만 6,162달러, 수출이 2조 65억 달러에서 3조 2,000억 달러, 수입이 1조 9,000억 달러에서 3조 1,000억 달러로 각각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EU에 새로이 편입되는 구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이미 북한과 외교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에 양자

55 <[http://acdpu.go.kr/n\\_news/bodo.bd2001\\_25.htm](http://acdpu.go.kr/n_news/bodo.bd2001_25.htm)>; <[http://acdpu.go.kr/n\\_news/bodo.bd2001\\_03.htm](http://acdpu.go.kr/n_news/bodo.bd2001_03.htm)>

간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이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에서 EU 국가들에 대한 통일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1) 정부차원

먼저 우리 정부는 2004년부터 현재 15개 회원국에서 25개국으로 증가될 EU 회원국의 확대문제에 대한 외교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고 이에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U관련 부처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연구소와 학계 전문가들과의 정례적인 협의를 통해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은 북핵 문제의 우선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공동번영 실현과 동북아 공동번영 추구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EU국가들은 비록 한반도 주변국은 아니지만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 북핵, 남북 및 동북아 경협, 한반도 안정과 평화 문제 등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EU 및 개별회원국들과의 긴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북핵문제의 해결, 북한의 변화와 개방 유도 등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수행의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는 EU를 중개자로 하여 남북한-EU 3자의 관료, 의원들의 모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독 의원친선협회장」인 코쉬크(Koschyk) 독일 기사당(CSU) 의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2003년 11월 초 방북하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는 등 대북 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한반도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독일연방의회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신뢰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의 국회의원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대표를 베를린에 초청해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지는 제안을 하고 있다.

북한외교에 있어 스웨덴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스웨덴의 대북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북 스웨덴 관계 증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스웨덴이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관계개선, 한반도 비핵화 등을 지지하도록 하고 핵문제가 해결된 경우 경수로사업 재개에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북핵 위기가 해결되면 우리 정부는 동북아에서 핵에너지와 핵연구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대체에너지, 환경, 원자로안전 분야에서 협력을 위해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와 유사한 「동북아원자력공동체」(NEATOM)의 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남북한과 EU는 EURATOM의 사례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EU측에 중개자 역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경제공동체와 동북아경제공동체 및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형성을 위해 남북한과 EU 3자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EU 사례를 공동연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EU시장 진출 확대와 마케팅 능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EU시장에 대한 수출확대는 국내적 통일역량 증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일통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한 통일의 경우에도 북한 경제를 회복 발전시키는데는 엄청난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2003년 3월 작성된 「EU시장 수출확대방안 조사보고서」에서 EU가 전 세계 수입시장의 36.4%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시장이지만 EU 지역에서 우리 상품의 점유율은 2000년에 1%에 불과했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일본은 3.7%, 중국은 2.6%, 대만은

1.1%를 각각 차지하였다. 같은 해 우리 상품의 점유율이 전 세계 수입시장에서 2.7%, 미국 시장에서 3.3%, 일본 시장에서 5.4%, 중국 시장에서 10.3%임을 감안하면 EU시장 내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과 함께 상품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EU회원국별 시장 규모 및 점유율 수준 등의 분석을 하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등 지역을 우리 상품 수출을 위한 우선 공략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상품의 전시회 개최, EU 개최 박람회에 대한 참가지원 강화, 사회·문화 분야 교류를 통한 상호유대 강화 등이 필요하다.

1990~1999년 시기에 통일부로부터 주독일 대사관에 파견되었던 통일주재관은 방대한 양의 독일통일 관련 주요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 연구소, 언론, 국회 등의 독일통일 관련 업무를 측면 지원했었다. 또한 독일의 정부관리, 연방의회 의원, 언론인 등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인사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였다. 주독 통일주재관이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것은 상기와 같은 성과를 감안할 때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도 독일통합 과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독일통일을 평가한 보고서, 책자 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통일주재관을 주독 대사관에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의 대북정책은 대동아시아 정책 및 대미 전략적 공조의 틀에서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의 북·영 관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의한 북·미간 갈등으로 다소 정체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핵문제를 비롯한 북·미간의 주요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경우, 북·영간에는 재차 활발하게 교류가

진개될 수 있다. 이 경우, 영국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개혁·개방과 관련된 경제교류 및 지원 등에 적지 않은 외교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국은 미·영 동맹이 미국의 세계전략의 핵심 기반인 만큼 북한과 관련하여 미국은 물론 EU 국가들에게도 외교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럽에서는 독일과 함께 가장 중요한 통일외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주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여론의 형성과 관련하여 대영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정보기관의 교류 강화, 해당부처 국장급 수준 실무급 관료들의 정책협의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영 의원연맹 등을 조직·강화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스웨덴은 군축문제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며, 18개국 군축위원회에 중립국 대표로 참가하여 NPT의 타결에 공헌한 바 있다. 그리고 EC의 안정과 스웨덴의 EC내 역할 강화에 노력한 바 있으며 EU 정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비핵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스웨덴을 위시한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북한의 핵사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전협정의 남북한 평화협정 대체 시 중립국감독위원국인 스웨덴이 주축이 되어 남북한 평화조약 문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 스웨덴의 경제교류는 아직 그리 활발하지 않다. 스웨덴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북한과의 무역은 연간 5,000만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투자진출 분야도 한정된 부문이다. 이는 1970년대 중반에 형성되었던 북한의 대외채무상환 불이행과 투자관련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1년을 기점으로 스웨덴은 기존의 대북외교 관심사항이었던 핵문제 등 정치적 사안에서 점진적으로 북한과의 경험문제를 논의하고 있

다. 특히 스웨덴은 대북 투자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고 북한의 선진 경영기법 연수를 지원하고 있어 한국은 스웨덴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스웨덴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협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광산 채굴, 수송, 전력생산 등에 대한 스웨덴의 투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은 이들 분야에 대한 투지에 공동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관련 지역의 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민간차원

민간차원에서 한국의 국제적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EU국가 내 해당국 민간인과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을 구별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기업들이 EU에 수행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

첫째, EU국가 거주 언론인, 학자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접촉을 통해 EU내 지한 및 친한 인사를 확대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세력 확대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와 함께 중요한 것이 EU 국가내 동아시아 또는 한반도문제 관련 연구소, 주요대학 부설 한국연구센터와 한국어 과정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북한과 한반도문제 관련 저널이나 보고서들이 발행되고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EU 회원국들 중에서 이러한 기관들이 많이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연차적으로 다른 국가들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을 비롯한 국책기관들은 분야별로 EU내 주요 연구기관들을 선정하고, 이들과 정기적인 정보교환, 정책연구 성과의 교환, 국제학술지 공동기고, 전문가 교

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부터는 EU 회원국이 동구국가들로 확대되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회복이 빠른 폴란드, 체코, 헝가리 소재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동구국가들은 북한과 오래전부터 외교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정부는 한국을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와 베를린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 주간’의 주빈국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독일국민들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국민들에게 한해 내내 한국을 문화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한국문화 소개뿐만 아니라 EU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의 전체 해외동포 600만 명 중에서 EU국가에 거주하는 해외동포는 9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EU의 증대하는 국제정치·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제적 통일역량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의 해외동포 정책은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재단」, 교육인적지원부의 「국제교육진흥원」, 문화관광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승격시켜 업무의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EU지역 거주 해외동포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접촉을 통해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의 해외한민족 포털사이트인 Global Korean Net

Work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U국가 거주 2~3세 해외동포들은 우리의 국제적 통일역량 구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역군들이기 때문에 EU국가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에 대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독일과 영국 등 EU의 중심 국가들은 21세기 동북아 경제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동북아와 동남아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21세기 동북아 경제중추(hub)로서 발전을 추구하는데 주요한 과제인 외자유치를 위해 이 국가들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경련이나 대기업의 주요 민간연구소, 금융기관 등은 ‘한국의 21세기 동북아구상과 남북경협을 EU 주요 국가들의 금융기관, 무역단체, 주요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스웨덴 외무부산하 스웨덴 국제발전처와 한국 국제교류재단과의 연례회담과 상호방문을 통해 양 기관간의 친목을 다지는 한편, 북한이 참여하는 경협, 학술, 문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스톡홀름대학 아태연구센터, 스톡홀름 경제대학 등과 한국내 KDI와 통일연구원과의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북한 학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스톡홀름 경제대학은 현재 북한의 김일성대학, 인민경제대학 학생들의 스웨덴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웨덴 학자들이 상기 북한대학에 경제 및 경영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스웨덴 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도적 지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민간단체가 이들 단체들과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는 경제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오세아니아 지역

### 가. 지역개관

#### (1)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는 대양(大洋)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대양주라고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 오세아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멜라네시아·미크로네시아·폴리네시아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태평양 지역의 섬을 뜻한다. 좁게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멜라네시아·미크로네시아·폴리네시아 지역을 의미한다.

오세아니아의 수역(水域) 면적은 약 7000만km<sup>2</sup>에 이른다. 그 안에 1만 개 이상의 크고 작은 섬이 산재해 있다. 그 중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를 제외한 좁은 뜻의 오세아니아 섬의 총면적은 약 100만km<sup>2</sup>이나, 뉴기니섬이 약 80만km<sup>2</sup>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여러 섬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470만 명이고, 인구밀도는 5명/km<sup>2</sup>로 아주 낮다. 인종으로는 멜라네시아인·미크로네시아인·폴리네시아인 외에 유럽인·중국인·인도인·일본인 등이 있고, 그 밖에 상당수의 혼혈인들이 거주한다.

오세아니아의 여러 섬은 근세 이후 유럽인들에 의해 발견되었고, 스페인·네덜란드·영국·프랑스·독일 등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적도 이북의 모든 섬들이 미국의 신탁통치령이 되었다. 1962년 서(西)사모아가 독립한 이후 나우루·통가·피지·파푸아뉴기니·솔로몬·투발루 등이 독립국가가 되었다.

오세아니아의 섬들은 대부분이 남회귀선과 북회귀선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열대기후 지역에 속한다. 적도의 북쪽 지역은 북동무역풍의 영향을 받고, 남쪽 지역은 남동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바람받이 지역과 바람의 그늘 지역은 강수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하와이 제도의 북동쪽은 북동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연 강수량이 4,000~7,000mm에 이르나, 남서쪽은 연 강수량이 750mm이하로 매우 적다. 해양성 기후는 일년을 통해 기온 변화가 크지 않으나, 무역풍·해류 등의 영향으로 기후의 지역차가 생긴다.

오세아니아의 원주민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피푸아인·멜라네시아인·미크로네시아인·폴리네시아인 등 여러 종족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은 아시아대륙에서 말레이·인도네시아 뉴기니를 거쳐 이주해 온 사람들로 인종적으로는 오스트랄로이드에 속한다. 특징은 곱슬머리에 털이 많고, 피부색은 암흑색이다. 현재도 수렵과 채집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석기시대 생활을 하고 있다.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보호정책을 쓰고 있으나 별로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태평양에 산재하는 크고 작은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오세아니아가 세계사에 등장한 것은 ‘지리상의 발견시대’ 이후부터이다. 이 지방의 원주민은 이주 오래 전부터 해상으로 민족이동을 전개하여 복잡한 확산과 민족교류를 계속하여 유럽인들이 나타나기 수세기 전에 멜라네시아·미크로네시아·폴리네시아로 대별되는 현재와 같은 분포를 완성했었다. ‘지리상의 발견’ 이후의 오세아니아는 구미 선진 여러 나라에 의한 발견·탐험·정복·식민·개발 등 열강 상호간의 쟁탈 대상으로서의 역사였다. 17세기 초 이후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는 뉴기니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북안과 서안을 탐험했고, 특히 1642~43년에 A.J.타즈먼은 태즈메이니아와 뉴질랜드와 함께 통가·피지 제도 등도 발견했다.

17세기 후반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 지역에 진출하여 1769년 이후

10년간 3차례에 걸쳐 영국의 쿡이 남태평양을 탐험하였다. 쿡의 항해를 계기로 유럽 여러 나라들은 학술조사의 색채가 짙은 탐험을 주로 하였다. 동시에 태평양 제도에 대한 유럽 여러 나라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점차 여러 섬에 대한 영유화가 시작됨에 따라 자원개발·무역·어업·식민·선교활동 등이 활발해졌다. 네덜란드의 뉴기니섬 서부(이리안자야) 병합(1828)에 이어 프랑스는 마르키즈 제도 병합(1842), 타히티섬·소시에테 제도의 보호령화(1842), 누벨칼레도니섬 병합(1853), 로열티 제도 병합(1864) 등을 잇따라 단행하였고, 독일의 진출도 적극화되어 갔다.

이에 자극을 받은 영국도 피지섬 병합(1874)을 계기로 식민지 개척에 뛰어들었으며, 미국도 19세기 중엽부터 중국 무역과 포경업 등을 위해 중부 태평양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구미 제국은 무역·군사·교통상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오세아니아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멜라네시아에서부터 폴리네시아의 중부 서부까지, 프랑스는 남부 폴리네시아·누벨칼레도니 방면에 세력권을 굳혔다. 식민지 개척에 뒤진 독일도 마셜 제도에서 뉴기니 방면을 차지하게 되었고, 미국도 하와이 제도에서 괌·필리핀으로 세력을 뻗고 사모아섬으로까지 남하하였다. 19세기에 오세아니아는 열강의 식민지 분할의 무대가 되었으며, 구미인들은 그곳에서 상품작물의 플랜테이션을 개발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식민지는 일본·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위임통치령이 되었고, 일본의 남방 진출이 적극화되자 태평양전쟁이 일어나 태평양 전역은 전쟁터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패전으로 미국이 태평양 방면에 전면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1962년 뉴질랜드의 신탁통치령이었던 서사모아가 독립을 이룩하면서 나우루·통가·피지·파푸아뉴기니·솔로몬·투발루 등이 잇따라 독립국가가 되었다.

오세아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제외하면 산업·경제 발달이 크게 뒤져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목·수산업 중심의 제1차 산업이 주산업을 이루고 있고 근대공업의 발달은 미약하다.

## (2) 호주

호주의 정식국명은 Commonwealth of Australia이다. 호주는 동경 113°9'~153°39', 남위 10°41'~43°에 위치해 있다. 면적은 총 7,682,300km<sup>2</sup>로 한반도의 약 35배, 알라스카를 제외한 미국본토 면적과 같다. 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에 이어 6번째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동서 약 4,000km, 남북으로는 약 3,680km에 달한다. 인구는 2003년 10월 기준으로 2000만명을 돌파했다. 주요 도시로는 시드니(408만), 멜번(346만), 브리즈번(162만), 아들레이드(109만), 캔버라(31만) 등이 있다. 인종은 앵글로색슨이 80%, 기타 유럽 및 아시아계 18%, 원주민(aborigines) 2.0%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는 서부 40%와 북부의 80%가 열대성이며, 나머지는 온대성 기후로 전반적으로 온화한 대륙성 기후를 띠고 있다. 그러나 육지의 30%가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는 정반대로 4계절 봄(9-11월), 여름(12-2월), 가을(3-5월), 겨울(6-8월)이 뚜렷하다. 지형은 오래되고 평균 해발 300m이하 (최고 Kosciusko산 2,228m)의 평탄한 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평균 강우량은 465mm(전국적으로 100mm-2,000mm 분포) 정도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목축업은 양모 생산에서 세계 총생산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토의 59%가 농목지로 그 중 약 90%가

방목지로 되어 있다. 양모 수출은 오스트레일리아 총 수출액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밀도 생산량의 1/2 이상을 수출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광물 자원이 풍부하여 금·납·아연·석탄 등이 개발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보크사이트·철광·구리·니켈·석유·우라늄 등이 발견되어 세계적인 주요 광업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매장량이 15억에 달하는 카펜테리아만 주변의 보크사이트 생산은 세계 최대다.

호주 대륙은 오랫동안 다른 대륙과 분리되어 있어 여타 대륙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동·식물군이 진화되어 있다. 특이동물로는 캥거루, 코알라, 오리너구리, 듀공, 포섬 등이 있으며, 특이조류는 이뮤, 바우어버드, 쿠카 부라 등이 있다. 특이식물로는 유칼리나무(고무나무), 외틀 등이 있다.

종교는 기독교 73%(영국성공회 23.9%, 천주교 26.1%, 연합회 7.6%)로 가장 많고, 무종교 25%, 기타 2% 정도다. 국가형태는 입헌군주제를 취하고 있으며,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는 Elizabeth 2세 영국 여왕이다. 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는 “Advance Australia Fair”로 모든 공식 의전행사시 사용된다.

호주는 국가의 상징으로 특정 식물, 동물 또는 새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나 국가 문장에 황금빛 외틀, 캥거루 및 이뮤가 있어 전통적으로 이들이 호주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가색채는 초록색과 황금색이다. 수도는 캔버라(Canberra) (원주민어로 “만남의 장소”라는 뜻)다. 사용언어는 영어이며, 화폐단위는 Australian Dollar다.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다.

호주의 주요 역사는 다음과 같다.

- 1788.1.26 Arthur Phillip 함장의 Endeavor호 시드니 도착
- 1901. 1 연방정부 수립 및 연방의회 설치 (멜번)
- 1903 여성참정권 인정
- 1904 1차대전 참전
- 1908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창당
- 1915 터키 Galipoli 상륙일 (ANZAC 기념일)
- 1919 국민당 발족 (Australian National Party)
- 1924 의무선거제도 채택
- 1927.7 연방정부 및 의회를 연방수도로 선정된 캔버라로 이동
- 1939 제2차 세계대전 참전
- 1944 자유당 (Australian Liberal Party) 발족
- 1950.9 한국전 참전
- 1951.9 ANZUS 방위조약 체결
- 1956 멜번 올림픽 개최
- 1967 호주 최초 인공위성 발사; OECD 가입
- 1971 영연방 5개국 방위협정체결
- 1973 백호주의정책 폐지
- 1975 인종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 제정
- 1977 호주 민주당 창당
- 1993 원주민법(Native Title Act) 제정
- 1996.3 Howard 총리 제1기 취임
- 1998.2 공화제 논의를 위한 헌법회의 개최

1998.10 Howard 총리 제2기 취임

1999.11 국민투표에서 공화제안 부결

2000.9 시드니올림픽 개최

호주는 역사적으로 영국, 미국 및 서유럽과의 관계 긴밀화를 추구하는 한편, 아시아 및 남태평양지역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국제적으로 군축, 난민, 인권 및 국제무역의 자유화 등 건설적 진보적인 정책을 개발·추구하고 있으며 유엔 및 전문기관의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는 안보 등 제반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농업정책상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요 무역상대국이다.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안보 성명을 통해 호·미 안보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1996.11. 클린턴 대통령의 방호, 1997.6. 및 1999.7 Howard 총리의 방미를 통해 관계 긴밀화를 도모해 왔다.

EU 등 서유럽 국가와는 공통된 문화, 역사적 연관에 기초하여 우호 관계를 긴밀하게 하고 있다. 1997.6. 호·EU간 관계 공동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정치·교역·경제 문제에 관한 협의 약정을 마련했다.

일본은 호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일본과는 국제문제에 대한 보완적 이해와 인식을 기초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97년 양국 총리의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및 지역적 문제에 관해 partnership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관계 진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1999년 7월 Howard 총리의 방일로 양국관계 발전 도모한 바 있다.

중국과는 1972년 외교관계 수립이래 고위층의 정기적 상호 방문 실현시키고 있다. 중국은 호주의 중요한 시장으로 문화, 과학기술, 농업, 항공,

교육 등 분야의 협정 체결로 제반 협력 증진하고 있다. 1997년 3월과 4월 Howard 총리의 방중, 주룽지 부총리의 방호로 관계가 긴밀화되었다. 양국은 인권, 영사, 군축문제 등 협의 채널 설치 및 공동 경제 각료위원회의 활성화에 합의했으며, 1999년 9월 장쩌민 중국 주석의 호주방문으로 양국 관계 강화 기반을 조성했다.

### (3)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정식 국명은 뉴질랜드(New Zealand)다. 정부형태는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총리는 Helen Clark(여)다. 수도는 웰링턴(인구 38만)이며, 종교는 성공회, 기독교, 카톨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약 4,036,000명(2003.12월)이며, 인종은 유럽계(69.6%), 마오리 원주민 (14.5%), 아시아계(6%), 폴리네시아인(5.6%) 및 기타(4.3%)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총 27만km<sup>2</sup>로 남한의 2.7배다. 북섬이 11.6만km<sup>2</sup>, 남섬은 15.1만km<sup>2</sup> 정도된다. 기후는 해양성 기후로 1월 평균 20℃, 7월 평균 11℃를 유지하고 있다. 화폐단위는 New Zealand Dollar다.

뉴질랜드의 정치체제는 입헌 군주국이다. 국가원수(Queen of New Zealand)로서 Queen Elizabeth 2세 영국여왕이 뉴질랜드 여왕을 겸하고 있다. 그러나 여왕은 뉴질랜드 각의의 제청에 따라 임명되는 임기 5년의 총독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현 총독(Governor-General)은 Dame Silvia Cartwright(2001년 4월 4일 취임)이다. 뉴질랜드는 의회 민주주의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1852년 영국 의회가 The New Zealand Constitution Act를 제정한 이래 뉴질랜드 의회 민주주의의 기



초가 되었다. 영국 여왕이 국가원수로 되어 있으나, 거의 모든 권한이 뉴질랜드 의회에 이양되어 있으며, 국정을 영국식 의원내각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성문 헌법은 없으며 New Zealand's Constitution Act 1986 이외에 영국 법률 (Imperial Acts)과 역사적인 성문법 (Magna Carta, Habeas Corpus Act 1679 등)이 주재국 헌법의 역할을 수행한다. 동 영국법률들은 뉴질랜드 국내법인 Imperial Laws' Application Act 1988에 열거되어 있다.

의회(Parliament 또는 House of Representatives)는 단원제 및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총 의석수는 120석 (지역구 69석, 전국구 51석)이다. 영국식 소선거구제에서 1992년 9월 및 1993년 11월 국민투표를 거쳐 현행 지역·비례혼합 대표제(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약칭 MMP)를 도입하였다.

정당별 의석 구성(2002.7.27 총선 결과)은 노동당(Labour Party): 52석, 민당(National Party) 27석, 뉴질랜드 제일당(NZ First) 13석, ACT당(ACT NZ) 9석, 녹색당(Green) 9석, 통합미래당 (United Future) 8석, 진보연합당(Progressive Coalition) 2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조직은 의장(Speaker) Jonathan Hunt (노동당), 사무총장 (Clerk of the House) David McGee와 14개 상임위원회(Select 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sup>56</sup>

---

56 Commerce, Education and Science, Finance and Expenditure, Foreign Affairs, Defence and Trade, Government Administration, Health, Justice and Electoral, Law and Order, Local Government and Environment, Maori Affairs, Primary Production, Regulations Review, Social Services, Transport and Industrial Relations

뉴질랜드의 외교정책은 ① 호주 및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강화 ②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과의 전통적 유대관계 유지 ③ ASEAN 및 APEC 제국과의 협력증진 ④ 세계무역 자유화 촉진 ⑤ 세계 평화유지 활동에 능동적 참여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주요국과의 관계를 보면 호주는 정치·안보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국가로 간주, 연례 총리회담 및 반년마다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군사안보협력을 위해 CDR(Closer Defence Relations) 유지 및 연례 국방장관 회의 개최하고 있으며,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CER(Closer Economic Relations)을 강화하고 있다. 남태평양 도서제국에 대해서는 매년 South Pacific Forum 정상회담 참석 및 역내 환경보존을 지원하고 있으며, 호주와 함께 동지역에 대한 경제 개발원조사업 등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세안 제국과는 PMC, ARF, AFTA/CER합동회의 등 아세안과의 정치·안보·무역면에서, 다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5국방위협정 (FPDA)에 의한 뉴질랜드, 호주, 영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간 연례 합동군사훈련 참여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 대해서는 한국, 중국 및 일본과의 경제, 통상 관계의 중요성이 날로 점증하는 한편, 정치·군사 협력에 대한 뉴질랜드의 이해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제 2위의 무역 상대국이며 정치·외교·국방 등 모든 방면에 있어서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1985년 2월 미핵추진법의 입항을 거부하고 1987년 반핵법 제정에 따른 ANZUS(호주, 뉴질랜드, 미국 안전보장조약) 체제를 동결하기도 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아프가니스탄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등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한 바 있다. 미, 영의 대이라크 전쟁은 UN결의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 여왕이 뉴질랜드 국가원수로서 전통적인 특별 유대관계

지속하고 있으며, 아직도 적지 않은 뉴질랜드인들은 모국과 같은 감정 유지하고 있다. 대유럽 관계에서는 전통적 유대관계 강화, 특히 유럽시장에 대한 수출확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군사협력 관계를 보면 1991년 이후 뉴호 공동방위관계(CDR)가 강화되어 왔으나, 1999년 노동당 집권후 공군 및 해군력 증강 계획이 잇달아 보류됨에 따라 호주와의 지역 공동방위 개념이 약화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되고 있다. 군병력은 총 9,097명(해군 1,893명, 육군 4,580명, 공군 2,624명)이며, 국방예산은 약 16억 뉴불(01/02회계년도, GDP의 1.1%)에 달한다. 최근 국방정책 동향을 보면 외국으로부터의 침공위협이 비교적 적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 해외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위한 수송기, 다목적함, 경장갑차 등의 무기 구매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정치 정세는 1999.11.27 실시된 총선 결과 당시 야당이었던 노동당이 전체 투표의 39%를 차지하여 30%를 얻은 국민당을 누르고 선거에 승리했다. 이는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노동당을 선호함으로써 지난 90년 이후 9년째 계속 집권해 온 국민당의 네번째 정부구성 기도를 좌절시킨 결과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Helen Clark 노동당수는 중앙집권적 형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정국을 운영하고 있다. Clark 총리는 연립여당인 연합당이 이념과 정책갈등으로 분열되고, 경제활황, 실업률 하락 등으로 노동당에 대한 지지도가 꾸준히 50%를 상회하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의회를 해산하고 2002.7.27 조기 총선을 실시했다. 2002.7월 총선에서 집권 노동당은 전체 120석중 52석을 획득, 목표 하였던 과반수 의석 획득에는 실패하였지만, 진보연합당과 연합, 노동당 주도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재집권에 성공했다. 통합미래당과는 각의

에서 예산 표결 및 신임투표시 지지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으며, 녹색당과도 사안별 정책협조를 약속했다.

뉴질랜드는 2002년도 4.4%의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민간소비지출증가, 이민유입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활성화, 2001년~2002년초에 있었던 뉴달러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03년에는 세계 경제침체에 따른 부정적 영향, 2002년 중반부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뉴질랜드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출 감소, 유제품 등 제1차 상품의 국제시세 하락,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SARS로 인한 관광산업의 위축 등으로 성장률이 저하됐다. 2003년 2월 뉴질랜드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2002년 4/4분기 실업률은 4.9%로 1988년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3년 3월말 현재 5.0%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성장둔화로 5~5.5% 대의 실업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의 대외정책은 대외무역증진, 외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개발촉진을 위해 선진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남태평양의 비핵지대화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나 자국의 안보와 관련하여서는 신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57</sup>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 국가들 간의 모임(African, Caribbean, Pacific Leaders: ACP)에 적극 참여

57 1995.9.~1996.1.간 남태평양지역에서 실시된 프랑스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으며, 1996.3. 휘지정부, 미·영·프랑스 정부의 남태평양 비핵지대(SPNFZ) 의정서 서명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남태평양지역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미국 핵적재함의 기항도 허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고 있으며, 2002년 7월 Nadi에서 개최된 제3차 ACP 정상회의(총 78개 회원국 중 21개국 정상, 25개국 각료급 인사 등 총 55개국 600여명의 대표단 참석)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상기 회의에서 뉴질랜드는 EU가 ACP 국가들에 대해 기존의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대신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추진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ACP 국가들간의 내부단합을 도모하고 EU측에 특혜관세의 유지를 촉구했다. Pacific Islands Forum(PIF), Pacific Community(PC), South Pacific Applied Geoscience Commission(SPAGC) 등 남태평양 지역협력기구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 지역내 주도적 역할과 영향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표 10> 뉴질랜드의 주요 경제지표**

부 문	지 표
GDP (2002년)	1,170억 뉴불(약 500억 미불)
경제성장률 (2002년)	4.4%
실업율 (2003년 4/4분기)	4.4%
CPI 상승률 (2002년)	2.7%
환율 (2003년 12월)	1 뉴불 = 약 0.64 미불
인구 증가율 (2002년)	0.44%
세입 (2002/2003년)	559억 뉴불
세출 (2002/2003년)	545억 뉴불
수출 (2002년)	297억 뉴불
수입 (2002년)	323억 뉴불

자료: 외교통상부

#### 나. 호주·뉴질랜드의 전략적 가치와 한반도 중요성

호주·뉴질랜드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세계정치 및 경제질서에 있어 호주·뉴질랜드의 위상과 역할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해 그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의 세계화시대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국제환경의 조성은 필수적이며, 이런 점에서 호주·뉴질랜드를 비롯한 오세아니아 지역국가들의 친한국적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호주·뉴질랜드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 그 중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신국제질서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체 위상변화

호주 뉴질랜드는 세계화 국제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외교안보 및 경제이익을 위한 개방적 인식을 바탕으로 신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역내 국제기구와 대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체적인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지역안보포럼(ARF) 등, 지역안보와 국제적인 현안에 참여하는 형태를 통해 신국제질서 창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여년 동안 호주 정부는 호주형 북방정책(Looking North)을 통해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태국과의 쌍무적인 외교 군사 양자 실무회담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태지역을 중시하면서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호주의 '아시아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근간으로 5개국 방위협정을 통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긴밀한 안보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첫째, APEC의 핵심국가로 위치하고 있다. APEC은 호주의 제안과 한국의 적극 지원으로 1989년 출범했다. APEC은 21개 아시아 태평양 연안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이 지역 무역자유화와 경제협력 문제를 중점 논의하는 협력체다. 뉴질랜드도 APEC의 창립멤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태평양 지역국가의 정부-민간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비정부 부문의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에도 참여하고 있다.

둘째, ASEAN과도 정치·경제적인 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다. ASEAN

은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등을 상대로 자유무역을 확대해 나가려는 확산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아세안은 매년 한중일 3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대화 파트너로 초대하여 자신들의 위상과 역할을 홍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뉴질랜드는 ASEAN과 2010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ASEAN에서의 호주와 뉴질랜드 발언권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뉴질랜드는 아시아지역의 유일한 다자안보기구인 ARF의 창립 멤버의 일원으로서 지역안보 문제에도 참여하고 있다. 2000년 태국의 방콕에서 개최된 ARF총회에서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과 뉴질랜드의 필 고프 외무장관은 양국간 외교관계의 수립에 관한 논의를 통해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음을 볼 때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영향력 행사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넷째, 호주 또한 아시아-태평양 외교의 변방에 머물던 아시아권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활동무대로 삼고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려는 대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호주는 9·11테러이후 부시대통령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에 적극 협조하면서 북핵 사태 등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sup>58</sup> PSI는 2003년 5월 31일 부시 미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협조체제로서 이에 호주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호주 근해에서는 미국 주도로 테러선박 나포를 위한 국제 군사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호주군의 병력수가 5만4천명에 불과하지만 제1·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걸프전, 9·11 이후의 아프가니스탄 작전, 그리고 제2차 이라크전에 전투병을 파병했다. 2003년

58 『중앙일보』, 2003.9.25.



10월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호주의회연설을 통하여 “미국과 호주가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사람과 자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증하고 자유와 민주이념을 향상시킬 특별한 책임이 있다”면서 “미국은 아시아 주둔을 지속하고 호주와의 파트너쉽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sup>59</sup> 호주 존 하워드(J. Howard) 총리는 아권으로부터 미국의 대외정책 노선에 지나치게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나, 호주의 입장에서 국제안보 질서 유지에 동참하는 것이 호주의 국가이익에 직결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바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호주는 북핵 문제를 포함, 한반도의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호주와 뉴질랜드는 남태평양지역의 지도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호주는 뉴질랜드와 더불어 1971년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 PIF)을 결성하여 남태평양의 맹주로서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특히 탈냉전 이후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약화됨에 따라, 역내 안보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호주는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APEC을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의 발전에서 소외지역으로 남아있다는 인식하에, PIF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또한 도서국가의 자산인 천연자원(임업, 광업, 수산업)에 대한 남획문제에 공동 대응할 것을 주창하고 도서국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1년중 호주는 역내 최대 협력국가인 뉴질랜드와 새로운 사회보장협정에 합의하고 CER(Closer Economic Cooperation)을 바탕으로 양국 경제협

59 『연합뉴스』, 2003.10.23.

력 심화를 도모하는 한편, 역내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CER을 통하여 양국은 일부 민감한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자유무역을 천명하였다.<sup>60</sup> 2003년에 들어와서도 호주는 PIF 모임에서 역내테러위협 제거와 치안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채택하게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호주의 존 하워드 총리는 이 지역이 무수한 섬으로 이루어진 소국들이 많아 비교적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과 무기밀수업자, 마약 거래업자들의 천국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문제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sup>61</sup> 요점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영연방의 일원이면서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 자세를 전환, 아시아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한국의 장기적인 이익과 통일역량 강화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잠재력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한국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인식,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경제적인 파트너로서의 중요성

호주는 범세계적 무역자유화가 국익 추구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다자, 지역 및 양자무역 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에 적극 참여해 왔다. 호주국익에 있어 최대 핵심지역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기본전략은 1994년 APEC 정상회의시 채택된 Bogor 선언을 구체화시키는데 있다. 동 선언에서 각국 정상들은 역내 무역자유화를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 단계

60 양승윤 외, 『오세아니아-동남아의 가장 가까운 이웃』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3), p. 120.

61 『세계일보』, 2003.8.17.

적으로 실시키로 하되,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의 지역경제협력의 일환으로 호주는 뉴질랜드와 “Closer Economic Partnership”을 수립했으며 싱가포르, 태국 등과 FTA 협상개시 및 일 중과 경제협정체결 교섭에 합의하였고 한국과도 좀더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이 대외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는 국제농산물 교역의 자유화를 대외통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으며 Cairns Group의 리더로서 WTO 무역협상에서 각종 농업보조금 제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호주정부가 농업문제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WTO 도하라운드의 협상 진전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도 대두되고 있으나, 대다수 개도국이 농업국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문제의 해결없이는 WTO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주정부는 다자간 무역협상과 더불어 양자간 무역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바, 호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국가와도 FTA 협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FTA가 WTO 협상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호주가 체결을 검토중인 FTA는 WTO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추진중이며 이러한 취지의 FTA를 싱가포르와 태국과 협상 중에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협상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대외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는 국가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원조 예산으로서 총 ODA 규모만 하더라도 17억 2,500만불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6% 증가한 액수로 GNP 대비 0.25%로서 2000년 OECD/DAC 회원국 평균인 0.22%를 상회하고 있다. 호주는 대외원조 목표를 가난을 구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두고 있다.<sup>62</sup> 이와 같은

움직임은 대북한 개발원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두기에 충분하다.

---

62 “to advance our national interest by assisting developing countries to reduce poverty and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표 11> 2000년 호주 대외 원조 지원 내역

	구분	내역	금액
지역별	남태평양 국가	- 파푸아 뉴기니지역개발사업 지원(3억 4,290만불) - 기타 남태평양도서국가 지원(1억 6,460만불) · 휘지 민주화 지원 및 솔로몬 아일랜드 평화정착과정 지원	5억 7,500만불
	동남 아시아	- 인도네시아 민주화 정착, 빈곤퇴치, 지속경제개발지원 (1억 2,180만불) - 동티모르교육, 지원, 보건 등 분야(1억2,180만불) - 베트남(7,330만불) - 필리핀(6,350만불) - 중국(5,600만불)	5억 516만불
	서남 아시아	- 방글라데시(3,700만불) - 인도(2,050만불) - 스리랑카(1,100만불)	9,200만불
	중동 아프리카	- 팔레스타인 난민정착지원(350만불)	8,590만불
글로벌 지원	종합개발 은행	- ADB(1억 1,200만불)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1억 3,518만불) -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150만불)	2억 6,10만불
	인도주의 차원	- 긴급난민 지원(8,560만불)	8,560만불
	부채경감	- IMF의 HIPC 부채경감 계획(5,500만불) - 니과라과, 에디오피아 대호주 부채전액 탕감(1,150만불)	6,650만불
NGO	협력사업	- AusAID-NGO 협력사업 지원(2,670만불) - 지원 봉사대 지원(1,330만불) · Australia Youth Ambassadors for Development Program	4,530만불

자료: 외교통상부

호주 뉴질랜드와 한국간은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 우선 이들 지역이 한국과 교역량을 꾸준히 증대시키고 있는 점에서 경제적인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호주는 한국의 7위 교역상대국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호주의 4위 교역상대국에 해당, 양국간의 교역이 양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sup>63</sup> 더구나 양국간의 교역이 공산품과 농산품의 교역과 같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호주에서 개최된 2003년도 한-호 각료급 경제통상공동위원회에서 호주의 마크 베일 무역장관은 “호주의 연구개발력은 한국의 자금력과 좋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sup>64</sup>는 주장을 한 바 있다.

### (3) 한반도 외교적 관심 지역으로서의 중요성

탈냉전이후 북한은 전방위 외교의 일환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이들 지역 국가들과 수교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호주(2000.5.8)와 뉴질랜드(2001.3.26)와 순차적으로 수교하게 됨으로써 이들 지역에서 남한의 외교적 경쟁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외교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2003년 정권수립 55주년 기념일 행사에 호주 대표단을 초청한 바 있으며, 호수에 거주하고 있는

63 『YIN』, 2003.9.26.

64 『연합뉴스』, 2003.9.24.

재외동포들의 북한방문도 적극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sup>65</sup> 이런 점에서 볼 때 오세아니아 지역이 한국 일변도의 외교관계에서 벗어나 남북한의 새로운 외교적 경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외교적 동향에 대응하면서 이들 지역에서의 국가목표 및 국가이익을 관철해야 과제가 부여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전반적인 외교안보와 통상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 주변 4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서방 선진 7개국(G-7)에 못지않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북한이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하려는 것은 외교력 강화와 경제적 지원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된다.<sup>66</sup>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면서 북한외교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천재홍 호주주재 북한대사는 북한정부가 호주정부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sup>67</sup> 북한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의 농업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sup>68</sup>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듯 북한은 2003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호주의 국경일(Australia day, 1.26)에 “현존하는 쌍무 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맞게 계속 좋게 발전돼 나가리라고 확신한다” 는 내용의 축전을 보내는 한편, 홍성남 총리도 호주의 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하워드 총리에게 위로전문을 보내는 등 활발한 외

65 『연합뉴스』, 2003.9.8.

66 『연합뉴스』, 1999.7.27.

67 『연합뉴스』, 2003.2.12.

68 현재 북한과 호주 사이에는 농업 연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놓고 있다.

교를 전개하고 있다.<sup>69</sup>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 동북아와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창출에 대해서도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바, 향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호주는 지난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테러로 88명이 희생당한 것을 계기로 반테러 전쟁을 위한 아시아 역내국가들과의 유대강화를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있다. 전 세계 안보위협 대상 국가의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는 한편, 북핵 문제 제기 이후 대북 지원을 통한 관계개선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sup>70</sup>

또한 호주는 1996년부터 기술원조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2,800만 호주달러를, 2000년 5월에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하면서 KEDO에 1,780만 달러를 제공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2000년 11월에는 다운너 호주 외무부장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백남순 외무상에게 양국관계에 대한 호주의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안보 및 핵미사일문제에 대해서도 호주의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이 호주와 뉴질랜드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일정한 국제적 역할을 담당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기여할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교력을 과시하면서 국가적 위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 고려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양국간에는 핵 및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의 포기, 남북대화의 진전, 인권상황 등과 같은 다소 불편한 당면현안이 놓여

69 『연합뉴스』, 2003.1.28.

70 2003년도에는 176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2003.11.20.



있다는 점에서 급속한 관계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질랜드의 필 고프 외무장관은 지난 2002년 11월 북한당국이 핵계획을 폐기할 때까지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그는 “뉴질랜드는 대북 원조 규모가 작은 나라이지만 북한이 핵 비확산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 한 대북지원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sup>71</sup>을 밝힌 바 있다.

호주는 북한의 핵문제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하여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는 바, 로버트 힐 호주국방장관은 “우리는 국민들을 굶주려 죽게 까지 하는 한 궁핍한 나라를 지켜보면서 그 나라가 안보적 위협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sup>72</sup> 이에 따라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유일한 방안임을 주장하였다. 호주는 북핵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대북 식량지원을 지속, 지난 1995~99년간 총 1,950만 호불(약 1,287만 미불)을 지원한 바 있다. 2003년에도 11월 현재 176만 불을 지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 다. 대호주·뉴질랜드와의 관계 현황 및 전망

##### (1) 호주

##### (가) 정치·군사적 관계

71 『조선일보』, 2002.11.11.

72 『연합뉴스』, 2003.11.15.

## 1) 외교정책 기초

21세기 들어 주목할만한 호주 변화의 특징은 현존하는 국제질서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국제화 세계화를 도모해 나가는 가운데 역동적인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호주는 호주를 서구와 아시아 지역을 연계하는 중간거점으로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분리되어 있고 인종적으로도 백색인구가 많은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하더라도 아시아로부터의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아시아속의 유럽’을 지향하면서 유색인종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전후 국제환경 변화와 함께 ‘아시아속의 일원’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즉, 호주의 아시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는 양자관계에 기초한 쌍무주의를 외교관계의 기본 틀로 삼고 외교통상전략과 국내경제의 강화를 연계시키는 총체적인 접근방식의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지역에 대한 외교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ASEAN국가와의 포괄적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양자관계 및 ARF와 같은 다자관계를 활용하여 아태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대미관계를 중시하면서도 아시아지역에 대해서는 아시아 우선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sup>73</sup> 다시 말해 호주

73 『연합뉴스』, 2003.10.15. 노동당 출신의 키팅 전 총리는 “20세기가 미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에 앞서 아시아와의 관계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키팅 전총리는 APEC의 강력한 지지자로 지난 1996년 존 하워드 총리에게 총리직을 넘겨주기 이전까지 친아시아정책을 추구했다. 그러나 후임 하워드 총리는 미국을 지지하면서 이라크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국방 및 무역에 있어 아시아

는 양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활동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2003년도 외교백서를 통해서도 미국과 유럽 등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아시아 역내국가들과의 유대강화를 새로운 대외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다.<sup>74</sup> 그리고 대미관계의 제고를 통한 안보강화 및 아태국가와의 안보협력의 강화를 통하여 자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려는 데에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호주정부는 테러리스트들이 호주를 테러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인식하고 테러리즘을 격퇴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의 장기적인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호주는 지역안보 다자간 협의기구로서 Asian Regional Forum(ARF)를 중시하고 있는 한편, ASEM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 2) 대한반도 관계

한국과 호주의 교류는 1889년 호주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양국관계는 해방이후 호주의 유엔한국임시위원회의 참여와 한국전 참전을 통하여 긴밀한 사이를 형성했다. 1961년에 들어와서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보다는 미국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책노선을 추구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74 『세계일보』, 2003.2.12.

한국·호주간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889 최초 호주 선교사 파한이래 주로 영남지역에서 선교활동 전개
- 1905 호주 선교사, 진주에 진료소 설치 운영
- 1930년대 일제 식민지하 선교사 연 40여명 유지
- 1948 호주대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COK) 구성원으로 총선거 실시 및 정부 수립에 기여
- 1949 호주대표, 유엔한국위원단(UNCOK) 구성원으로 참여
- 1948.8.15 호주정부, 대한민국 정부 승인
- 1950.5 호주정부, UNCOK 결의에 의한 군사감시위원 2명 파한
- 1950.9 호주군 한국전 참전
- 1950.9.23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에 호주대표 파견
- 1953.3 주시드니총영사관 개설
- 1961.10.30 외교관계 수립 합의
- 1962.1.23 총영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총영사관 폐쇄)
- 1962.6 주한 호주대사관 설치
- 1966.2 대사관 캔버라 이동
- 1970.6 주시드니총영사관 재개설

호주의 대한반도정책은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의 증진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정책노선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는 호주의 국가발전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실리적 인식에 기초하여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호주는 한반도가 4대 강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곳으로서 한반도의 안

보는 아태지역 안전과 평화 및 호주의 번영과 직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평화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호주는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의 주둔을 통한 역내 안정의 확보를 추구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동시에, 한반도의 정전체제 유지 및 4자회담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KEDO 활동에도 지원, 1995년 5월 일반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1,500만호불을 지원했다.

1996년이래 한국과 호주간에는 정기 연례 한-호주 정치군사협의회가 개최되고 있다.

한-호주 정치 군사협의회는 양국 외교 국방담당 고위관리들이 참석한다. 본 협의회를 통해 중장기 외교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세계전략 환경, 한반도 및 동남아 정세와 역내 군사동향을 포함한 지역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논의하는 한편, 다자안보 및 국제 비확산 군축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치 군사협의회는 탈냉전시대에 포괄적 안보 개념의 보편화 추세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회의 형태로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간 안보 인식의 공유에 기초, 양국간 협력제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역내 안보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2003년 7월에는 한-호주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1961년 수교이래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와 호주의 한국전 참전<sup>75</sup> 이후 50여년간 맺어온 전통적 유대를 바탕으로 제

75 호주군의 6.25 참전은 1950.6.29. 미국에 이어 2번째로 결정되었다. 1950년

반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21세기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관해 논의하고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노 대통령은 호주가 한국전 참전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온 것을 평가하고 「평화번영정책」의 취지와 남북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하워드 총리는 동북아 지역에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호주에게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상에서 볼 때, 호주의 대한민국 정책은 기본적으로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실리적 인식 확대에 기초하여 한 호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양국관계 다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7년 9월에 발표된 호주의 외교백서에 의하면 한국은 호주의 가장 중요한 4개국(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중요국가로 분류해 놓고 있다. 향후 양국관계는 양국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료급 접촉을 확대하고, 한국의 안보 지원을 위한

---

9월 28일 호주 육군 제 3대대 부산에 도착했다. 1951.4.24.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군이 가평에서 중공군을 격퇴(제 3대대 가평전투기념일 행사)한 바 있다. 참전 병력은 육군: 2대 대대 및 지원부대 10,657명, 해군: 항공모함 1척, 구축함 2척 4,507명, 공군: 1개 전투기 대대 2,000명 등 총 17,164명이었다. 사망자는 339명(281구는 부산 유엔국립묘지 안장), 전상자: 1,216명, 포로는 29명이었다.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안보문제관련 양국간 정치·군사협의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EDO 지원을 통한 지역안보 기여하는 한편, 축산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시장접근을 촉진하고 서비스 분야, 특히 교육 및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의 교역 개방 추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양국간 문화 교류 및 관광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다.

한편, 호주와 북한과의 관계는 1974년 7월 30일 호주 Whitlam 노동당정부가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에 1974년 12월 30일에는 주호주 북한대사관이 개설(캔버라)되었으며, 1975년 4월에는 주북한 호주대사관 설치(주중국대사가 겸임)되었다. 그러나 1975년 10월 30일 북한은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관련 결의안(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시 서방측안 찬성, 공산측안에 반대)을 둘러싼 호주측 비협조에 대한 불만표시로 주호주 북한 대사관을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동시에 주북한 호주대사관에 대해서도 48시간내 철수를 요청함으로써 1975년 11월 6일 이후 호주-북한간의 외교관계가 중단된 바 있다. 그 후 1999년 6월 태국 및 2000년 2월 평양에서 호주-북한간 관계정상화 회담 개최, 2000년 5월 8일 양국관계 재개결정 발표(비상주공관)한 바 있다.

호주의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은 북한을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주는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호주는 북핵위기 이래 북한지역을 방문한 최초의 서방권 국가일 정도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호주는 북한과 서방권 국가들과의 대화통로, 또는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호주는 북한과 주요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5+5

형태의 '10개국 포럼'을 통한 지역안보 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sup>76</sup> 여기서 말하는 10개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국과 남·북한, 일본, 호주, 유럽연합의 5개국을 지칭한다. 호주 다우너 외무장관은 “호주는 북한이 핵 무기개발 야심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려는 국제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에 좋은 위치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sup>77</sup> 2003년 1월 북한을 방문, 백 남순 외무상과 최수헌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sup>78</sup> 이어 호주 외무부의 머레이 맥린 북 아시아 담당 제1차관보는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호주와 북한과의 대화를 매우 유익하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sup>79</sup> 호주는 북한이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고 있다는 입장을 미국과 외부세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 (나) 경제적 관계

한국과 호주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2년을 기준으로 교역규모는 약 83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호주 총교역의 약 6%를 점하는 규모다. 한국은 호주의 4대 교역국(수출 3위, 수입 7위), 이자, 호주는 한국의 8위 교역국(수출 14위, 수입 5위)이다.

대호주 무역수지는 원자재 수입으로 매년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76 『연합뉴스』, 2003.3.3.

77 『연합뉴스』, 2003.1.14.

78 『연합뉴스』, 2003.1.22.

79 『연합뉴스』, 2003.1.17.



있다. 한국으로서 호주는 일본, 사우디에 이어 제3위의 무역적자국(약 35억 달러)이다. 수출은 2002년 24억불로 자동차, 무선전화기, 컬러 TV, 합성수지가 주종을 이루었던 반면, 수입은 59억 달러로 석탄, 원유, 철광석, 알미늄이 주종을 이루었다.

2003년 1/4분기 대호 수출은 가전 및 IT제품 호조로 18% 증가한 반면, 수입은 2% 증가에 그쳤다.

<표 12>한국의 대호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

구분	2000		2001		2002		2002.1-4		2003.1-4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교역 규모	8,565	20.7	7,707	-10.0	8,313	7.9	2,582	23	2,736	6.0
수출	2,606	7.4	2,173	-16.6	2,340	7.7	679	0.3	801	18.1
수입	5,959	27.5	5,534	-7.1	5,973	7.9	1,903	3.1	1,935	1.7
무역수지	-3,352	-	-3,361	-	-3,634	-	-1,225	-	-1,134	-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표 13>주한국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불, %)

2001			2002			2003.1-4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승용차	342	-32.1	금	347	6.0	무선전화기	99	131.1
금	328	1.7	승용차	316	-7.6	승용차	91	-23.3
무선전화기	256	-17.5	무선전화기	214	-16.0	금	85	-24.4
에어컨	64	55.3	에어컨	72	11.4	칼라 TV	28	53.9
합성수지	58	-6.2	칼라 TV	70	42.3	합성수지	28	53.9
총 계	2,173	-16.6	총 계	2,340	7.7	총 계	801	18.1

※ 자료 : KOTIS (MII 4단위)

<표 14> 한국의 대호주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불, %)

2001			2002			2003.1-4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유연탄	902	11.1	유연탄	1,008	11.8	유연탄	334	-6.3
원유	857	-18.5	원유	892	4.2	원유	296	-2.1
금	719	-30.1	금	722	0.4	금	180	-17.9
철광	596	37.5	철광	538	-9.7	철광	172	4.6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334	-12.6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339	1.4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17	16.3
총 계	5,534	-7.1	총 계	5,973	7.9	총 계	1,935	1.7

※ 자료 : KOTIS (MII 4단위)

한편, 호주의 대한민국 투자는 2003년 3월말 누계 기준으로 5.2억불로 총투자유치액의 0.6%에 지나지 않는다. 투자업종은 주로 금융, 부동산 등 서비스업이 거의 대부분(93%)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투자기업은 맥쿼리 은행(금융), 오세아니스(수족관), 텔스트라(통신) 등이다.

**<표 15> 한·호주 투자동향**

(단위: 백만불(건), 총신고수리기준)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1-3	총 누계
대호주(건수)	54(17)	123(26)	11(16)	54(17)	5(3)	2,459(257)
대한국(건수)	276(14)	79(29)	24(32)	2(23)	100(3)	518(169)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

- 주) 1. 2003년 대호주투자는 2003년 1-3월까지 누계  
 2. 2003년 대한국투자는 2003년 1/4분기까지 (분기별 업데이트)  
 3. 대호주투자의 총누계는 1988년부터 2003년 -3월까지 누계  
 4. 대한국투자의 총누계는 1982년부터 2003년 1/4분기까지 (분기별 업데이트)

**<표 16>업종별 대한국 투자동향(2003.3월말 누계)**

	금액(백만불)	건수	비중(%)
제조업	345	49	6.7
서비스	483.6	120	93.3
- 건설	106	3	2.0
- 금융	133	11	2.6
- 부동산	166	3	32.2
계	518	169	100.0

자료: 외교통상부

반면, 한국의 대호주 투자는 2003년 3월 말을 기준으로 246억불에 달하고 있다. 호주는 한국의 제5위 해외투자대상국이다. 한국의 대호주 투자는 자원개발 위주 투자로 광업(석탄, 아연, 철광)이 총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투자지는 포스코(5.5억불), 고려아연(1.6억불), LG(1.4억불), SK(1억불) 등 광산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표 17>연도별 대호주 투자동향

년도	'68-'98	'99	'00	'01	'02	'03.1-3
투자금액	2,212	53	123	11	54	5
건수	178	17	26	16	17	3

자료: 외교통상부

한-호주간 경제관계는 향후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 양국은 상호보완성을 감안, 경제·통상 등 실질 협력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한국 자동차와 같은 고가품목의 대호주 수출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호주의 연간 수출의 40%가 동북아를 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열어 가는데 두 나라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한국이 2005년, 호주는 2007년 각각 APEC 정상회의 의장국임을 감안, 21세기 아태지역의 공동번영 및 평화안정을 위해 APEC, ARF 등 역내 다자 협의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사회·문화적 관계

1997년 9월 발표된 호주의 외교백서에 의하면 호주는 한국을 가장 중요한 4개국(미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은 중요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를 아시아지역의 4대전략 언어로 채택하여 70여개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sup>80</sup>

한-호주 수교 이래 양국간 체결된 주요 협정은 다음과 같다.

- 1965.9 무역협정 (1975.6 개정)
- 1971.5 문화협정
- 1979.5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정
- 1982.7 이종과세방지협약
- 1983.11 어업협정
- 1990.9 범죄인 인도조약
- 1992.2 항공협정
- 1992.8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
- 1992.9 상용복수시증발급 각서교환
- 1993.6 산업기술협력 협정
- 1995.7 취업관광(working holiday) 비자 발급 협정
- 1997.8 핵물질 재이전 교환각서 (97.11.14 발효)
- 1999.9 과학기술협력협정 서명
- 1999.9 전자상거래 양해각서 서명
- 1999.9 자원협력 양해각서 서명
- 2000.1 민사사법공조조약

한국은 1999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수반으로는 처음으로 뉴질랜드와 호주 국민방문, 이를 계기로 마련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차원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호주-뉴질랜드와 우호 협력관

계를 확대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우리의 우방, 특히 호주와 같이 적극적인 열의와 실천력이 있는 나라가 기회있는 대로 북한과 접촉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 호주가 남북대화의 중재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sup>81</sup>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태지역의 안보가 자국의 정치, 경제 안정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하에 한국이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2001년 10월 30일로 수교 40주년을 맞은 한 호 관계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강화되었다. 2001년 5월 Downer 외교장관의 방한, 7월 한 호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방한, 2001년 10월 성공리에 마무리된 한 호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 11월 Peter Beattie 퀸즈랜드 주총리 방한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히 발전되었다.

2003년 7월 한국을 방문한 하워드 총리는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 공동관심을 가졌거나 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나라들이 보다 가깝게 서로 협력해 공통의 주제를 찾아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03년 7월 한호주 정상회담에서도 서비스 분야, 특히 교육 및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의 교역 개방과 함께 양국간 문화 교류 및 관광 확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한국과 호주 사이에는 다양한 성격의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있다.<sup>82</sup> 한 호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양국관계의 다원화에 초점을 두고 한 호재단의 설립<sup>83</sup> 및

81 『연합뉴스』, 1999.9.17.

82 <<http://www.australia.or.kr/>>

83 호·한재단은 한 호관계 증진을 위하여 1992년 5월 호·한재단설립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호주 외무부 산하 재단으로 설립되었으며 재원을 비롯한 모든 지원을 호주 정부로부터 받으면서 호주내 한국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

호주주간행사 등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는 한국 주민의 이민 선호국이자 유학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을 비롯, 매년 20만명 정도의 한국인이 방문할 정도로 지역적 가치가 높다.

1970년 이전에는 소수의 유학생 및 콜롬보 계획 장학금 수혜공무원, 유학생 등 50~60명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3년 Whitlam 노동당 정권의 백호주의 폐지 후, 지질학자, 헬리콥터 조종사, 교사 등 소수의 전문 기술자가 이민, 통 이민 체류자는 100~200명 수준이 되었다. 월남 패방 직전인 1974년부터 과일 기술자 500여명이 Whitlam 정권의 비자 간소화 정책에 의거 관광비자로 대거 입국 1975년부터 총 1,000명 이상의 이민이 거주하게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1976년 사면령에 의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한국내 가족을 초청했다. 동 사면령 이후 남미 체류자 및 중동 취업 근로자들이 계속 입국했다. 1980년 사면령에 의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가족을 초청한 사람은 약 6,000명에 달하게 되었다. 1980년 이후에는 입양, 가족초청 이민, 취업, 투자이민, 유학 등으로 이민이 급증, 1986년 정부터 총 10,000명 이상으로 이민자수가 증가했다. 1990년대부터는 호주 경제침체에 따른 이민 쿼타 감소 및 이민심사 강화, 한국경제 수준의 상대적 상승과 역이민 증가 등으로 이민자수는 감소되었으나 1998년 이후 한국의 경제위기 여파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국의 외무부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한 호재단을 설립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표 18> 호주 교민 현황**

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2000	2001	2003
교민수(명)	60	1,200	5,645	8,644	35,158	43,400	47,227	59,940

자료: 외교통상부, <<http://hanminhok.net/research/stat/ik3/asp>>. (2003.10.8).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약 80%가 시드니 중심의 N.S.W. 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기타 멜번, 브리스번, 퍼스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한인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호주의 ‘아시아화’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학교교육에서의 아시아권 언어교육을 들 수 있다. 중등학교에서 한국어도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과 함께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지난 1988년에서부터 1995년까지 8개 대학에서 한국학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주 한국학 학자들은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지난 1994년 대양주한국학협회(KSAA)를 설립하여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호주가 이처럼 ‘아시아화’에 적극적인 것은 아시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호주정부의 국정백서(white paper)에 의하면 향후 15년간 국제환경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로 세계화와 동아시아의 부흥을 전망, 아태지역을 1차적으로 무역의 교 대상국으로 정하고 이익증대를 위한 상호협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84</sup>

84 『문화일보』, 1999.8.25.



## (2) 뉴질랜드

## (가) 정치·군사관계

## 1) 외교정책 기조

뉴질랜드는 유엔활동에의 적극 참여를 통해 인류의 번영과 공존, 공영에 이바지하며 아울러 평화와 안정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추구에 적극 동참하여 선진국으로서의 도덕적 의무를 수행할 것을 주요한 외교적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sup>85</sup>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도 풍부한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국민소득(2002년도 현재 14,949 US\$)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sup>86</sup> 다만, 부존자원에 의존한 1차 산업의 발전전략을 지속하고 있어 제조업의 기반이 취약하고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경제적 불안정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대외정책으로는 호주 및 태평양 도서국가들과의 협력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영국 및 영연방국가들과의 전통적인 유대관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1993-94년 기간 중에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피선되어 소말리아 보스니아 모잠비크 등 세계 분쟁지역에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을 주도하는 등 국제평화유지에 적극 참여하였다. ASEAN과 APEC을 통한 다자적인 방식을 통한 협력증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최초의 여성총리인 클라크총리(Helen Clark)는

85 양승운 외, 『오세아니아』 (2003), p. 297.

86 『세계국별편람』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 2003), pp. 56-57.

중앙집권적이고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클라크총리가 이끄는 뉴질랜드의 노동당은 1999년 11월 총선에서 집권 국민당을 꺾고 승리하였다. 노동당 정부는 이전 국민당 정부와 차별적인 정책의 도입을 시도함으로써 국내적 이해관계의 대립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F-16기 전투기 도입 계획의 취소와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법안의 도입은 야당을 비롯한 각 이해집단들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유발시켰다. 클라크총리는 확고한 당내 리더쉽과 함께 강력한 야당의 부재라는 반사이익을 이용하여 정치적 안정을 계속 확보하는 가운데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2) 뉴질랜드의 대한반도정책

뉴질랜드는 49년 7월 뉴질랜드가 한국을 승인한 이래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외교적으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1950년 12월에는 한국전쟁에 육, 해군을 파병한 바 있다.<sup>87</sup> 이어 1962년 3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이 후 1971년 6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이 개설(Richard Nottage 대사대리 부임)되었다. 이어 1971년 7월 주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개설(박영 대사대리 부임)되었다.

지난 1999년에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 양국간에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

87 뉴질랜드는 한국전 당시 연인원 6,020명을 파견하여 45명이 사망·실종되고 81명이 부상당하는 희생을 치렀다.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01년 3월 뉴질랜드는 북한과 수교했다. 뉴질랜드-북한간 수교에 대해 한국 정부는 환영하고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뉴질랜드의 대북한 외교관계 수립이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었다. 이어 David Taylor 주한 뉴질랜드대사는 2001년 9월24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을 방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국가원수)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다. Phil Goff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월2일 테일러 대사의 방북시 뉴질랜드 정부는 ① 최근 북한의 남북관계 및 대미, 대일 관계 개선 노력을 환영하고 가능한 지원을 하겠으며, ② 북한이 군축, 신뢰구축 등 한반도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③ 북한이 IAEA의 사찰 일정에 가능한 빨리 합의해야 할 것과 ④ 최근 북한의 경제제도 변화를 환영하지만 북한이 보다 시장경제적인 제도를 도입해야만 양국 통상관계 증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뉴질랜드는 한국의 대북한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KEDO와 대북한 식량원조에도 참여하고 있다.<sup>88</sup> 2003년 7월에는 헬렌 클라크 총리가 방한하여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국제통상분야의 협력 등에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관계를 ‘실질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03년의 정상회담에서는 주한 뉴질랜드대사가 북한을 2번이나 방문하여 북한을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이 거론되면서 한국측이 감사의 표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sup>89</sup> 뉴질랜드는 대북 관계

88 뉴질랜드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에 230만 달러를 기여했다.

89 『연합뉴스』, 2003.7.28.

에 있어서 한국측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관계개선을 모색한 바 있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클라크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지지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에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명하였다.

한·호 정치군사협의회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뉴질랜드간에도 정기적으로 정치 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뉴질랜드 정치·군사협의회(Pol-Mil Talks)를 통해 양측은 중·장기 외교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국제전략 환경, 한반도, 동북아 및 동남아 정세와 역내 군사동향을 포함한 지역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논의하는 한편, 다자안보 및 국제 비확산 군축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또한 한·뉴질랜드 정책협의회(Foreign Ministry Consultation)를 개최하고 있다. 본 정책협의회를 통해 양국의 외교정책,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 지역정세, ASEM, APEC 등 지역협력문제 및 양자관계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나) 경제적 관계

한·뉴질랜드간의 교역구조를 보면, 한국은 뉴질랜드로부터 1차산품(주로 농산품)을 수입하고 2차산품을 수출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철강제품, 화학제품, 직물, 유류제품, 가전제품, 고무, 플라스틱제품 등이며, 뉴질랜드로부터의 주요 수입품목은

원목, 알루미늄괴, 가죽, 농축산품, 유기화학, 수산물, 종이제품 등이다.

<표 19> 한·뉴질랜드 교역동향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0		2001		2002		2002.1-4		2003.1-4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교역규모	988	13.7	1,015	2.7	1,075	5.9	330	2.8	370	12.1
수출	286	3.2	272	-4.9	322	18.4	87	3.4	126	44.3
수입	702	18.5	743	5.9	753	1.3	243	3.3	244	0.1
무역수지	-416	-	-471	-	-431	-	-156	-	-117	-

주) 증감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자료 : KOIS

교역규모 면에서는 뉴질랜드 경제성장세 지속과 노동당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중소기업지원강화, 연구 개발투자, 정부지출 확대 등)으로 한국 제품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뉴질랜드의 제6위 수출 대상국(뉴질랜드는 한국의 제57위 수출대상국)이다. 뉴질랜드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서도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어 추후 양국간 당면 현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표 20> 한·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불, %)

2001			2002			2003.1-4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합성수지	22	-10.7	경유	27	93.8	승용차	10	345.5
무선전화기	22	36.7	합성수지	22	-1.9	합성수지	10	61.4
경유	14	-	건설증장비	21	201.8	경유	10	56.3
승용차	13	-64.8	무선전화기	18	-16	건설증장비	7	52.0
기타석유화 학제품	10	-0.1	이연도강판	11	26.6	무선전화기	6	6.4
총 계	272	-4.9	총 계	322	18.4	총 계	126	44.3

※ 자료 : KOTIS (MII 4단위)

**<표 21> 한·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불, %)

2001			2002			2003.1-4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품목	금액	증가율
원목	239	13.1	원목	269	12.4	원목	90	10.3
양기죽	91	5.3	기타석유화 학제품	100	40.5	기타석유 화학제품	26	8.0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84	-18.1	양기죽	56	-38.3	가축육류	23	22.9
기타석유화 학제품	71	14.2	낙농품	46	0.6	양기죽	19	-8.9
낙농품	46	35.5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45	-46.4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5	-14.5
총 계	743	5.9	총 계	753	1.3	총 계	244	0.1

※자료 : KOTIS (MII 4단위)

이상에서 볼 때, 뉴질랜드의 시장규모는 상당히 작은 편이다. 뉴질랜드는 1차 산품 위주의 축산물, 수산물, 목재 등을 수출하고 공업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시장 개방에 따라 각국 수입품이 자유로이 수입되어 품질과 가격에 대해 소비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철강, 유기화학품, 식물, 가전제품, 유류, 고무, 일반기계류, 플라스틱제품, 전자부품, 종이제품, 금속제품, 수산물, 산업용 전자, 섬유 등이다.

중소 기업제품의 경우, 본 지역 교민 및 유학생이 33,000명 정도되므로 이들의 수요와 현지 판매망을 통해 한국식품, 문구류, 잡화, 의료, 신발, 스포츠 용품 등의 수출 방안 모색해볼 수 있다.

한 뉴질랜드 투자동향을 보면, 한국의 뉴질랜드 투자는 2003년 3월 누계를 기준으로 1억 4400백만불에 지나지 않는다. 총 투자건수는 177건이다. 반면, 뉴질랜드의 대한민국 투자는 2003년 1/4분기를 기준으로 총 34건에 1,900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표 22> 한·뉴질랜드 투자동향**

(단위 : 백만불(건))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1-3	총 누계
대뉴질랜드(건수)	0.4(1)	5(25)	14(60)	28(54)	2(6)	144(177)
대한민국(건수)	3(6)	-	0.6(5)	0.4(5)	0.002(1)	19(34)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지원부

- 주) 1. 2003년 대뉴질랜드투자는 2003년 1-3월까지 누계  
 2. 2003년 대한민국투자는 2003년 1/4분기까지 (분기별 업데이트)  
 3. 대뉴질랜드투자의 총누계는 1968년부터 2003년 1-3월까지 누계  
 4. 대한민국투자의 총누계는 1962년부터 2003년 1/4분기까지 (분기별 업데이트)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투명한 통상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한 관세인하 확대추진에 따라 총수입액중 약 95% 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재 의류, 신발, 섬유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해 5~1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승용차 및 경상용차에 대한 관세는 1998.5.15 완전 철폐하였으며 의류 19%, 신발 19%, 니트류 12.5%, 냉장고 및 세탁기 7%, 선박 6%, 플라스틱 7%, 철강 6.5%, 종이제품 7%, 가구 7%, 모자 1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당초 상기 관세부과 품목에 대해 2006년 7월 1일까지 모든 수입관세를 일방적으로 철폐할 계획이었으나 1999년 12월 집권한 노동당 신정부는 이를 철회하여 2005.7.1까지 5년간 1999년 수준으로 관세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이전 국민당 정부의 일방적인 관세인하조치가 국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실업을 증가시켜 경기침체를 불러오게 하였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여타 교역상대국의 관세인하 및 철폐정도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뉴질랜드간에는 1996년 이래로 정기적인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본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은 무역불균형, 동-식물 검역 등 통상현안과 과학 기술교육, 항공, 임업협력 등 경제협력이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0월 27일 개최된 제6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은 경제정책과 관련, 노동의 유연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혁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과 뉴질랜드간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양국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뉴질랜드측의 관세인



하 계획발표가 양국간 교역의 확대균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아울러 뉴질랜드 주재 교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상호 운전면허 실기시험 면제를 적극 검토해주도록 요청했다. 뉴측은 절편녹용 작업장 인증문제와 민대구머리의 식용수입 허용 문제, 뉴질랜드산 감자·꿀벌·말 등의 수입위생조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국측의 위생·검사·검역조치가 뉴질랜드산 제품의 한국시장 접근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또한 영화의 공동제작 협정의 추진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2004년 3월 뉴질랜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과학장관회의에 한국측 대표단 파견 등 과학·기술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 업계의 해외조립 추진 시 뉴측의 관련 정보와 기술제공 등 입업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의 FTA 추진정책 및 추진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APEC의 개혁과 WTO/DDA 협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양국이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 (다) 사회·문화적 관계

뉴질랜드는 인구 400만명 정도의 소규모 국가이나 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 중견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등 한국의 중요한 협력파트너이다.

1962년 외교관계 수립이래 뉴질랜드에는 1970년 후반 녹용업 등 자영업자 및 태권도 사범 등 소수가 진출하기 시작했다. 정식 이민이 시작된 것은 1986년이었다. 그 후 1991년 점수제 이민제도가 시작됨으로써 한국 이민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1993년 11월 대한항공이 취항하고 1994년 8월에는 한-뉴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1995년 한해동안 한

국관광객이 1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1995년 10월 다시 이민법 개정으로 영어시험 자격기준 강화되자 한국 이민자는 급감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6년 5월 국민은행 오클랜드 사무소 개설, 1996년 12월 오클랜드 대사관 분관 개관, 1999년 5월 1일 관광취업사증 발효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어 1999년에는 뉴질랜드의 제니 시플리 총리가 방한하여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국민들간의 상호교류 및 정부간 인사 교환방문 등 인적 교류를 확대를 바탕으로 두 나라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후 2000년에는 한국인 이민이 다시 증가, 한해동안 약 1,100명이 이민해, 1999년 대비 40%나 증가하였다.

2003년 5월 31일 현재 뉴질랜드에는 약 33,000명의 한국 교민(유학생 포함)이 거주하고 있다. 뉴질랜드 통계청 인구통계조사에 의하면 한국 인수의 증가율은 뉴질랜드 소수민족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의 이주민은 뉴질랜드의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국간의 인적 교류도 한-뉴질랜드 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적 교류의 확대가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나감으로써 실질적 협력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과의 경제교역관계, 인적 교류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 각급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2002년까지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에 체결된 주요협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7.7 무역·경제·기술협력 협정
- 78.3 어업 협정
- 78.12 국제운수소득 면세 협정
- 81.11 이중과세방지 협정
- 93.8 항공 협정
- 94.8 시증면제 협정
- 99.5 취업관광 시증 협정
- 2000.3 형사사법공조 협정
- 2002.4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밖에도 양국은 지난 1999년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과학기술대  
표단의 교환, 뉴질랜드내 한국학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  
원, 양국간 항공노선의 확대와 수송력 증대를 위한 영공개방협정 협의개시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에 합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라. 오세아니아지역에 대한 통일외교역량 강화방안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의 국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통일안보역  
량을 다른 지역으로도 분산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세계화의 시대에 특정한  
개별국가의 문제는 곧 국제적인 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비한 국제적 역량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크

게 재외동포와 해당국가의 인적 자원으로 구분하여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1) 한국의 통일정책 지지확보 필요성

한반도 분단문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시키는 홍보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 지역이 추구하고 있는 지역안보와 국제평화에도 커다란 미치는 지역현안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들 지역의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적극적 역할을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필요하다.

(2) 공조체제의 구축

호주 뉴질랜드는 주요 몇몇 선진국에 편중되어 있는 한국외교가 지나고 있는 문제점을 동일하게 안고 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이들 지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포괄적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각의 개별적인 국가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과 호주 및 뉴질랜드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적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과학재단(KOSEF)은 호주과학원(AAS), 호주연구협의회(ARC), 연방과학사업연구원(CSIRO) 등과 한-호주간 협력사업의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90</sup> 이들간의 종합적인 Network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현지에 구축되어 있는 한인조직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예컨대 뉴질랜드 한인회에서는 ‘한인행사의 밤과 같은 행사에 뉴질랜드 총리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및 정부관료 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적극 기여하고 있다.

### (3) 한반도 문제 전문가 양성

한국의 통일외교역량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방안 중 하나는 해당국가에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전문가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정부출연기관이나 학술연구단체, 그리고 대학 등지에서 인적 교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은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저비용으로 이들 지역에게 on-line이나 off-line과 같은 정보매체를 통하여 정보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연구원 등과 같은 전문연구기관 등지에서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련된 영문자료나 연구성과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4) 여론주도층에 대한 한국의 통일정책 홍보

한국의 통일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여론 주도층에 대해

한국 통일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각국의 정치인, 관료, 외교관, 군부인사, 언론인, 학자, 기업인, 학생,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여론 주도그룹을 수시로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한국의 통일정책과 비전을 설파함으로써, 그들이 자국에서 한국 및 한반도 문제 해결에 유리한 국제여론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5) 재외동포 인적자원의 활용

재외동포는 한국의 국가목표를 추구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재외동포는 남북한간의 불신의 벽과 적대감을 여과시키고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매개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가치와 역할이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외동포는 국적개념이 아닌 민족개념에 의거하여 남·북·한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통일문제를 정치적 차원이 아닌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재외동포 기업은 남한기업보다 북한접근이 용이하여 북한의 경제를 희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서도 동포기업인 코스트(KOAST)그룹(회장 천용수)은 북한이 전량수입하고 있는 설탕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북한주민들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한편 광산개발이나 폴리우레탄 동장, 임가공 사업 등 활발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up>91</sup> 따라서 재외동포의 역량을 결집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91 『연합뉴스』, 2003.10.7.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는데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 있는 친북적 한인단체들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들의 활동이 한반도 문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도 ‘재호주 동포연합회’라는 친북단체는 북한의 NPT탈퇴를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높여주는 계기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sup>92</sup> 따라서 동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형성되어 있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체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6) 양대국가를 통한 역내 통일기반의 조성

호주와 뉴질랜드를 거점지역으로 하여 주변국가나 지역에 진출하는 방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남태평양의 지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의 도서국가들에 대한 진출을 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주변의 도서국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호주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솔로몬제도에 대해 치안유지와 질서회복을 위해 상당한 수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한다.<sup>93</sup>

92 『연합뉴스』, 2003.1.17.

93 『연합뉴스』, 2003.6.26.

### (7) 통일인프라의 기반구축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전문적인 학술연구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 호주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는 호주국립대 한국학연구센터, 호주국립대 전략방위연구센터, 그린피스대 호주한국연구센터, 뉴사우스웨일즈대 한 호연구센터(소장 서중석 교수), 그리고 오클랜드대 한국연구센터 등을 열거해 볼 수 있다.

## 마. 결론 및 정책적 과제

### (1) 민관 공조체제의 구축

현재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간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의 국가들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학계, 언론계, 기업, NGO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예컨대 양국간에는 지방 단위에서도 도별, 시별, 구별 단위로 자매도시를 체결하여 각 단위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뉴사일즈웨일즈주, 경기도는 퀸스랜드주, 부산시는 빅토리아주, 충남은 남호주주, 제주도는 타즈마니아주, 수원시는 타운즈빌시 등이 각각 정보교환과 인적교류를 통하여 상호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과 호주간에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먼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 호관계를 매개하는 각종 행위자들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키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외무부와 해당 국가 대사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외무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이 해외의 한인사회가 민족적 정체성과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기관으로서의 지원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NGO의 활용

정보회는 개인을 비롯하여 기업, 초국가적 기구나 비정부적 기구들의 국가에 대한 도전능력을 혁명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NGO들을 국제적 통일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시민단체들의 국제적 정보교환 및 공유는 오히려 정부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국제적인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에는 20여개의 여성단체들이 모여 ‘호주 한인 여성네트워크’(회장 김명순)를 결성하여 각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프로그램, 정보를 교환하면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 (3) 한인단체의 지원

한국민들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현지에서 한국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모국의 입장을 홍보할 수 있는 한국인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거주국의 상층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현지단체나 한국에서 파견된 정부기관 및 재외동포 관련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이 교민사회의 질적

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인용문은 호주와 같은 이민국가에서 한국사회의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호주정책, 재외동포정책, 그리고 현지 한인사회의 발전을 논하는 어떤 보고서나 그 흔한 학술세미나에서 언급되는 일이 없다. 내가 호주에 사는 동안 각각 9명의 한국대사와 총영사가 거쳐갔지만 이런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는 것은 물론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sup>94</sup>

현지사정에 적합한 재외동포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양적 관리정책에서 질적 발전정책으로의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현지교민들의 입장과 의사를 해당국가나 모국의 교민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정책프로그램을 보다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도 뉴질랜드에서는 남부 크라이스트처치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24시간 한국어로 방송할 수 있는 라디오방송국(KFM)이 현지인들의 노력으로 개국하였다. 이러한 장치들이 “동포에 의한 동포를 위한 방송”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국방송계의 적극적인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 (4) 대북정책 관련 국제협조체제 구축

미·일 등 주요국 정부당국자와 정책협의회를 강화하고 각국 민간전문

---

94 <<http://news.naver.com/news>> (2003.10.20.)

가 등 여론 주도층과의 대북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한공관 관계자와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통일정책 설명회를 갖는다. 최근 호주언론의 기자단을 초청하여 금강산관광을 통하여 분단현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같은 유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참전용사 초청사업도 한국전쟁을 통하여 형성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국가이익의 창출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5) 해당국 한반도문제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의 발굴 및 접촉 증대

호주와 뉴질랜드에는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학술단체나 NGO들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도 한국으로서 중요한 외교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반도 관련 단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과의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예컨대 ‘지구의 벗’ 호주지부, ‘호주평화위원회’, 뉴질랜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국제적인 연구단체로서 한반도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가칭, ASCCK), 그리고 호주 및 뉴질랜드의 한국학 학자들의 모임체인 ‘대양주 한국학협회’(KSAA)들이 결성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지구의 벗’ 호주지부, ‘호주평화위원회’와 같은 NGO단체들은 호주에서 한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한바 있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한국과 호주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매개집단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정책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 자 료

### <호 주>

1. 캔버라한인회 (The Korean Society of Canberra)

- \* 주소 : Shop2, Lower Level, Saraton Building  
City Walk & East Row Canberra City ACT 2601 Australia
- \* 전화번호 : (02) 6257 9277, 0418 626 074
- \* FAX : (02) 6241 2279
- \* 웹 사이트: [www.actkorean.net](http://www.actkorean.net)

2. 빅토리아주한인회(The Korean society of Victoria Australia Inc.)

- \* 주소: 21 bredan Ave, Doncaster VIC 3108
- 전화: 03 8344 4449, 98402113, 0422 389 646
- \* 팩스 03 9840 2174
- \* 웹사이트: [www.korean.org.au](http://www.korean.org.au)
- \* E-mail: [yhkim@optushome.com.au](mailto:yhkim@optushome.com.au) 또는  
[president@korean.org.au](mailto:president@korean.org.au)

3. 서부호주한인회 (Korean Association of W.A)

- \* 주소 34 Manning Rd, Cannington W.A 6107
- \* 전화: 08 9358 6077
- \* 팩스 08 9358 0677

4. 남부호주한인회 (Korean Community of S.A)

\* 주소 P.O Box 10257, Adelaide BC S.A 5000

\* 전화: 08 8369 0474

\* 팩스 08 8369 0246

5. 호주 시드니 한인회 (The Korean Society of Sydney Australia)

\* 주소 82 Brighton Av, Croydon Park NSW 2133 AUSTRALIA

\* 전화: (02) 9798 8800, 3555

\* 팩스 (02) 9798 - 0011

6. 호주 퀸즈랜드 한인회 (Korean Society of Brisbane Australia)

\* 주소 12 Annerly Rd. Woolloongabba QLD 4102

\* 전화: (07) 3891 - 6622

\* 팩스 (07) 3891 - 6602

7. 호주 골드코스트 한인회 (Korean Society of Gold Coast)

\* 주소 9 Dailmer Dr. Bundall, QLD 4217

\* 전화: (07) 5592 - 4488

\* 팩스 (07) 5592 - 4488

○ 호주연방정부 및 기관 : <http://www.fed.gov.au>

(호주연방, 주, 지방정부, 의회, 정당법원 정부 유관부처 등)

○ 외교통상부 : <http://www.dfat.gov.au>

- 이민부 : <http://www.immi.gov.au>
  
- 환경부 : <http://www.environment.gov.au>
  
- 호주통계청 : <http://www.abs.gov.au>
  
- 호주국립도서관 : <http://www.nla.gov.au>
  
- Commonwealth Government Directory : <http://gold.directory.gov.au>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Local Government : <http://www.act.gov.au>
  
- New South Wales State Government : <http://www.nsw.gov.au>
  
- Victoria State Government : <http://www.vic.gov.au>
  
- South Australia State Government : <http://www.sa.gov.au>
  
- Western Australia State Government : <http://www.wa.gov.au>
  
- Queensland State Government : <http://www.qld.gov.au>
  
- Northern Territory Local Government : <http://www.nt.gov.au>

○ Tasmania State Government : <http://www.tas.gov.au>

<뉴질랜드>

정부기관: [www.govt.nz](http://www.govt.nz)

1. 총리실 (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 Executive Wing Parliament Buildings, Wellington

\* 1Tel : (04)471-9035, Fax : (04)472-3181

\* 1Website : [www.dpmc.govt.nz](http://www.dpmc.govt.nz)

2.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195 Lambton Quay, Wellington

\* Tel : (04)439-8001, Fax : (04)439-8511

\* Website : [www.mft.govt.nz](http://www.mft.govt.nz)

3. 농림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 ASB Bank House 101-103, The Terrace, Wellington

\* Tel : (04)474-4100, Fax : (04)474-4111

\* Website : [www.maf.govt.nz](http://www.maf.govt.nz)

4. 국방부 (Ministry of Defence)

\* 15-21 Stout Street, Wellington

\* Tel : (04)496-0999, Fax : (04)496-0859

\* Website : [www.defense.govt.nz](http://www.defense.govt.nz)

5. 경제개발부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 33 Bowen Street, Wellington

\* Tel : (04)472-0030, Fax : (04)473-4638

\* Website : [www.med.govt.nz](http://www.med.govt.nz)

6.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 45-47 Pipitea Street, Wellington

\* Tel : (04)463-8000, Fax : (04)463-8001

\* Website : [www.minedu.govt.nz](http://www.minedu.govt.nz)

7.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Grand Annexe Building, 84 Boulcott Street, Wellington

\* Tel : (04)917-7400, Fax : (04)917-7523

\* Website : [www.mfe.govt.nz](http://www.mfe.govt.nz)

8. 수산부 (Ministry of Fisheries)

\* ASB Bank House 101-103 The Terrace, Wellington

\* Tel : (04)470-2600, Fax : (04)470-2601

\* Website : [www.fish.govt.nz](http://www.fish.govt.nz)

9.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 133 Molesworth Street, Wellington



\* Tel : (04)496-2000, Fax : (04)496-2340

\* Website : [www.moh.govt.nz](http://www.moh.govt.nz)

10. 국세청 (Inland Revenue Department)

\* 12-22 Hawkestone Street, Wellington

\* Tel : (04)473-0920, Fax : (04)473-2815

\* Website : [www.ird.govt.nz](http://www.ird.govt.nz)

11. 내무부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 State Insurance Building 46 Waring Taylor Street, Wellington

\* Tel : (04)495-7200, Fax : (04)495-7222

\* Website : [www.dia.govt.nz](http://www.dia.govt.nz)

12.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 Charles Fergusson Building Bowen Street, Wellington

\* Tel : (04)494-9700, Fax : (04)494-9701

\* Website : [www.justice.govt.nz](http://www.justice.govt.nz)

13. 무역진흥공사(NZ Trade Development Board)

\* Level 18, Pastoral House

25 The Terrace, Wellington

\* Tel : (04)499-2244, Fax : (04)473-3193

\* Website : [www.tradenz.govt.nz](http://www.tradenz.govt.nz)

14. 통계청(Statistics NZ)

- \* 85 Molesworth Street, Wellington
- \* Tel : (04)495-4600, Fax : (04)495-4610
- \* E-mail : info@stats.govt.nz

15. 이민성(Immigration Service)

《Auckland Branch》

- \* Level 3, 450 Queenstreet
- \* Tel : (09)914-4100

《Wellington Branch》

- \* Level 7, Regional Council Centre  
142-146 Wakefield Street
- \* Tel : 0508-558-855, Fax : 384-8243
- \* Website : www.immigration.govt.nz

○www.govt.nz : 뉴질랜드 정부기관

○www.kotra.co.nz : 오클랜드 소재 무역관, 뉴질랜드 관련 경제·통상 정보 제공

○www.world-net.co.nz : 오클랜드 소재 한국인 운영 인터넷 서버, 뉴질랜드 관련 종합정보 제공

○tdl.tols.co.nz : 전화번호부

- [www.nzzoom.com](http://www.nzzoom.com) : 뉴질랜드 관련 종합 정보 제공
- [www.tradenz.govt.nz](http://www.tradenz.govt.nz): 뉴질랜드 경제·통상관련 종합 정보 제공
- [www.newzealandsearch.co.nz](http://www.newzealandsearch.co.nz) : 뉴질랜드관련 종합 정보 제공
- [www.tourisminfo.govt.nz](http://www.tourisminfo.govt.nz) : 뉴질랜드 여행정보 제공
- [www.ubd.co.nz](http://www.ubd.co.nz) : 뉴질랜드 경제, 시장 정보제공

뉴질랜드내 주요한인 기업 및 단체

1. 한국무역관(KOTRA)

- \* 3 Albert St, Auckland
- \* Tel : (09)373-5792, Fax : (09)373-2952
- \* E-Mail : [kotra@kotra.co.nz](mailto:kotra@kotra.co.nz)

2. 대한항공

- \* Level 14, Westpac Trust Tower  
120 Albert St, Auckland
- \* Reservation / Ticketing : Tel (09)914-2000, Fax (09)914-7774
- \* Regional Office : Tel (09)914-7777, Fax (09)914-7778
- \* Auckland Airport Office : Tel (09)256-8322, Fax (09)256-8321
- \* Cargo Office : Tel (09)256-8605, Fax (09) 256-8608

\* E-Mail : akdsm@korenair.co.kr

3. (주)선경

\* 57A Maurice Rd, Auckland

\* Tel : (09) 634-4642, Fax (09) 636-5866

\* E-Mail : kiwist@ihug.co.nz

4. DK 코리아

\* P.O.BOX 5325, Auckland

\* Tel : (09) 358-1233, Fax (09) 358-0072

\* E-Mail : dknzf@world-net.co.nz

5. 동원수산

\* P.O.BOX 905, Hall St, Timaru

\* Tel : (03) 688-3172, Fax (03) 688-9086

\* E-Mail : veinso@southocean.co.nz

6. 대현 농수산

\* P.O.BOX 905, Hall St, Timaru

\* Tel : (03) 688-3172, Fax (03) 688-9086

\* E-Mail : daehyunNZ@hotmail.com

7. (주)동남

\* 1 Fraser St, Timaru

\* Tel : (03) 684-6226, Fax (03) 684-6988

\* E-Mail : dongnam@ihug.co.nz

8. 국민은행

\* 11 Fl, Westpac Tower, 120 Albert St, Auckland

\* Tel : (09) 366-1000, Fax (09) 366-6608

\* E-Mail : kookmin@world-net.co.nz

9. 오투기

\* P.O.BOX 1000 Papakura, Auckland

\* Tel : (09) 267-7476, Fax (09) 267-2793

\* E-Mail : ottoginz@xtra.co.nz

10. 현지 한인업소

11. 해외 한인 무역인 협회 뉴질랜드 지부(OKTA NZ)

\* 7 North Wood Ave, Albany, Auckland

\* Tel : (09)415-2248, Fax (09) 415-2249

12. 재뉴 한국 농민회(Korean Growers Association)

\* 28 Fried Lannder Rd, Tuakau, Auckland

\* Tel : (09)236-9188 (Fax 겸용)

13. 한인 자동차 정비업자 협회(KASA)

144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 방안

\* 2A Princess St, Onehunga, Auckland

\* Tel : (09)634-6923

14. 재뉴질랜드 한국식품점 협회

\* Tel : (09)443-2805

15. KATAA(Korean Air-Travel Agent Assoc)

\* P.O.BOX 6499 Auckland

\* Tel : (09)377-1061, Fax (09)377-0432

<한인회(회장)>

1. 웰링턴한인회 (정성호)

\* 26 Barker St, Te Aro, Wellington

\* Tel : (04)934-2775, Fax : (04)934-2776

2. 오클랜드한인회 (강완지 )

\* Level3 Achilles House, 47 Customs Sstreet, Auckland

\* Tel : (09)309-6005, Fax : (09)309-6003

3.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 (정태경)

\* 387A Colombo Street, Christchurch

\* Tel : (03)379-2755, Fax : (03)379-2775

4. 해밀턴한인회(장하이루)

\* PO Box 14-132, Hamilton

\* Tel : (07)854-1280, Fax : (07)871-5625

5. 팔머스턴노스한인회(김창식)

\* 40 Kentucky Way, Palmerston North

\* Tel : (06)354-8068, Fax : (06)354-8068

6. 더니든한인회(김계성)

\* P O BOX 2-355, Dunedin

\* Tel : (03)455-8585, Fax : (03)455-8585

7. 로토루아한인회(김옥영)

\* 319 Fenton Street, Rotorua

\* Tel : (07)3347-0452, Fax:(03)347-0452

8. 퀸스타운한인회(안명근)

\* Tel: (03)441-8893, Fax:(03)442-9474

\* P O BOX 73 Queenstown

<한인 언론사>

1. 주간한국

\* Tel. : (09) 377-1000, Fax : (09) 373-0086

\* Website: www.koreaherald.co.nz

\* E-mail : NZINKH@world-net.co.nz

2. 뉴질랜드타임즈

\* Tel. : (09) 377-3636, Fax : (09) 377-5811

\* Website : www.nzkoreatimes.co.nz

3. 코리아타운

\* Tel. : (09) 479-1245, Fax : (09) 479-1265

\* Website : www.ilovekorea.co.nz

4. 생활정보

\* Tel. : (09) 379-3435, Fax : (09) 379-3047

\* Website : www.koreatimes.co.nz

5. 한인방송

\* Tel. : (09) 373-3626 (Fax 겸용)

\* Website : www.KTV.co.nz



6. 한인기독교방송

\* Tel. : (09) 302-0238, Fax : (09) 302-0237

7. 카톨릭방송

\* Tel. : (09) 416-5676, 302-0238, Fax : (09) 302-0237

\* E-mail : kcr@shell.world-net.co.nz

8. WTV

\* Tel. : (09) 571-2288(ext.212), Fax : (09) 571-0008

9. 비바코리아

\* Tel. : (03) 379-1115, Fax : (03) 377-5131

\* Website : [www.vivakorea.co.nz](http://www.vivakorea.co.nz)

10. 코리아리뷰

\* Tel. : (03) 377-5454, 377-3744

\* Fax : (03) 377-5453

\* Website : [www.netzealand.com](http://www.netzealand.com)

### 3. 국제적 통일 역량강화 방안: ASEAN

#### 가. ASEAN의 현황과 전망

##### (1) 동남아시아 일반 정세 전망

##### (가) 민주화

21세기 동남아국가들의 민주화 추세는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은 국가별로 차별성을 보일 것이나 전반적으로 점진적이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에서는 경제발전에 따른 민주화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수의 제 3세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남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이외에 대안적 체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수준의 민주화를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는 태국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민주화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도 다소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으나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캄보디아 등 권위주의 체제도 정치변화 과정에서 국가별로 차별성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민주화를 지향할 것이다. 반면 베트남, 라오스 등 기존의 사회주의체제가 다원주의적 민주정치 체제로 완전히 이행될지는 의문시되며, 상당기간 현재와 같은 일당지배체제가 존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르니아의 전통적 군주제도 상당기간 존속될 가능성이 있다.

### (나) 경제발전

21세기 동남아시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교차한다. 동남아 경제에 대한 부정적 요인들은 낮은 수준의 기술자립도, 대외지향적 고투자형 경제성장구조(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대외의존도는 200%에 육박), 남미와 같은 주기적 경제위기의 반복 가능성 상존(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이다. 반면 긍정적 요인은 동남아와 동북아 경제의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동북아의 성장효과가 동남아에 확산될 수 있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구조개혁이 성공을 거둘 경우 동남아 자체의 안정된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동남아 경제가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경제와 순조로운 통합과정을 거쳐 상호보완성을 증가시킬 경우 동남아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동남아 경제는 대체로 5~6% 정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다) 안보정세

앞으로 동남아시아의 안보질서는 ASEAN 중심의 역내협력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평화와 안보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몇 가지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한다. 미-중관계가 극도로 악화될 경우 동남아국가들은 불가피하게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ASEAN의 내부적 결속력이 약화되고 분열조짐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중국과 동남아국가간 무력분쟁으로 발전할 가

능성은 크지 않지만, 관련국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구소련의 해체와 같은 국가분열을 겪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인도네시아내의 분리주의 운동과 국가 분열적 요인들은 동남아 지역 전체의 안보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라) 각국 정세 전망

### <인도네시아>

향후 인도네시아가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최근 이룩한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종족 및 종교적 분열위기를 극복함으로써 국가적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1997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이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 효율적인 정부운영, 투명한 정책 수행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민주주의 붕괴나 권위주의체제가 재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경우 또 다른 형태의 독재체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불안정한 민주주의, 또는 공고화되지 못한 민주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도전은 지역 분리주의와 국가분열 가능성이다. 아제와 빠뿌아 지역에서의 분리주의 운동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분리주의 움직임은 말루쿠, 리아우 등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UN 등 국제사회와 ASEAN 등 역내국기들은 동티모르 경우와는 달리 인도네시아의 여타 분리독립 운동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분리독립 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급격한 해체와 국가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경제위기와 정치·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경우, 유고슬라비아의 경우처럼 민족, 종교집단간 무력충돌이나 내전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태국>

태국은 향후 건설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동남아 국가 중 민주주의가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최근의 경제 회복세도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태국의 입헌군주체제는 상징적 국가통합성을 바탕으로 정치안정의 중요한 버팀목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초반 군부의 정치적 퇴진 이전부터 진행된 민주주의 실험에 힘입어 태국은 향후 안정적 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태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공고화는 동남아지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국내적으로 안정을 이룩하지 못하고 혼란이 지속될 경우 태국이 ASEAN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 <필리핀>

필리핀은 태국과 함께 역내국가 가운데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가능한 국가이다. 그러나 남부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 무장 공산계렬라 세력의 활동, 초헌법적 정권교체 방식, 대토지 소유 명문가들의 정치권력 독점, 부정과 폭력으로 점철된 선거풍토, 경제침체 등은 필리핀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필리핀에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체제가 재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남미 국가에서와 같이 공고화되지 못한 민주주의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국내적 분열요소가 제거되고 건실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경우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필리핀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성공할 경우 태국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선도적 국가로 부상하고, 향후 ASEAN의 개방적 운영방식을 선도할 주도국가로서 역할할 가능성도 있다.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권위주의체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민주화 과정에서 말레이인과 중국계 화교집단간 종족분쟁 가능성과 이슬람 말레이인들간 내부적의 분열과 대립, 보혁대결 등 갈등요인이 폭발하여 견잡을 수 없는 정치적 혼란과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향후 말레이시아 정치에서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말레이, 화교, 인도계간 타협과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싱가폴>

싱가폴도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높은 사회경제적 발전, 교육수준, 세계화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광요 사후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민주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민주화 과정은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민주화 운동에 의해 이루어지지 보다는 위로부터의 점진적이고 계획적인 개혁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베트남>

베트남에서는 집단지도체제에 의한 연성의 공산당 일당지배체제가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경제성장과 사회분화에 상응하여 위로부터 점진적인 정치개혁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치개혁은 중국의 민주화 과정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향후 베트남은 안정적인 성공적인 시장경제체제로 이행을 완료하여, 2020년경에는 농업생산성을 바탕으로 둔 역동적인 산업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라오스>

베트남과 태국 등 주변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라오스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라오스는 베트남의 발전모델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베트남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안고 있다.

###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오랜 군주제 전통, 정파간 연립과 합작의 경험, 참혹한 전쟁의 기억,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 등으로 과거와 같은 강성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거나 내전이 재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 중심의 연성 권위주의와 연립내각 중심의 불안정한 민주주의가 당분간 병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파괴, 부존자원의 부족, 낮은 수준의 노동력 등은 향후 캄보디아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 <미얀마>

미얀마가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민주화의 기회가 찾아올 경우 그 성공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주화를 통한 정치적 안정이 가능할 경우 미얀마는 풍부한 부존자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동력 등으로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향후 미얀마의 가장 중요한 도전은 소수민족 문제이다. 미얀마는 분리독립보다는 연방제 등을 채택하여 소수민족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ASEAN의 통합과 지역협력

##### (가) ASEAN의 지역통합 전망



ASEAN은 2020년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통하여 동남아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지역통합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Hanoi plan of Action)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ASEAN이 지향하는 동남아 지역 통합은 경제, 사회분야의 통합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동의 외교정책 수립을 모색하는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유럽의 지역통합과는 다르다. 아세안의 통합은 비전 자체가 모호하고 그 목표도 자유무역지대 및 투자지대 형성 등 초보적인 경제협력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ASEAN이 추구하는 지역통합은 기존의 무역, 투자, 금융, 산업, 인력개발, 과학기술, 환경, 사회,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역내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 역외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20년경 ASEAN은 자유무역지대 및 투자지역 형성 등 경제통합을 중심으로 일부 사회, 문화분야의 협력을 통하여 초보적 수준의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나) ARF의 발전전망

1994년 ASEAN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출범한 ARF는 아태지역 유일의 정부차원의 다자안보대화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ARF는 아직까지 아태지역 안보질서의 확실한 중심축으로 자리잡지는 못하고 있다. ARF는 초보적 신뢰구축 증진단계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예방외교 수준의 안보협력을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안보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한국, 호주 등 양자동맹관계와 미국과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등과의 쌍무안보협력관계를 중심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ARF와 같은 다자안보대화체는 이차적 중요성만을 지니고 있다.

향후 ARF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출범시부터 제기되어 왔던 ASEAN의 지도력 문제이다. 동남아 중소국가들의 연합체인 ASEAN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아태지역의 강대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ARF를 과연 언제까지 어떻게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하는 것이 의문시된다.

특히 ARF의 제도화 및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ASEAN과 역외국들간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다. ASEAN은 기본적으로 ARF가 공식적 형태를 띤 지역안보협력기구로 제도화되기보다는 가급적 비공식적 형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역외 서방국가들은 ARF가 빠른 속도의 협력과 제도화 과정을 통하여 보다 구체성을 띤 지역안보협력기구로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역외국가들은 ASEAN 국가들만이 의장국을 독점하는 현재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ASEAN 국가들과 비ASEAN 국가들이 의장국을 번갈아 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ASEAN은 이러한 구상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ARF의 보완적 또는 대안적 형태의 다자안보협력 방안이 제기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은 아태지역 국방장관회의를 제기하였으며, 미국의 일부 안보정책 전문가들은 동아시아판 NATO 구상을 제안하였다. 동아시아판 NATO 구상은 미국과 일본의 신안보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국, 호주 등 전통적 동맹국들과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의 친미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의 집단안보 메커니즘을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 반대할 것이며, ASEAN은 ARF이

외의 다른 대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다) ASEAN+3 발전전망

1997년 출범한 ASEAN+3 협력체제는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경제, 재무, 외무 등 각료급회의와 각국 중앙은행 등 고위급 실무회의가 정례화되었으며, 치앙마이 통화 스왑계약 체결(2000.5) 등 역내금융협력과 관련한 중요한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ASEAN+3 협력체제는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와 역내금융협력기구 설립을 포함하는 역내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다. 역내안보협력과 관련해서는 ARF가 작동하고 있으며, 미국이 배제된 다자안보협력을 구상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ASEAN+3가 역내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ASEAN+3 협력체제도 아직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 리더쉽문제이다. ASEAN+3는 역내 강대국인 일본과 중국이 아니라 ASEAN과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과 중국간 지역 패권경쟁때문에 어느 일방도 상대방의 주도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일본, 중국간 협력 없이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이 본 궤도에 오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둘째, ASEAN+3의 제도화가 쉽지 않다. ASEAN+3는 ASEAN 중심의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국가들이 초청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따라서 ASEAN+3가 진정한 의미의 동아시아 지역협력체가 되기 위해서는 ASEAN과 한, 중, 일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정체성 희석 또는 상실 가능성을 우려하는 ASEAN이 동아시아 정상 회의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정상회의체제가 구축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미국의 입장과 태도는 향후 ASEAN+3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은 일본, 중국 등 역내강대국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ASEAN+3 협력구도가 빠른 시일내 순조롭게 발전할 것으로 보지 않고 ASEAN+3에 대해 관망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ASEAN+3가 역내안보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한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앞으로 ASEAN+3가 중국에 의해 주도되거나 반미적 지역협력체의 성격을 띠 경우 미국이 강력히 개입하여 이러한 움직임을 저지하고자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도 동아시아의 역내경제협력체인 ASEAN+3는 미국, EU, 러시아, 인도 등 역외 강대국들이 대거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역내안보협력 문제에 대해서 회원국들간 합의도출이 어려운 반면, 1997년 금융위기를 경험한 대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싱가폴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중국-ASEAN 자유무역지대를 창출하기 위한 협상이 진전되고 있으며, 한국-일본, 일본-ASEAN 등 각종 양자간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도 역내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 (라) ASEAN의 역내 리더십 전망

향후 ASEAN이 동아시아지역의 다자안보와 경제협력을 계속 주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주도로 ARF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다자안보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ASEAN+3도 동아시아 정상회의체제로의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ASEAN이 동남아 중소 국가 연합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아울러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동남아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봉착함으로써 ASEAN이 대외적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내부단합이 이완된 것도 ASEAN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과거 30년간 ASEAN의 주도국가로서 실질적으로 ASEAN의 운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왔던 역내 최대국가인 인도네시아가 경제위기와 함께 몰락한 이후 ASEAN은 내부적 리더십 상실의 위기를 겪고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역내 여타 주요 국가들이 과거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인도네시아가 안정을 되찾고 리더십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ASEAN이 계속적으로 동아시아 안보와 경제협력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 전망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은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과 역내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 비록 앞으로 ASEAN이 동아시아 지역의 다자안보와 경제협력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도 동남아국가들은 ASEAN이라는 지역그룹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

운 다자안보협력체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체제도 ASEAN의 능동적 참여와 적극적 지지 없이는 순조롭게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다.

## 나. 한국의 대ASEAN 관계: 평가 및 전망

### (1) 외교관계 일반

한국은 1991년 ASEAN의 완전대화상대국으로 지위가 격상된 이후 현재까지 ASEAN과 괄목할 만한 관계증진을 이룩해 왔다. 한국은 ASEAN이 주도하는 PMC, ARF, ASEAN+3 등 다자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한-ASEAN 대화와 한-ASEAN 관련 각종 사업을 통해 상호협력관계를 심화시켜 왔다.

그러나 한국은 동남아 개별국가들과의 관계증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동남아 각국 주요 인사들의 한국방문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측 고위인사들의 동남아 방문 횟수는 매우 적다. 또한 한국의 대동남아 외교는 기본적으로 교역, 투자 등 경제·통상분야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개별국가들과의 정치, 사회, 문화 등 여타 분야에서의 폭넓은 관계증진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의 대동남아 외교는 지나치게 경제위주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따라서 한국은 ASEAN PMC, ARF, ASEAN+3 등 ASEAN이 주도하는 다자협력체제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은 물론, 동남아 개별국가들과의 양자 우호협력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던 한국 고위인사들의 동남아 개별국가 방문을 보다 활성

회하여 동남아국가들과의 정치·외교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동티모르 등 역내 후발국가들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지원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이들로부터 한국외교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은 동남아지역에 대한 중국·일본의 영향력 확보경쟁이 동남아지역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남아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역내 세력균형을 모색하는 조정자 또는 균형추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동남아 각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민주화가 역내 정치안정의 열쇠라는 점을 감안하여 각국의 민주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동남아의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 (2) 경제통상관계

한국과 ASEAN 국가간 경제통상관계는 무역, 투자, 건설, 노동력 이동 등 주요 4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어 왔다. 동남아는 미국, 일본, 중국, EU와 함께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이며, 보완성이 높은 상품들의 교역을 통하여 한국과 유기적이고 공생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다. 한국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동남아는 미국,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3위 투자대상지역이다. 한국의 투자는 동남아지의 자원개발과 노동력을 이용한 수출제조상품 분야에 집중됨으로써 현지 국가의 고용과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동남아지역 건설수주액은 최근 매년 1-2위를 기록할 만큼 중요해지고 있으며, 누계기준으로 동남아지역에 대한 건설수

주액은 중동지역에 이어 2위의 실적을 올리고 달성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체류하는 동남아 노동자들은 20만을 넘어섰다.

그러나 한국과 동남아국가들간 경제통상관계에는 한국의 일방적 무역 흑자, 동남아 현지의 노시문제, 한국내 불법 취업 문제 등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한국과 동남아 국가간 교역에서 한국이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부분 양측의 산업구조상 불가피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국가들은 무역역조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지역의 한국계기업에서 저임금, 시간외 근무, 열악한 근로환경, 근로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등으로 인한 노사분규는 한국기업 및 한국에 대한 현지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내 동남아 산업연수생 중 불법 취업자의 숫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동남아가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자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동남아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먼저 동남아 경제가 주기적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해외개발원조(ODA)를 대폭 확대하고, 동남국가들에 대해 실리추구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호혜적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대동남아 경제외교의 핵심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를 결성하는 것이다.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략과 대동남아 경제협력은 분리될 수 없는 시안이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형성이 최선의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ASEAN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국-ASEAN 및 한국-일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이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형성으로 귀결되지



않을 경우, 동아시아 경제는 중국·ASEAN 축과 일본·한국 축으로 양분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일본과 한국에 비해 산업발전 단계가 뒤쳐진 중국과 동남아국가들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할 경우, 한국에게는 실익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이다. 일본은 동남아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대상에서 농산물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ASEAN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국도 동남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면 농산물시장의 개방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농업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 향후 중국·ASEAN 축과 일본·한국 축간 경제통합이 어려울 경우, 한국은 단독으로라도 ASEAN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하여 동남아국가들과의 경제통합을 모색해야 한다.

### (3) 기타 관계

최근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한국 관광객 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동남아 관광행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정부는 국내 동남아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나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등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최근 급증한 동남아 불법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 노동권, 의료보험 문제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한국은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선전하고 외국에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고양한다는 자민족 중심적 문화외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외부 문화와의 통합과 동화, 문화접변과 다문화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한

국과 동남아간 문화교류와 접촉은 한국으로부터 동남아로의 일방적인 유입이 아니라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는 쌍방향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류”도 단순한 한국 대중문화의 역외수출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 문화와 동남아 문화의 교류 또는 접목을 위한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향후 한국의 대동남아 문화외교의 핵심 과제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상호 문화교류와 접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과 동남아가 모두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지역정체성은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배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은 각 나라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인류 문화의 보편성을 지향해야 한다. 지역정체성 형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하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지역통합의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다.

#### 다. 북한의 대ASEAN관계

##### (1) 북한-필리핀관계

북한과 필리핀은 2000년 7월 12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필리핀이 북한과의 수교를 결정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한국의 대북포용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한반도 평화유지에 기여하며, 동북아의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 후 유럽 및 동남아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고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

였는데, 필리핀과의 국교수립도 이러한 대외관계 개선정책의 일환이었다.

북한과 필리핀은 상호 상주공관을 개설하지는 않고, 태국주재 북한대사와 중국주재 필리핀대사가 각각 쌍방의 대사를 겸임하고 있다.

## (2) 북한-인도네시아 관계

북한과 인도네시아는 1964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비동맹 운동에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쌍방간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통신 및 우편물 교환협정』(1965), 『공보협력협정』(1985),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정』(1991), 『투자촉진 및 보호협정』(2000) 등을 체결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북한과 인도네시아의 관계가 긴밀해졌다. 2001년 11월 인도네시아 의회대표단이 방북하였으며, 2002년 3월에는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면담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북한과의 관계증진을 통해 ASEAN의 리더국으로서의 외교력을 신장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비동맹운동을 주도한 인도네시아와의 친선을 강화함으로써 자주외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실리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

2002년 11월에는 북한의 경제시찰단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는데, 특히 북한대표단은 농업과 공업에 기반을 둔 인도네시아의 개발도상국형 혼합경제체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2003년 2월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인 나니수프레스나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친선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3) 북한-태국 관계

북한과 태국은 1975년 수교한 이후 1991년 태국에 북한의 상주공관 개설을 계기로 쌍방 인사교류 및 관계증진이 추진되어 왔다. 북한과 태국은

『무역협정』(1978), 『체신우편협정』(1982), 『항공협정』(1992) 등을 체결하였으며, 위성TV사업 분야 협력 등 경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북한-태국 관계는 1999년 홍순경 참사관(태국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과학기술참사관) 가족 실종사건으로 악화되었으나, 북한의 ARF 가입(2000. 7)을 계기로 호전되었다. 특히 태국은 ARF의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ARF 가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2000년 7월에는 북한-태국 외무장관회담이 개최되었으며, 태국정부 무역대표단이 2000년 및 2001년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간 무역확대 및 경제협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002년 2월에는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말레이시아와 함께 태국을 방문하여 『문화협력협정』,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선중앙통신과 타이통신사 간 『보도교환 및 상호협정에 관한 양해서』를 체결하고 태국산 쌀 30만톤의 수입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동남아국가 가운데 태국은 북한과 무역관계가 활발한 편으로 태국은 북한의 10대 교역상대국이다. 북한은 태국으로부터 주로 쌀, 설탕, 고무 등 1차 산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태국산 쌀 수입이 양국간 교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 태국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쌀 대금의 미결제 문제가 양자간 현안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양국간 경제협력사업 가운데 주목할만한 것은 태국의 록슬리사가 북한의 휴대전화 등 통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체신성과

태국 록슬리사는 「나선국제통신센터」 건립 및 51만 5천회선 규모의 통신망 확충사업에 대한 양허계약을 체결(1995)하였으며, 양자간 합영기업인 동북아전화통신회사, (NEAT&T)가 「나선국제통신센터」의 건설을 완공(2001)하였다. 록슬리사는 나진선봉지역의 휴대전화 통신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지니고 있으나 기술 및 자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4) 북한-말레이시아 관계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1973년 수교한 후, 「무역협정」(1979), 「항공운수협정」(1982), 「투자보호협정」(1998), 「비자면제협정」(2000) 등을 체결하였으며, 말레이시아 외무부장관(2001)이 방북하는 등 선린관계를 확대해 왔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태국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방문(2002. 2)하여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면담하고, 분야별 회담에서 「문화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종려기름 (Palm oli) 판매를 위한 수출신용대부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조인하였다. 그리고 2002년 11월에는 북한의 국가계획위원회 박남기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경제시찰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산업시설을 시찰하고 경험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5) 북한-싱가포르 관계

북한과 싱가포르와의 관계에서 주목할 사항은 양국간 합작 조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2001년 8월 북한 무역성은 싱가포르의 맥스그로

홀딩스(Maxgro Holdings)사와 북한지역에서 조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합작투자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 합작투자 합의서에 의하면 맥스그로사가 2,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북한의 무역성이 설립하는 북조선 합영회사가 30%의 지분을 갖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평양 근교 국유지에 2만ha의 오동나무림을 조성(8백만 그루 규모)하고 여기서 재배된 원목을 일본 등 외국으로 수출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싱가포르간 합작 조립사업은 북한이 서방의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확대하고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려는 자원의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북한은 가구, 합판, 악기제조 등 활용범위가 넓은 속성수인 오동나무를 재배하여 식수면적을 늘리는 한편 해외 수출을 통해 외화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 (6) 북한-베트남 관계

북한과 베트남은 1950년 수교후 일시 단교하였다가 1984년 대사급 외교관계를 재개하였다. 양국간에는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이 꾸준히 있어 왔으며, 『문화협조협정』(1973), 『상품유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1986), 『외무협조합의서』(1997) 등이 체결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인 베트남과 정치-외교관계를 돈독히 하는 한편, 경제적 실리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개혁-개방정책과 실용주의적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은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2001년 7월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베트남방문으로 북한-베트남관계는 전기를 맞았다. 양국은 『북한-베트남 공동 코뮤니케』

를 발표하여 경제·과학분야에서의 협력과 대외문제에서 공동보조 강화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를 계기로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및 한국-베트남 수교(1992) 등으로 다소 소원했던 북-베트남관계는 관계 개선의 기회를 맞았다.

2001년 10월 「북-베트남 제4차 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가 개최되어 1997년 이후 거의 중단된 양자간 무역 등 경제교류협력 확대 방안과 베트남 쌀 및 고무 등 원자재의 도입문제가 협의되었다.

2002년 5월 르엉 베트남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관계의 강화가 논의되었다. 르엉 베트남 국가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하고, 「민사 및 형사사건들에 대한 법률상 방조제공에 관한 조약」, 「소득에 대한 이중관세 및 탈세방지 협정」, 「해상수송에 관한 협정」,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무역성 사이의 맞바꿈 무역에 관한 합의서」, 「무역협정」 등을 조인하였다. 르엉 주석의 방북을 통해 베트남은 북-베트남간 전통적 친선관계 진전을 모색하는 한편, 북한은 베트남과의 관계진전을 통해 동남아 지역으로의 외교영역 확대와 경제협력 및 지원을 기대하였다.

2003년 북한이 경제관료 12명의 경제연수단과 최고인민회의 법률대표단(8월), 5명의 무역사절단(9월), 국가품질감독국 대표단(11월)을 베트남에 파견하는 등 양국간 경제교류협력이 진행되었다.

#### (7) 북한-라오스 관계

북한과 라오스는 1974년 수교하여 사회주의국가로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으나, 라오스가 199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실리외교를 추구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투자보장협

정」을 체결하고(1997), 라오스 건설공사에 대한 북한 노동자 송출문제를 협의(1998.11)하는 등 경제협력을 추구하면서 양국의 고위급인사의 상호 방문을 지속해왔다.

2001년 1월 라오스 외무부장관이 방북한데 이어, 7월에는 김영남 최고 상임위 위원장의 라오스 방문으로 양국간 관계정상화 계기가 마련되었다. 김영남 위원장의 라오스 방문시 북한-라오스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문화교류협정」, 「보건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2002년 5월에는 라오스 정부대표단이 방북하여, 양국간 관계 증진이 논의되었다.

#### (8) 북한-캄보디아 관계

북한과 캄보디아는 1964년 수교한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특히 캄보디아의 내전으로 인한 시아누크의 망명기간 중 김일성이 시아누크에게 평양에 사저를 마련해 주고 40여회 이상 방북 초청하는 등 수뇌부 간 개인적 신뢰가 지속되었다. 김일성 사후 시아누크는 3일간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프놈펜시의 한 거리를 「김일성 대원수 거리」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6년 캄보디아 주재 북 외교관의 위폐달리 사건, 1997년 한국-캄보디아 재수교 등으로 북-캄보디아관계가 소원해졌다.

북-캄보디아 관계는 2001년 7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캄보디아방문을 계기로 복원의 기회를 맞았다. 김영남 위원장의 캄보디아 방문시 채택된 「북한-캄보디아 공동코뮤니케」는 경제, 문화, 교육, 과학, 체육 등에서의 양국간 관계 증진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조 강화를 명시하였다.



## 라. ASEAN에 대한 통일외교역량 강화방안

### (1)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지지 확보

한국은 ASEAN과 동남아국가들로부터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동남아국가들에게 한국의 대북정책은 단기적으로 남북한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수단임을 인식 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은 ASEAN과 동남아국가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도록 권유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동남아국가들은 국제무대에서 독자적 외교영역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외교적 자율성과 경제적 잠재력은 북한이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증진을 중시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동남아국가들로 하여금 북한과의 외교관계 확대 및 경험추진이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지지를 얻도록 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안보문제로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이 일차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대북압박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북핵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중미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의 안보 및 경제에 대해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는 6자회담 및 남북대화 등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동남아국가들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동남아국가들의 지지와 긍정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일한국이 동남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결코 위협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 (2) ARF 및 CSCAP 활용

한국이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동남아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은 ARF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ARF는 ASEAN이 주도하는 아태지역 유일의 다자안보대화체로서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 ARF는 매년 1차례의 정례 외무장관회의와 수차례 개최되는 회기간 회의(Inter-Sessional Meeting),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다수의 회의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남아국가들에게 한국의 통일정책을 알리고 그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다.

북한은 2000년 7월 ARF에 가입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매년 열리는 외무장관회의에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각종 회의에 대한 참여도 매우 저조하다. 이것은 ARF와 같은 국제다자안보 포럼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북한은 각종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도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ARF를 정치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자신들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ARF에서 한국은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동시에 북한의 정치공세를 방어해야하는 미묘한 입장에 놓여 있다.

북한의 ARF 참여에 대한 한국의 기본입장은 북한을 국제적 다자기구의 장으로 끌어들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함께 ARF에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간 비공식적 협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측의 노력에 대해 북한은 이를 회피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여 왔다. 향후 ARF에서 한국과 북한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과 비공식적 협의의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ARF를 주도하고 있는 ASEAN 국가들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차원의 공식적 채널은 아니지만 민간 협의기구인 CSCAP도 ASEAN과 동남아국가들에게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유용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CSCAP은 아태지역의 안보정책 연구기관과 학자, 전문가 그리고 각국 정부관리들이 개인적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 차원의 다자안보대화체이며, 다수 동남아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CSCAP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각종 회의가 매년 다수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이를 통해 우리의 통일정책을 ASEAN 국가들에게 알리고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도 CSCAP에 일부 참여하고는 있으나, ARF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이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 CSCAP에 참여하여 국제적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북한과 동아시아국가와의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CSCAP회원국들에게도 북한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북한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

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3) 연구협력망 구축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 양성

아세안국가의 연구기관과 연구협력망을 구축하여 이들 기관과 다양한 형태의 인적 교류 및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아세안 국가들의 전문가와 한국측 전문가의 상호방문, 워크샵,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3개월 내지 6개월씩 상대방의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안보와 경제협력,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문제 등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영문으로 공동출판하는 작업도 추진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아세안국가 가운데 연구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하고 이들과 협력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ISEAS(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인도네시아의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말레이시아의 ISIS(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태국의 차리랑콘 대학과 타마사트대학, 필리핀의 필리핀 국립대학과 제 3세계 연구소, 베트남의 사회과학원 등이 협력대상이 될 수 있는 연구기관이다. 한국의 협력 주관기관은 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한국의 통일외교역량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방안 가운데 한 가지는 동남아 각국에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는 것이다. 현재 동남아 국가들의 지역전문가 가운데 한국이나 한반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인력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동남아국가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일차적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에게 일차적 관심사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이며,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가 사실상 부재하다.

따라서 한국은 무엇보다도 동남아 각국에 한반도 문제 및 한국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활용하여 동남아에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유능한 인재들을 한국에 유학시켜 한국 및 한반도 문제를 전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이와 관련 태국 등 일부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는 있으나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보다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여러 국가들의 많은 인재를 한국에서 교육시켜 동남아 각국에 다수의 한국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동남아 각국이 한국 및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를 다수 확보할 수 있어야,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그들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해 나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 (4) ASEAN 각국 여론주도층에 대한 한국의 통일정책 홍보

동남아에 있어서 한국의 통일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주요 고려사항은 동남아 각국의 여론 주도층에 대해 한국 통일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동남아 각국의 정치인, 관료, 외교관, 군부인사, 언론인, 학자, 기업인, 학생,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여론 주도 집단을 수시로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한국

의 통일정책과 비전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자국에서 한국 및 한반도 문제 해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은 이미 한국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분야별, 직업별로 초청인원을 다양화하고 개인별 초청과 집단별 초청 등으로 초청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몇 개 나라의 여론지도층을 동시에 초청하고 이들에게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한반도문제에 대한 종합적 시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4. 비동맹지역

##### 가. 비동맹운동과 한반도

비동맹운동(the Non-aligned Movement, NAM)은 동서 냉전의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력으로 존재하여 왔다. 비동맹운동은 1990년대 냉전이 무너진 이후에도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나름대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의 현실에 직면하여 비동맹운동도 새롭게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감이 증대되고 있는 북한은 비동맹에 대하여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어 비동맹을 대상으로 한 외교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치 현실 하에서 체제경쟁을 근간으로 했던 비동맹운동에 대한 통일외교 또한 새롭게 정립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본 글에서는 비동맹이 태동한 이후 비동맹운동이

지향하는 원칙과 목표가 국제정치 현실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하나의 연대세력으로서 비동맹운동이 원칙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조직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비동맹운동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정책에 대하여 북한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비동맹운동의 각종 조직과 회의에서 한반도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 비동맹운동 통일외교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비동맹운동에 대한 통일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인도와 아랍권의 대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비동맹운동의 태동과정과 목표

##### (가) 비동맹운동의 태동과정과 성격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비동맹운동을 대상으로 통일외교를 전개할 때 국제정치 현실에서의 비동맹운동의 위상과 북한-비동맹관계, 비동맹의 추구하는 원칙과 목표,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제정치현실의 변화 속에서 비동맹운동이 어떻게 태동되고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가 비동맹운동의 존립기반과 활동방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비동맹운동은 서구근대국제질서의 확산과 식민지 설립, 신생독립국의 대거 등장, 냉전이라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태동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정치무대는 서구에서 태동된 근대국가를 단위로 하는 새로

운 형태의 질서라고 할 수 있다. 비동맹운동의 태동은 이러한 서구중심의 근대국제질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제국주의시대 서구열강은 아시아, 아프리카에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적으로 신생독립국이 탄생하는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동서 진영간의 정치·군사적 대립이라는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 다수 신생독립국은 양 진영에 편승하거나 새로운 방향정립을 통하여 생존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 블록에 편승하는 외교전략 대신 비동맹, 중립노선으로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비동맹운동이 국제정치 연대로서 태동될 수 있었던 것은 비동맹운동을 주도하는 구심점으로서 강력한 지도자가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비동맹운동이 태동되고 하나의 연대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티토, 닷세르, 네루 등 비동맹 노선을 추구하는 강력한 제3세계 지도자간의 협력이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주지하듯이 비동맹운동은 1955년 4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회의(Asia-Africa Conference, 반둥회의)를 통하여 구체화되기 시작한다.<sup>95</sup> 반둥회의에서는 준비모임을 가졌던 세일론(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5개국을 포함하여 총 29개국이 참가하였다. 반둥회의를 계기로 구체화되는 비동맹운동은 닷세르와 티토가 61년 4월 26일 21개 비동맹국

95 이에 앞서 1954년 콜롬보에서 세일론(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버마,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이 모임을 갖고 아시아, 아프리카국가의 확대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수뇌들에게 비동맹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함으로써 보다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티토, 수카르노, 닷세르, 네루가 중심이 되어 총21개국 이 참가한 비동맹회의 준비모임을 거쳐 61년 9월 1일부터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25개 회원국(3개 읍서버국, ANC등 아프리카의 19개 민족해방전선도 읍서버로 참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비동맹운동은 비로소 하나의 연대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다시 말해 1961년 준비모임에서 비동맹 회원국의 자격, 정상회의가 제도화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비동맹운동이 연대세력으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심세력의 존재가 있었는데, 21세기 현재 비동맹운동에서 구심역할을 수행하는 세력이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비동맹운동은 양 진영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영역 내에서 자조, 자립, 갱생의 장을 추구하려는 국제정치연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 논리에서 볼 때 비동맹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불개입과 무관심이라는 소극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평등과 주권존중에 입각한 평화적인 국제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동맹운동은 연대적인 성격이 강하고 독자적인 사상적 체계를 지닌 이념이라기보다는 외교노선이라는 측면이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현실은 대소의 규모, 힘의 강약, 처지에 따라 국제질서에 대한 평가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장의 추구가 간단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동맹운동은 전체적으로 볼 때 협의를 통해 일정한 상호관계의 공통적 행위규범과 양태를 정립해나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제도적으로 성원들을 결속시킬 구조가 결여되어 있는 점은 비동맹체계의 취약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비동맹운동이라는 연대세력의 등장으로 전체체계와 하위 체계의 문제영역간에 일정부분 상호침투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나) 비동맹운동의 원칙과 목표

이상에서 보듯이 비동맹운동은 동서 진영간의 힘의 분배, 냉전 구조와 깊은 관련 속에서 태동되었다. 그런데 비동맹운동의 다수를 차지하는 신생 독립국들은 식민지 경험에 따라 서구식 국가체제에 애정이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방측과의 위화감 같은 반서방 감정이 이들 비동맹 회원국의 노선 정립의 중요한 사회적 기반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비동맹운동은 반제·반식민주의적 민족주의의 절규, 자조·자립·갱생을 위한 신국제경제질서의 강력한 요구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비동맹운동의 원칙과 목표는 반동에서 채택된 10원칙과 이러한 10원칙을 토대로 국제정치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1979년 아바나 제6차 비동맹 정상회의 채택된 정치선언문 제13항에서 상당히 구체화된다. 지금까지 각종 회의를 통하여 표출된 비동맹운동의 목표를 정리하면 군사블럭의 해체, 평화공존의 달성, 반식민지 운동의 지속적 추진, 남북문제의 해결, 남남문제의 해결(자원부국 대 자원빈국 간의 격차 해소)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동맹운동이 지향하는 주요 원칙과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비동맹 제국의 독립, 주권, 영토 및 안전의 보전
- 타국의 국내 및 대외문제에 대한 외세 간섭 및 무력 사용의 근절

- 독립적인 집단으로서 비동맹의 강화 및 세계적인 확대
-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인종차별 정책(Apartheid), 시오니즘 및 모든 형태의 팽창주의를 포함한 인종주의, 외국점령, 지배 및 패권주의의 철폐
- 외세지배 및 외국강점에 대항하는 민족해방운동의 지원
- 군비 경쟁 특히 핵무기 경쟁의 중지 및 국제관리하의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 달성
- 개발도상국의 개발 촉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불평등 해소 및 개발도상국의 빈곤, 기아, 역병, 문맹의 근절을 위한 신국제경제 질서의 수립
-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기구로서 유엔의 강화
- 강대국과의 협정, 군사동맹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연결장치의 해체 및 외군철수와 외국군사 기지의 철폐
- 새로운 국제관계 형성의 일환으로 매스미디어와 정보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국제질서 확립
- 비동맹제국의 문화유산의 재건, 보전, 발전과 비동맹제국간의 문화협력 증진 등

(다) 비동맹운동과 77 그룹과의 관계

1962년 7월 카이로에서 개도국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무역 및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1962년과 63년 유엔총회 중 75개 개도국 비공식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63년 11월 제18차 유엔총회 시 75개 개도국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1964년 3월 제1차 UNCTAD 총회에서 개도국은 공동보조를 통하여 총회 운영을 주도하였으며 상기 75개국에 한국, 월남이 참여하여 77그룹으로 호칭되었다. 그리고 1964년 6월 제1차 UNCTAD 총회 종료 시 77개 개도국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렇다면 비동맹운동과 77그룹은 어떠한 연관을 갖고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는가? 77그룹은 경제문제에 관한 개도국 공동이해를 토대로 선진국과의 협상에 의해 기존 국제경제관계의 개편을 시도하는데 반하여, 비동맹운동은 국제정치 관계의 재편을 통해 남북간 역사적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77그룹은 기본적으로 UNCTAD라는 유엔의 협상체제하에서 경제문제만을 다루고 있으나, 비동맹운동은 경제문제를 정치문제와 연결하여 정치적인 시각에서 취급하고 있다. 또한 남남협력을 통한 집단적 자립달성에 관하여 77그룹은 선진국과의 협상에 의존하는 간접방식을 취하는데 비하여, 비동맹운동은 개도국의 독자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직접해결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비동맹회원국이 77그룹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비동맹과 77그룹은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비동맹회의가 승인한 경제관계 결의안 및 경제협력 행동계획은 일반적으로 77그룹에 전달되어 UNCTAD 총회에서 토의되고 있다. 특히 비동맹그룹과 77그룹간에 합동조정위원회(JCC)를 수시로 개최하여 양 그룹간의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다.<sup>96</sup>

77그룹이 주관하는 개도국 정상회의가 2003년 4월 12일~14일 쿠바 하버나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세계화 및 상호 의존이 심화되는 국제여건 하에서 77그룹의 새로운 역할과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행동계획

96 외무부 국제연합국, “비동맹 운동 개황”, 집무자료 97-(집연), 1997.5.

을 논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주최국인 쿠바 정부의 빈객(Guest) 참가 초청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 개도국 정상회의 및 비동맹 외무장관 회의는 1996년 12월 OECD 가입에 따라 1997년 11월 77그룹에서 이탈한 우리나라가 대비동맹 및 대개도국 협력과 유대 강화를 적극 도모할 수 있는 국제무대가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77그룹과의 실질협력을 강화하여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비동맹 제국과의 협력 기반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 21세기 비동맹운동의 방향과 전망

### (가) 냉전기 시기별 비동맹운동의 방향

첫째, 시기별 국제정치 현실의 변화에 따라 반식민주의, 평화공존, 남북문제 등으로 비동맹운동 관심사의 무게 중심이 변화된다는 점이다.

먼저 비동맹운동은 반식민주의에 대한 관심사에서 출발하였다. 비동맹운동의 모체인 반동회의는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반식민주의가 주관심사였다. 그런데 베를린사태 등으로 인한 동서진영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서 1961년 베오그라드 제1차 정상회의에서는 반식민주의와 함께 평화공존문제가 중요한 토의주제로 등장하였다.

196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2차 비동맹정상회의는 국제관계의 모순을 냉전과 빈곤의 양 측면에서 파악하여 쟁점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쟁점의 전환에 따라 UNCTAD를 통하여 후진국을

개발할 것을 선진국에 촉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비동맹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1970년 루사카 제3차 정상회의부터는 부국과 빈국간의 남북문제가 비동맹운동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비동맹회의가 정치적 문제보다는 저개발신흥국들의 경제문제를 우선시하는 경제제전으로 변모를 시도하게 되었다. 남북문제는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치현실의 획기적 변화에 따라 현재 비동맹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루사카 정상회의에서는 77그룹의 제2차 각료회의 소집을 요구함으로써 비동맹모임과 77그룹의 연계가 공식적으로 성립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1973년 알제리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는 정치선언과 경제선언이 동시에 발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총론에서는 비동맹을 부르짖지만 각론에서는 비동맹국 자신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압력단체로 활용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이슈에 대한 무게중심의 변화와 더불어 1970년대 중반 이후 비동맹운동 내부에 노선과 경제상황을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먼저 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다. 비동맹운동은 창설 이후 반서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하여 왔다. 특히 1976년 콜롬보 제5차 정상회의를 전후하여 북한, 베트남, 캄푸치아, 라오스, 앙골라 등 공산국가들이 비동맹운동에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비동맹운동의 노선은 더욱 과격, 좌경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콜롬보정상회의에서는 온건세력이 대두하여 과거의 일방통행적 노선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1979년 아바나 제6차 정상회의에서 친소 공산주의 국가들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친서방 비동맹국가들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또한 카스트로가 주도

하는 친소노선의 강경파와 유고의 티토가 주도하는 온건파간에 논란이 심화되었다.

다음으로 비동맹 회원국 내 경제상황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자원보유국과 자원빈곤국의 갈등도 노골화되고 있다. 1983년 뉴델리 제7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비동맹운동은 탈이데올로기 경향과 함께 현실적인 실리노선을 추구하는 온건 중도세력의 발언권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노선에 따른 갈등뿐만 아니라 회원국간 내분에 비동맹운동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란-이라크전쟁 등 회원국간의 교전, 아프카니스탄, 캄보디아, 레비논, 앙골라, 나미비아 등 회원국이 관련된 지역분쟁에 대해 비동맹운동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개발 부진, 특히 중남미를 비롯한 악성부채 국가가 급증하면서 비동맹운동은 국제적 대의보다는 자국의 경제난 해결이 급선무로 등장하게 되면서 집단적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셋째, 비동맹회원국의 수가 증가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비동맹운동의 발언권이 강화되면서 국제기구 특히 유엔에서의 기존 판도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베트남전쟁, 앙골라사태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1국 1투표권의 구조로 되어 있는 유엔총회 등 국제기구의 의사결정을 비동맹운동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 동안 유엔을 주도하던 미국은 총회에서 비동맹운동의 발언권이 강화되면서 미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으로 유엔의 판도가 변하게 된다.

### (나) 탈냉전과 비동맹운동

냉전이 공식적으로 종식되기 이전인 1980년대 말부터 비동맹운동은 이념과 원칙 위주에서 현실적인 실용주의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노선을 둘러싼 갈등, 회원국간 경제상황의 차이, 회원국간 갈등 및 회원국이 관련된 갈등에 대한 대응에서의 한계 등의 상황 속에서 동서 긴장완화가 심화되면서 1989년 베오그라드 제9차 정상회의에서는 이념과 원칙위주에서 탈피하여 현실적인 실용주의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문제 이외에 제3세계의 외채,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빈부격차, 지구환경 등 비정치적인 문제가 토의되어 최종문서에 반영되었다. 베오그라드선언에서 식민주의, 인종주의, 패권주의에 대한 투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대결보다 상호협조와 대화를 중시하게 되었다. 특히 편견과 이데올로기적 독선을 배제하여 비동맹운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증대되었다. 아울러 환경보존 및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국제평화를 위한 유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탈냉전으로 가장 기본적인 존립근거가 소멸함으로써 비동맹운동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방향전환의 모색으로 회원국이 증가하는 등 비동맹운동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연대세력으로 존재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방향 모색은 1990년대 탈냉전과 더불어 더욱 가속화된다.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치 현실의 변화로 인해 태동의 정치적 배경이 소멸되면서 운동지도노선의 근간이 상실됨에 따라 비동맹운동은 급진적·이념적 운동노선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논의에 비중을 둬으로써 실리주의적 운동노선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199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0차 정상회의



에서는 탈냉전의 국제정치 현실을 반영하여 반핵·반제·반식민 등 투쟁이 약화되는 대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에 논의의 중심이 두어졌다. 서방세계에 대한 격렬한 비난이 급감하는 대신 서방세계와 제3세계간의 경제협력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1998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2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담에서는 폐막성명을 통하여 20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테러활동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 유엔 후원 하에 국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화를 확대하는 한편 유엔 개혁, 핵무기 축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상들은 경제문제와 관련, 개도국에 대한 부채탕감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선진국들이 2000년까지 국가총생산(GNP)의 최소 0.25%를 미개발 국가들에게 할당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아울러 세계은행의 자본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sup>97</sup>

2003년4월 8일-9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제13차 비동맹외무장관 회의에서는 98년 8월 남아공 더반 정상회의 이후 국제정세 변화를 비동맹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비동맹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유엔 개혁, 유엔평화유지활동, 군축, 테러리즘, 세계화, 빈곤퇴치 및 사회개발 등 제반분야에서 비동맹의 공동입장과 공동대처 방안을 모색하였다. 금년도 말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13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는 외무장관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라크 전쟁과 북한핵문제 등에 대하여 토의가 이루어졌다. 탈냉전 이후 비동맹운동 회원국들은 선진국의 정부개발원조(ODA)와 회원국간 경제협력과 무역거래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sup>98</sup>

97 『연합뉴스』, 1998.9.4.

탈냉전의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비동맹운동이 지향하는 주요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냉전 이후 비동맹운동은 유엔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1995년 10월 비동맹운동 회원국들은 유엔의 전면적인 개혁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유엔개혁과 관련하여 유엔안보리에 비동맹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사국수를 늘릴 것, 유엔총회의 역할 강화, 유엔평화유지활동 제한, 유엔재원을 빈곤퇴치에 더 많이 할당할 것 등 유엔활동의 민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sup>98</sup>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2차 비동맹 외무장관회의에서는 유엔안보리 개편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서 안보리 개편은 주권평등 및 지역형평성, 안보리 활동의 투명성, 책임성, 민주화 등 제반요소를 감안해 결정해야 하며, 비동맹 및 개도국의 낮은 안보리 진출률을 시정하고, 주권평등 및 지역형평성 원칙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을 11개국 이상 증설하지는 비동맹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안보리에서 강대국의 거부권 사용은 폐지를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해 축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00</sup>

둘째, 동서간의 정치문제에서 남북간의 경제문제로 존립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 증대하고 있다. 탈냉전의 상황에서 경제문제로 존립기반을 확고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냉전 시기와 비교하여 경제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경제관계에서 전투적이고 규탄만을

98 『연합뉴스』, 2003.2.20.

99 『연합뉴스』, 1995.10.21.

100 『연합뉴스』, 1997.4.9, 10. 현재 비동맹운동(NAM) 소속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은 시리아, 카메룬, 칠레, 가나, 파키스탄, 앙골라 등 6개국이다.

일삼던 추상론을 지양하고 협조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분쟁, 인종분규, 지구환경, 국가테러 등 현안문제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비동맹운동의 핵심기반이었던 냉전구조가 해체되면서 반서방주의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탈냉전기 비동맹운동은 개도국들간의 남남협력 강화, 선진국들과 타협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활로 모색에도 불구하고 비동맹운동이 안고 있는 한계는 무엇인가?

첫째, 비동맹운동은 냉전질서의 붕괴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각 회원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국내적 문제를 집단적 대안으로 엮어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비동맹운동이 창립되던 초창기와 달리 뚜렷한 지도자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쿠바, 북한, 니카라과, 이디오피아 등 강경국가들과 유고, 이집트, 인도 등 온건국가들의 대립도 전체적인 유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비동맹운동 국가들은 초강대국의 영향에 맞서는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신식민주의라는 정치적 이슈는 공통의 명분으로 지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 세계질서를 주도하자 강경파는 미제국주의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비동맹운동이 연대세력으로서 초강대국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치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동맹 회원국들의 국내정치 안정, 비동맹 회원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국제체제

규범의 정착과 확산, 갈등을 조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강력한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비동맹 내부 상황은 어떠한가?

먼저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대외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이익이 다양하여 실제로는 연대가 원칙처럼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비동맹국가 대부분이 취약한 국내정치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동맹운동의 연대와 효율성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끝으로 비동맹운동은 유엔이나 UNCTAD 또는 비동맹정상회의를 통하여 규범을 창출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절규하는 전 지구적 규범이 갈등조정을 위한 충분한 기초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지도 않으며 갈등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보다 중요한 측면으로 조정의 역할을 통하여 비동맹연대 세력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하더라도 초강대국이 갈등상황에 시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 비동맹의 지위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 (3) 북한과 비동맹운동

북한은 75년 8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비동맹외상회의에서 비동맹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sup>101</sup> 북한에서는 비동맹운동을 ‘빨럭불기담운동’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조선말 대사전」에서는 “그 어떤 빨럭에도 기담하지 않고 빨럭불기담운동에 참가하여 지주적으로 나가는 나라”라고 비동맹운동

---

101 리마회의에서 한국의 비동맹 가입은 부결되었다.

회원국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종류의 군사동맹에도 참가하지 않고 외국군대의 주둔과 군사기지 설치도 인정하지 않는 비동맹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북한은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상정하여 자신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특히 1978년부터 비동맹회의가 열리기 전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를 개최하여 회담에 임하는 입장과 방향을 정하는 등 비동맹에 대한 외교에 공을 들여왔다. 그리고 1979년 제6차 정상회의에서 비동맹 조정위원국으로 피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비동맹 식량 및 농업분야 조정국회의, 개도국 및 비동맹국의 식량문제 심포지움, 비동맹통신사 연합조정위원회 회의, 제1차 비동맹 및 개도국 교육 및 문화부장 회의, 비동맹 관개전문가 회의, 비동맹 체육상 회의, 제4차 비동맹 공보상 회의, 평양비동맹영화축전 등 조정국 회의 비동맹운동 관련 회의를 자국에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하여 오고 있다.<sup>102</sup>

1998년 5월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비동맹국 조정위 각료회의에 참석한 북한 부총리 겸 외교부장 김영남은 북한에 대한 연대성을 적극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sup>103</sup> 북한은 특히 21세기 들어 아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비동맹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1년 7월 김영남 위원장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관계를 개선하는데 주력

102 북한은 9월 1일을 비동맹의 날로 국제적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103 『조선중앙방송』, 1998.5.22; 『연합뉴스』, 1998.5.23. 제2차 비동맹정상회의가 남아공의 더반에서 1998년 9월 1일-2일 개최되었는데, 북한은 박성철 부주석이 참석하였고 한국은 비동맹외상회의, 비동맹각료회의에 이어 처음으로 정상회의에 게스트로 참석하였다.

하였다.<sup>104</sup> 그리고 2002년에는 김영남은 리비아, 시리아,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하였다. 특히 현재 비동맹운동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2002년 3월 김 위원장이 방문해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친선 협력 관계를 증진해오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평양 주재대사관 개설을 검토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또 지난해 정상회담때 마하티르 총리는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한 바 있다. 이는 비동맹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압박에 대처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북한은 비동맹운동을 자신의 대외적 지위와 발언권을 강화하는 주요 무대로 인식하고 있다.<sup>105</sup> 이와 같이 비동맹운동을 중시하고 있는 북한은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치 현실의 변화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비동맹운동이 전개되기를 바라고 있고, 각종 관영매체와 비동맹회의의 연설을 통해 비동맹운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탈냉전으로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어 대외적으로 고립이 심화되면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성향을 보여 온 비동맹운동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동조세력을 확보할 필요성으로 인해 비동맹운동과의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식 사회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정치와 이념문제를 중시하는 북한의 접근은 탈냉전 이후 경제 등 실리와 환경 등 주요 현안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비동맹운동의 지향점이 재조정되는 국제적 흐름으로 인해 호응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4 『연합뉴스』, 2001.7.14, 17, 20, 2002.7.19.

105 『로동신문』, 2003.8.25; 『연합뉴스』, 2003.8.25.

둘째, 비동맹운동이 지향해야 할 목표에 대해 세계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빨리불가담운동」이 견지하고 있는 독립자결권, 빨리불가담, 세계 평화 유지, 군축,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 등의 원칙들은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은 비동맹운동의 이념과 원칙에 대해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sup>106</sup>

셋째, 북한에서는 탈냉전의 상황에서도 비동맹운동이 더욱 필요한 존립근거를 제국주의 지배책동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반제지주는 비동맹운동의 숭고한 이념이므로 21세기 비동맹운동의 투쟁구호도 역시 ‘반제지주, 평화수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 책동이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반제투쟁을 중심으로 한 비동맹국가간의 연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제국주의와 자주성이라는 구도로 국제질서를 설정하고 이러한 대립적인 국제질서 하에서 반제투쟁을 위해 비동맹운동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반제지주역량의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온 세계의 자주회위업 승리의 근본담보”라고 규정하면서 비동맹운동이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반제 공동 투쟁 강화,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 남남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107</sup> 냉전이 종식된 이후 유고사태에서 보듯이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도처에서 내정간섭과 군사적 침략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반제투쟁을 통해서만 자주권, 민족적 존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sup>108</sup>

넷째, 북한은 탈냉전 이후 비동맹운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의 하나로

106 『연합뉴스』, 2001.9.2.

107 『로동신문』, 1996.9.1; 『로동신문』, 1997.2.18; 『연합뉴스』, 1997.2.19.

108 『연합뉴스』, 2000.9.2.

미국에 대한 단결 투쟁을 들고 있다. 특히 미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를 타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비동맹운동의 숭고한 이념과 근본 원칙을 견지하고 영향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반제·반미 투쟁에서의 공동보조를 요구하고 있다.<sup>109</sup> 구체적 예를 들면 1997년 9월 비동맹의 날을 계기로 북한은 이란, 리비아, 쿠바 등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에 반발하며 미국에 대한 비동맹의 단결투쟁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치 현실의 변화에 따른 비동맹운동의 존립근거를 남북관계에서 찾고 있다. 다시 말해 탈냉전으로 국제정치 국제질서가 동서관계에서 남북관계로 변화되었으므로 남북관계라는 국제질서 구도 속에서 남을 대표하는 비동맹운동이 냉전시기보다 더 유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비동맹운동은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비동맹국가간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운동의 공동전략을 실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10</sup>

여섯째,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비동맹운동의 존속근거의 하나로 세계화의 피해를 들고 있다. 세계화의 가장 큰 피해대상은 비동맹회원국인 개도국이므로 탈냉전 하에서 특히 ‘경제의 세계화’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는 공동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11</sup>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을 막고 경제적 자립과 민족적 부흥, 공동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자력갱생’ 원칙에 기초하여 ‘남남협조’를 강화 발전시키고 공동전략을 실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109 『로동신문』, 2003.9.1.

110 『로동신문』, 1999.9.1; 『연합뉴스』, 1999.9.2.

111 조선중앙방송, 1998.5.22; 『연합뉴스』, 1998.5.23.



다.<sup>112</sup> 다시 말해 시장개방을 통해 경제를 지배하려는 전략인 제국주의자의 '경제세계화책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남협조'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sup>113</sup>

일곱째, 북한에서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국제관계의 민주화 추진을 위한 공동행동에 비동맹운동이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114</sup> 비동맹운동이 유엔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였으므로 이러한 국제정치 현실이 국제관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비동맹운동은 유엔을 개혁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15</sup>

여덟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비동맹운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모든 핵·대량살상무기의 철폐, 비핵지대·평화지대 창설을 위한 공동투쟁, 군축, 외국의 군사강점과 군사기지철폐, 종주국들의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행동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16</sup>

#### (4) 비동맹운동과 한반도 문제

먼저 북한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고 비동맹 운동에 대한 외교를 전개하여 오고 있는가? 비동맹운동에 가입하면서 북한은 북한정권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정당한 정부임을 인식시키는 문제에

112 『연합뉴스』, 1998.9.2, 1999.9.2; 『로동신문』, 1999.9.1, 2002.9.1.

113 『연합뉴스』, 2000.9.2, 2001.9.2.

114 『연합뉴스』, 2000.9.18.

115 『연합뉴스』, 2001.9.2.

116 『연합뉴스』, 2001.9.2; 『로동신문』, 2002.9.1.

역량을 결집하여 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한 지지 확보, 남한의 국제적 고립, 경제협력 문제에 주력하여 왔다. 이를 위해 반제, 반식민주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원한다는 명분 하에 비동맹회원국 지도자 초청 및 방문, 친선협회나 친북단체를 통한 문화교류 및 인민외교, 경제적 지원, 민족해방기구에 대한 군사지원을 수행하여 왔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비동맹회의 회원국간에 노선분규가 생기자, 북한은 비동맹국가들의 통일단결과 경제협력 및 자주성을 내세우면서 반제 자주화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비동맹국가들이 대결보다는 협조를, 그리고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대폭 향상됨에 따라 비동맹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다.

1989년 9월 유고에서 개최된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 결의안」 초안에 대해 수정안 조차 제출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약화되었다. 북한은 1992년 9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10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도 비동맹운동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5년 10월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제11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 「한반도문제 결의안」에 대미 평화협정체결내용 등을 삽입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회원국들의 지지가 전혀 없어 자신의 주장을 자진 철회하였으며, 오히려 미·북제네바 및 퀴라룸푸르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북한에 촉구하는 최종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동맹운동 각종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슈가 국제정치현실의 변화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196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에서 ‘분단국의 외세 간섭 없는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면서 한반도 문제가 비동맹운동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비동맹운동 회원국의 면모를 고려할 때 1970년대 비동맹운동 내에서의 한반도 문제는 북한의 입장이 강력하게 반영되는 형태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70년 루사가 제3차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여 주한외군은 국가독립과 국제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언급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주한미군 문제가 비동맹운동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2년 조지타운 외상회의, 1973년 알지에 제4차 정상회의, 1975년 아바나 조정위 외상회의에서 외세개입 중지와 외군철수 요구, 유엔사 해체 요구,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반대 등의 이슈가 논의되었다.

특히 1975년 리마 외상회의에서는 북한이 비동맹운동의 정식 회원국이 되면서 이전의 논의 이슈 이외에 외세개입을 배제한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7·4 공동성명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등 북한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는 형태로 한반도 문제가 비동맹운동 내에서 거론되었다. 이 때부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7·4공동성명에 대한 지지가 비동맹운동 내에서 지속적으로 수용된다. 그런데 7·4공동성명의 통일3원칙은 북한의 해석이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1976년 콜롬보 제5차 정상회의에서는 7·4 공동성명 원칙에 따른 북한의 외세간섭 없는 통일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지주’를 외세간섭 배제와 주한미군 철수로 해석하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제5차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이 정식 가입한 이후 최초로 개최되어서인지 한반도 조항 중 가장 길고 반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1978년 아바나 조정위 외상회의, 1978년 베오그라드 외상회의,

1979년 아바나 제6차 정상회의, 70년대 후반에 개최된 비동맹회의에서는 이전에 거론되었던 외군철수, 유엔사 해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요구, 7·4 공동성명 원칙에 따라 외세 간섭 없는 통일 지지가 반복되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책동을 규탄하는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

1980년대에도 대체로 북한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다. 1982년 아바나 조정위 외상회의, 1983년 뉴델리 제7차 정상회의, 1985년 루안다 전체 외상회의, 1986년 하라레 제8차 정상회의, 1988년 니코시아 전체 외상회의 등 80년대 개최된 비동맹회의에서는 7·4 공동성명 원칙에 따라 외세를 배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통일 노력 지지, 외군철수 희망 배제한 통일 지지, 외군철수 희망의 주된 결의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상호 신뢰와 화해, 단계적이고 균형 있는 군축이 결의 내용에 포함되고 있다.<sup>117</sup> 그런데 1980년대 말 동서 간에 긴장완화가 본격화되는 1989년 9월에 개최된 아크라 전체 외상회의에서는 7·4 공동성명에 기초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 추구를 지지한다고 내용이 온건해지는 동시에 종전의 '단계적 군축 및 외군철수' 등의 문구가 삭제되었다. 특히 한반도 문제가 독립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지역 분쟁(아시아 지역) 항목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냉전이 종식되는 90년대에 개최된 비동맹회의에서는 한민족의 통일열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이 지속되는 상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일방적 입장이 아닌 남북대화 등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92년 9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10차 정상회의에서는 7·4 공동성명의 3원칙에 입

---

117 예외적으로 1981년 뉴델리 전체 외상회의에서 북한은 한반도 조항 토의를 가진 철회하였다.

각한 통일 지지, 92년 2월 남북 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환영하는 내용으로 결의안이 구성되고 있다. 94년 6월 카이로에서 개최된 외상회의에서는 남북 기본합의서 원칙에 입각한 한국민의 통일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여 7·4공동성명과 더불어 남북 기본합의서가 통일의 원칙으로 추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리는 현안을 반영하여 한반도 핵문제는 IAEA와의 지속적인 협조 하에 관련 당사자간의 대화 및 협의, 특히 미·북한 회담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의제로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1990년대에도 여전히 비동맹운동에서 외국군사기지의 철폐를 강조하고 있지만 탈냉전 이후 한국에서의 외국군(미군) 철수가 결의안에 채택되던 형식에서 변화하고 있다. 1992년 제10차 정상회의에서 연형묵 총리는 연설을 통해 통일문제 해결의 근본문제는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지만 7·4공동성명 및 남북기본합의서의 강조를 내용으로 하는 문안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의 회의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95년 4월 반등 조정위 각료회의, 95년 10월 카르타헤나 정상회담에서도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원칙에 입각한 한국민의 통일 노력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하여 94년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상황을 반영하여 미·북한 합의 및 기타 관련 합의문서의 전면적 이행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97년 4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12차 비동맹 외상회의에서는 90년대 각종 비동맹회의에서 채택된 내용이 반복되는 가운데 '분단지속 상태에 대한 우려표명' 문구가 삭제되는 대신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 달성 희망' 문구가 추가되었다.<sup>118</sup>

2002년 4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된 비동맹 조정위원회 자료회의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채택되었다. 동 문안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남북한의 공동 번영과 동북아시아 및 세계평화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남북한 통일이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90년대와 마찬가지로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통일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119</sup>

금년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13차 비동맹정상회의에는 김영남 위원장과 백남순이 참석하였는데, 북한핵개발 문제가 주요한 토의의 하나로 상정되었다. 북한은 대북한적대정책을 철회하도록 미국에 요청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담기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sup>120</sup> 그러나 비동맹운동회의에서 결의안에 한반도 핵위기 상황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을 반영시키려던 북한의 의도는 회원국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일부 지지를 획득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동맹운동 회의에서 역으로 NPT 탈퇴결정을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21</sup> 당초 북핵 관련 결의 초안에는 “조선민주주의인

---

118 『연합뉴스』, 1997.4.10. 이상 1997년 이전 각종 비동맹회의에서 논의된 한반도 문제 관련 내용은 외무부 국제연합국, “비동맹 운동 개황”, 집무자료 97-(집연), 1997.5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92년 5월 발리 조정의 자료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최종문서 채택되지 않았다. 다만, Press Communique로 발표되었다.

119 『조선중앙방송』, 2002.5.3; 『연합뉴스』, 2002.5.3.

120 『연합뉴스』, 2003.2.20.

121 『연합뉴스』, 2003.2.21, 22.

민공화국의 핵확산금지조약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북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삭제되었다. 한편 한반도 핵위기 상황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 북한의 안보 보장과 관련된 문구도 반영되지 못하였다. 결의 최종안은 “최근 한반도 사태의 진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결의안은 북핵 사태 해결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이 선의의 표시로 북한의 NPT탈퇴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22</sup> 결과적으로 2월 26일 발표된 결의안에는 참가국들이 중립적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북한의 NPT 복귀를 촉구하는 미국 측 견해와 북-미 직접 대화를 강조하는 북한측 견해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동맹회의라는 점에서 참가국들이 대체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비난하였으며 북한과 이란 및 이라크 등을 ‘악의 축’이라고 지칭하는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123</sup>

한편 비동맹운동은 미국이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지칭하는 표현인 ‘악의 축’ 용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였다. ‘악의 축’이라는 용어는 어떤 특정 국가가 테러리즘에 대처한다는 구실아래 다른 국가들을 겨냥해 사용하는 “일종의 심리적, 정치적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어떤 국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기준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을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억압적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였다.<sup>124</sup>

122 『연합뉴스』, 2003.2.24.

123 『연합뉴스』, 2003.2.26.

124 『연합뉴스』, 2003.2.25.

(5) 비동맹운동에 대한 통일외교정책 방향

(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정확한 실상 전달

북한이 정식 회원국이 된 이후 정상회의 등 각종 비동맹운동 조직 내에서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서 지속적으로 취급되어 오고 있다. 체제경쟁에 기반한 통일외교를 지양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비동맹운동에 대한 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동맹운동에 대한 통일외교는 정상회담 이후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전파하는 데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비동맹운동에서 영향력이 큰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아랍권,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권역을 나누고 권역별로 특정국가에 대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쿠바 등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보다는 한반도 통일의 현주소, 북한의 실상,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동맹운동의 정상회의, 외상회의 등을 주관하는 의장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나) 비동맹 회원국 내 한반도 전문가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비동맹운동은 연대로서 여전히 국제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정확한 실상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동맹운동 내부에서 동북아시아,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인적 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교의 유학생 유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주요 연구기관이 권역별로 연계를 맺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권역별 주요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기적인 포럼이 구성될 경우 한국과 권역을 순회하면서 학술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비동맹회원국 내부에 지한, 친한인사의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는 비동맹 회원국 내부의 언론 매체, 교역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동맹회원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언론사의 특파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sup>125</sup>

#### (다) 협력사업의 강화 및 교역을 통한 연계 확대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비동맹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감안할 때 이념과 원칙 일변도의 구호투쟁에서 실리주의가 더욱 중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동맹운동 내에서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수준의 격차를 축소하지 않고서는 국제적 안정을 이룩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비

125 이란권에는 연합뉴스 특파원, 중앙일보의 중동전문기자가 있다.

동맹운동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통일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동맹회원국에 대한 협력사업의 강화 및 확대가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ODA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연결 고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동맹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비동맹회원국을 위한 기금에 적극 참여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일외교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비동맹운동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및 나미비아 불법 점령과 전선국가 침공에 대한 투쟁지원을 위해 설립한 AFRICA 기금(Action For Resisting Invasion, Colonialism and Apartheid Fund)에 참여해 바 있다. 1987년 3월 20일 인도 라지브 간디 수상이 기금 참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받고 1988년 1월 4일 1988년부터 92년까지 5년간 100만불 상당의 현물을 공여키로 결정하고 인도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1989년 6월 우리나라는 모잠비크에 20만불 상당의 현물 원조를 공여하였다.

그리고 비동맹회원국과의 교역을 연계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지지를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무지한 비동맹회원국 국민들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된다. 다시 말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로 직결되는 경우 대부분인 바,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집트 등에서의 한국상품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바, 이러한 것을 고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외교 강화

향후 비동맹운동과 관련한 통일외교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최우선적 주요 이슈는 북한핵문제를 들 수 있다. 2003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3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 보듯이 핵문제와 관련되어 비동맹진영 내부에서도 상당한 견해차가 표출되고 있는 바, 핵문제와 대량살상무기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비동맹진영의 지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태도, 특히 북한핵문제에 대한 태도를 비동맹진영 국가별로 성향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인권을 들 수 있다. 금년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북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인권문제는 유엔에서 지속적으로 공론화될 전망이다. 국민의 정부 이후 인권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서방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 많지만 다자외교에서 비동맹국가의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2003년 4월 16일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하여 표결처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방과 비동맹진영간의 치열한 공방은 벌어지지 않았다.<sup>126</sup>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한 비동맹회원국들의 지지가 확산될 경우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하여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북한에 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인 한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공

126 『연합뉴스』, 2003.4.17.

문화될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비동맹운동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외교전략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 탈냉전 후 비동맹운동의 흐름을 고려한 통일외교전략의 수립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념보다는 실리와 환경 등 주요 현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비동맹운동은 방향을 재정립해나가고 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우호적인 세력으로 비동맹운동을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면서도 이념을 중시함으로써 탈냉전 이후 비동맹운동의 전체 방향과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통일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동맹운동의 전체적인 재정립방향과 북한이 추구하는 목표와의 괴리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세계평화를 강조하는 비동맹운동과 관련하여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한 평화변영정책이 비동맹운동의 흐름과도 부합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평화변영정책이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순히 한국을 지지하는 수적 우위의 확보라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동맹운동 회원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변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홍보하고 이를 토대로 비동맹운동 회원국들이 북한을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적극적 방식의 통일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 (바) 외교력 강화를 위한 외교관 교육의 강화

비동맹운동 정회원국은 114개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각 회원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외교관들을 통하여 주재국 내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우선적으로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영어 이외에 현지 언어 구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주재국의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한 홍보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영어보다 현지 언어가 더 유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라크의 예를 보더라도 북한과 대비하여 한국의 외교관들이 현지 언어구사능력이 뒤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비동맹회원국에 파견되는 외교관에 대한 현지 언어 능력을 배가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나. 인도의 대한반도 정책: 비동맹회원국 사례연구(1)

인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지배,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국가의 분열, 이어진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파괴를 겪었으며, 자주국가로서의 독립도 이러한 엄청난 시련 위에 이루어졌다. 식민지 지배가 남긴 복잡한 후유증은 아직도 인도의 평화, 안정과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체험을 바탕으로 자주독립국가가 된 인도의 지도자들은 “주권국가들의 평등성”이란 세계관에 기초하여 탈식민지화, 형평성이 있는 세계질서의 구축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의 연장선 상에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였던 냉전의 시기에 인도는 “비동맹의 노선”(a policy of

non-alignment)을 채택하였고 이를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인도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정책도 여기에 종속되었다.

인도는 남북한에 대하여 등거리외교를 지속하고 있다. 탈냉전의 시기에 한국과 이해관계의 폭을 넓히고 있으나, 이는 정치이념 보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한반도에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았던 인도는 현재 사할린 유전에 대한 투자가 말해주듯이 동북아 차원에서도 경제적 이해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투자와 무역의 증진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국가이익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도의 대한반도정책이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27</sup>

#### (1) 인도의 대한반도 기본정책

한반도와 인도의 문화적, 종교적, 지적 접촉은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식민지배 하의 근대에 이르러 양국간의 긴밀한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128</sup> 인도가 한반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한국전쟁

127 이 글의 준비를 위해 연구자는 2003년 9월 16일 인도 뉴델리의 “정책연구소”(Center for Policy Research)를 방문하여 한반도 관련 워크숍을 가졌다. 여기에 참여한 인도측의 전문가는 CPR의 소장 와드브(Charan D. Wadhwa)와 쿠리안(Nimmi Kurian), 나이르(K. R. G. Nair), 네루대학교의 크리쉬난(R. R. Krishnan), 우탐(Jitendra Uttam), “국방연구·분석연구소”(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의 콘다팔리(Srikanth Kondapalli) 등이었다.

128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민족지도자들이 타고르(Rabindra Nath Tagore)를 만났을 때 타고르는 조선을 “동방의 등불”(Lamp of the East)이라고 시적으로 표현하였다.

의 발발이었다.

인도 자체가 분단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인도는 한반도의 분단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불행으로 인식하여 남북한 모두를 인정하는데 주저하였다. 인도의 수상 네루(Jawaharlal Nehru)는 인도의회에서 “우리는 남북한의 분단이 오래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며 우리가 분단을 확인하지 않을수록 좋을 것이다.”라는 이유로 남북한 어느 정부도 인정하지 않았다.<sup>129</sup>

한반도의 분단이 미국과 소련간의 갈등에 의한 결과임을 인식한 인도는 유엔에서 한반도문제에 관하여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였다. 1947년 9월 17일 판디트(Vijayalakshmi Pandit)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와 관련하여 행한 다음의 연설은 인도의 대한반도정책을 잘 보여준다. “전세계를 뒤덮고 있는 불길한 징조 가운데 분명한 것은 두 강대국이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인도는 상이한 집단의 어느 쪽에도 우리 자신의 전체를 동일시하거나 우리 자신을 체제적으로 동화시키려는 의도가 없다. 반대로 우리는 그들간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가를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그러한 목적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sup>130</sup>

한반도에 직접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았던 인도가 한국문제를 대하는 입장은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였다. 그리고 유엔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인들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였다.

129 India, *Parliamentary Debates*, vol. 5 of 1950, pt. 2, 1950.8.3, col. 222.

130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이하 UNGAOR), session 2, *plen. Mtgs.*, vol. 1, pp. 134, 137-8.

(2) 유엔에서의 인도의 입장

유엔총회에서 한반도문제를 의제화 하려고 하였을 때 인도는 소련과는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1947년 10월 30일 인도의 유엔대표 센(B. R.Sen)은 한반도문제가 총회의 의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근거로 소련이 주장한 유엔헌장 107조가 강제적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한반도문제에 관한 논의가 무한정 연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대하였다.<sup>131</sup> 또한 소련이 결의안 초안에 담았던 한반도의 점령군이 즉각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대하였다. 인도는 한반도에 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조치가 한반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한편 인도는 한반도에 민족정부를 구성하고 그 정부가 자체의 국가안보를 위한 군을 구성함과 동시에 점령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미국의 제안도 애매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인도가 마소의 타협안으로 1947년 10월 30일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반도에서의 총선이 남과 북의 각 지역에서가 아니라 유엔임시위원회(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의 감독과 통제 아래 한반도전역에 걸쳐 실시되어야 한다.
2. 선거는 어떠한 정치적 차별이 없이 모든 성인의 선거권을 바탕으로 비밀투표의 형태로 실시되어야 한다.
3. 민족정부가 구성되는 즉시 자체의 국방력을 건설하고 여기에 귀속되

---

131 UNGAOR, session 2, 1st Cttee, p. 285.



지 않은 일체의 모든 군사력은 해체되어야 한다.

4. 점령군의 철수를 위한 명확한 시간표가 확정되어야 한다.

미국은 넓은 의미에서 인도의 입장을 받아들였으나, 한반도 전역에 걸쳐 총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인도를 유엔한국임시위원회(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의 일원으로 추천하였다.

한편 유엔에서는 미국의 입장이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게 되어 1947년 11월 4일 유엔총회에서 찬성 46, 기권 4, 반대 0으로 미국의 제안이 유엔의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다. 소련은 미국의 안에 반대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련의 입장은 한국의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떠한 한국문제도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유엔결의안을 토대로 유엔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3) 유엔한국임시위원회에서의 인도의 입장

1948년 2월 4일 인도의 메논(K.P.S. Menon)이 만장일치로 UNTCOK의 상임의장으로 선출되었다. UNTCOK이 활동을 시작하였을 때 북한은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지 않은 등 비협조적이었고 이에 메논은 유엔총회의 회기중 회의에서 소련과 북한당국의 비협조가 UNTCOK의 활동에 중대한 걸림돌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그는 1948년 1월 21일 서울에서 라디오방송을 통해 한국민들에게 UNTCOK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위원회는 한반도 전체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단일국가가 있다면 한국이 바로 그러한 나라이다.

여러분 모두는 같은 민족이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우리 위원회는 38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제거되어야 할 정치적 기형이다. 우리의 눈에는 한국은 하나이며 분단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이것이 모든 한국민의 가슴에 담긴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라 확신한다.”<sup>132</sup>

그러나 문제는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었으며, 이를 유엔의 인도 대표였던 라우(B. N. Rau)가 UNTCOK의 활동결과를 네루 수상에게 보고하는 다음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에 걸친 미국과 소련간의 적대가 현재의 문제를 어렵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다. 한국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려는 미소의 새로운 노력이 없이는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해 확인된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진전도 이루어질 수 없다.”

UNTCOK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은 UNTCOK의 입국을 불허하였다. 이때 위원회는 남한지역에서만 총선을 치루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 전역에 걸쳐 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만 하였다. 이 때 몇몇 UNTCOK 위원들은 만약 한반도의 어느 한 지역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어 정부가 구성될 경우 그 정부를 한반도의 민족정부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인도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였다. 다만 인도는 남한지역에서 자유로운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남한내 총선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 선거가 실시되었고 남한정부가 구성되었다.

UNTCOK는 수립된 남한정부가 북한정권과 대화를 통해 통일을 추진

---

132 UN Doc. A/523, 1948.29, p. 20.

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이 대화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인도는 남한정부가 한반도를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1948년 12월 7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한반도 전체의 독립은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독립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엔총회는 이러한 목적의 실현전망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결의안도 채택해서는 안된다. 3. 유엔총회는 남북한 양 지역간의 화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sup>133</sup>

1948년 12월 21일 유엔총회는 UNTCOK의 활동을 허용한 한반도의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법적 관할을 행사하는 합법적인 정부,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는 결의를 찬성 48, 반대 6, 기권 1로 통과시켰다. UNTCOK는 해체되고 대신 유엔한국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UNCOK)가 구성되었으며, 미국은 1949년 1월 1일 대한민국정부를 인정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소련은 이를 인정하였다.

#### (4) 한국전쟁시 인도의 정책

한국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이를 보는 인도의 시각은 네루 수상이 의회에서 행한 다음의 연설에서 파악할 수 있다. “과거의 역사가 어찌되었건간에 명백하게 분명한 것은 북한이 전면적이고 잘 준비된 침공(invasion)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건 오직 침략(aggression)으로만 묘사될 수 있다.” “침략은 남한에 대하여 북한에 의해 일어났다. 그

133 UNGAOR, session 3, 1st Cttee, pt 1, p. 973.

것은 잘못된 행위로서 비난되어야 하고 저지되어야 한다.”<sup>134</sup>

1950년 6월 29일 인도의 의회는 네루 수상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한 두 개의 결의안(1950년 6월 25일, 27일)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인도는 한국이 침략군을 격퇴할 수 있도록 유엔군의 단일한 지휘 아래 병력과 물자를 지원하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7월 7일 결의안에 대한 투표는 기권하였다.

앞서 두 개의 결의안에 대한 찬성과 군사적 지원에 대한 기권이란 다소 상반된 인도의 입장에 대하여 인도는 아시아의 한 국가로서 아시아의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원하지 않은 결과이며 그것이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희망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인도는 7월 29일 의료진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인도는 유엔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는데 반대한 국가중의 하나였다. 인도는 전쟁이 북한군이 38선 이남으로 침공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북한군이 38선 이북으로 격퇴된 이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북한군이 패퇴하였기 때문에 유엔군이 북한에 대하여 이제는 관대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인도는 주장하였고, 이러한 인도의 입장은 참전 유엔국들간에 많은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다른 한편으로 인도는 한반도문제에 관하여 중국이 배제되어서는 안되며 중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어떠한 한반도문제 해결안에 대하여 중국은 거절할 정당한 명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국이 1950년 11월 한국전쟁에 전면 개입하였을 때 인도는 전쟁의 중단을 위해 다른 중립국들과 함

---

134 India, *Parliamentary Debates*, vol. 5 of 1950, pt 2, 1950.8.3, col. 223, 236.

게 중재에 나섰다. 1950년 12월 5일 인도는 다른 10개 국가들과 더불어 중국과 북한이 38선을 넘지 않도록 호소하였으나, 유엔군과 마찬가지로 공산국가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다만 인도는 전쟁포로의 처리와 관련하여 중립국송환위원회(Neutral Nations Repatriation Commission)의 위원국 겸 의장국이 되었다.

#### (5) 냉전기 인도의 대한반도 정책

인도는 냉전의 의미와 성격, 그 파급효과에 대한 자국의 인식과 한국에 대한 유엔의 정치적, 군사적 행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확연하게 분리하여 고려하였다. 그에 따라 한국전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지 않았다. 다만 의료진과 복구단을 파견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독립을 유지하는데 인도가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의지를 표출하고자 하였다.

인도는 한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는 유엔총회의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한국과 외교관계를 즉각적으로 수립하지는 않았다. 인도는 한국과 특히 60년대 이후부터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도 국가로서 인정하였다. 인도는 한반도에 특정한 정치적, 이념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자국이 한반도문제에 공정하게 접근한다는 인식을 한국에 주고자 하였고, 한반도문제에 한국의 이해에 반하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북한과의 수교가 한국과의 다양한 관계 발전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6) 탈냉전기 인도의 대한반도 정책

인도는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 중국의 개방 등 변화된 국제정치·경제적 환경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인도의 주변국들에게 미사일기술을 판매하고 이전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판매가 한반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체의 평화, 안정, 번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인도는 한국의 대응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현재 양국은 양자관계를 크게 증진시킨다는데 합의하였으며, 그것이 변화된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의 이해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길이라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인도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다른 한편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다양화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동아시아에 커다란 관심을 두는 이른바 “Look East”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아시아경제공동체”(Asian Economic Community)의 구성을 주장하는 등 ASEAN과의 협력도 확장하고 있다. 인도는 북한의 핵위협이 이러한 인도의 국가이해에 배치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한반도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7) 한반도 관련 전문가 및 기관

인도에는 한반도문제를 연구하거나 그것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학술기관, 정책연구소, 언론매체가 있다. 대표적인

학술기관으로 먼저 뉴델리 소재 네루대학(Jawaharlal Nehru University)을 들 수 있다. 네루대학은 한반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고 연구기회를 제공하는 남아시아내 유일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제연구학부(th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에 개설된 한국연구프로그램(Korean Studies Programme: KSP)이 특히 한국에 관한 인도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KSP는 한국 내외의 저명한 한국학자 및 기관들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대학들과 상호 방문 및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0~91년간에는 한국으로부터 50여명의 교수와 600여명의 학생들이 네루대학을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KSP에는 1972년 4월부터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한국의 정치, 경제, 역사, 기술, 대외관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연구가 수행되어 학위논문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네루대학의 학생들도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였다.

한국연구를 좀더 심화시키기 위해 네루대학에서는 한국어프로그램(Korean Language Programme: KLP)도 개설되었다. 1971년부터 한국어강좌가 개설되었으나, 네루대학은 인도-한국간 문화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76년부터 한국에서 저명한 한국어교수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1995년부터는 3년의 학사과정, 5년의 석사과정을 도입하여 KLP는 학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표 1>은 네루대학교의 KSP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및 학위제목을 요약한 것이다.

델리대학교(Delhi University)도 2002년부터 아시아연구프로그램(Asian Studies Programme)의 한 부분으로서 한국연구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일단적으로 우선 한반도문제에 관한 학술적 흥미를 제

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위협과 벵골 핵 실험, 인도의 인접국인 파키스탄에 대한 핵탄두가 운반가능한 미사일판매 등의 노력은 인도에 커다란 우려감을 주었다. 인도는 북한과 파키스탄간 군사적 유대관계의 증진이 중국의 후원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1998년 인도는 핵실험을 하면서 그 이유로 이스라마바드-평양-북경간에 사실상(de facto)의 군사동맹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인도의 북한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켰으며, 현재 정책연구소(Center for Policy Research: CPR), 국방연구-분석연구소(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and Analyses: IDSA), 인도 국제경제관계연구협의회(Indian Council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ICRIER), 비동맹 및 기타 개발국가들을 위한 연구 및 정보체계(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for the Non-Aligned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RIS) 등이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표 23> 인도 네루대학교 한국연구프로그램 석·박사 일람**

Korean Studies Program, Centre for East Asian Studies,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Jawaharlal Nehru University, New  
Delhi, India.

석 사			
번호	이름	년도	학 위 제 목
1	Prakash Nanda	1984	The Security Re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uring the 1970s
2	D.K. Tiwari	1985	Reunification of Korea: A Study of the Perspectives and Proposals of North and South since the 4 July 1972 Joint Statement
3	Neeraj Rawat	1988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of America Economic Relations: 1961-1985
4	Preeti Dubey	1988	Energy Resources and Economic Plan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1962-1985
5	Jitendra Uttam	1992	Republic of Korea's Foreign Policy during the Sixth Republic
		2002	Ph. D(SNU, Korea): The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Regulations: Korean and Indian Experiences in the Comparative Perspective
6	Rajeev C. Narayan	1993	Macro Economic Plan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tages and Strategies
7	Sanjay Sharma	1993	The State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 Case Study of the Electronics Sector since 1969
8	T.S.	1996	Political Transformation in South Korea

	Chandersekhar		since 1992 Presidential Election
9	Chinamay Pattnaik	1996	South Korea-China Relations since August, 1992
10	Hriday Narayan	1997	Emergence of the Republic of Korea: Peninsular and International Dimensions
11	Bipin Kasulia	199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Relations since 1991
12	Kamal Kishore Panda	1998	Role of Higher Education in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962
13	Chittranjan Das	1999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Relations since 1988: Political Security and Economic Dimensions
14	Rupa Bagga	1999	Globalization of the South Korean Economy and its Impact on Korea-India Economic Relations
15	Vimal Anand	1999	The State and the Financial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16	Sandeep K. Mishra	2000	North Korean Nuclear Policy and Programme
17	Levish Leivon	2001	Women Workforce and the Pattern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1962-1996
18	Anit Kumar	2002	Transition to Democracy in Republic of Korea: Process and Pattern since 1987
19	Brajesh Kumar	2003	Korean Multinationals and India's Electronics Industry: A Case study of Samsung and LG
20	Jaswant Singh Kain	2003	Opening of North Korea's Nuclear Energy Sect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mensions

박 사			
번호	이 름	년도	학 위 제 목
1	Kamal Kishore Panda	2003	Technological Capabilities for Industri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962
2	Vimal Anand	to be submitted	Political Economy of the Korean Crisis, 1977-98 Repercussions and Responses
3	Sundeeep Kr. Mishra	to be submitted	Korean Peninsula in the Post-Cold War Era: A Security Paradigm

다. 아랍국들의 한반도 인식: 비동맹회원국 사례연구(2)

일반적으로 한민족과 중동아랍인의 접촉은 신라시기부터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그래서 아랍·중동인들은 한반도를 금이 많고 물이 맑은 지역이라고 그들의 책에서 소개한 바 있었다.

그런데 한반도가 남북한으로 분단되면서 한민족과 아랍·중동인들의 접촉과정에서 아랍·중동국가들간 한국과 북한에 대한 친소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친미 아랍국가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체제의 기반으로 하는 북한을 멀리하고 친한국 성향을 나타냈으며, 반면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등과 같은 아랍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친북한의 성향을 보여왔다.

한국의 아랍·중동에 대한 인식은 1973년 제1차 석유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한국정부가 아랍·중동에 대해 적극적

인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인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중동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랍국가들도 한국인과 한국정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 이라크 전쟁을 통해 미국은 우방인 한국에게 전투병력을 파병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한국의 경우 파병으로 인해 원유의 도입선, 건설 및 상품수출의 시장인 이라크와 아랍지역에서 일어날 반한(反韓)감정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아랍국들이 일반적으로 한반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이집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135</sup>

#### (1) 아랍의 한반도 인식 통로

아랍의 언론매체, 현지의 연구기관, 외교통로 및 각종 교역단체들은 아랍인들이 한국, 북한 및 한반도문제를 인식하는 주요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먼저 아랍의 언론매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 아랍인들은 한국, 북한 및 한반도문제에 대하여 거의 무지에 가깝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아랍인들은 일반적으로 한국과 북한의 사정에 관하여 현지에 있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고 있다. 그러나 아랍의 언론매체는 특파원들을 한반도에 파견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외신에 의존하고 있다.<sup>136</sup>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의 경우, 북한선전이나 김일성과 김정

135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해 2003년 이집트 Al Ahram Center for Political and Strategic Studies(ACPSS)를 방문하여 한반도 관련 워크숍을 개최하고 동 연구소와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136 이집트의 알 아랍지는 북핵문제 등 북한에 대한 사설을 게재하고 있다.

일 선전을 현지에 있는 일간지의 광고를 통하여 아랍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 이집트의 아흐람지나 이크버르지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선전을 거의 한 면에 걸쳐 광고를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88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을 인식하는 것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이미지를 통해서이며, 기업이미지가 한국의 이미지로 직결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 아랍인들은 한국의 수도는 서울, 지도자는 과거 김일성, 현재는 김정일로, 북한의 수도는 서울, 지도자는 과거 김일성, 지금은 김정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외교통로와 한반도 연구기관이다. 아랍인들이 한국에 대하여 인식하는 통로는 외교관계를 통하여 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외교관들이 아랍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한국외교관의 아랍지역 근무는 순환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한국을 알리는데 있어 북한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한편 아랍인들은 자국 학자의 한반도연구를 통하여 한반도를 인식하고 있다. 중동에서 한반도 연구는 중동현지의 대학내 소수 학자를 통하여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문화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이집트 카이로대학교(1977년 10월), 요르단대학교(1979년 6월 30일), 쿠웨이트대학교(1985년 7월), 이란 테헤란대학교(1992년 1월), 터키 앙카라대학교(1992년 7월), 이라크 알무스탄대학교(1993년 8월) 등에 근무하는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특정 교수에 의해 한국학연구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북한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이집트 카이로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가 한국학연구를 진행하면서 한반도문제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아랍인들의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은 친한 성향의 국가인가 아니면 친북 성향의 국가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의 아랍인들은 한국을 잘 알고 있는 반면 알제리, 시리아 같은 국가들의 아랍인들은 북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알제리, 시리아 같은 친북 국가들은 유엔에서 북한에 유리한 발언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아랍인들이 남북한을 인식하는데 각종 교역단체들이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무역회사, 건설회사 등 중동진출업체를 통하여 한국을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970년대 이전에는 아랍이 한국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1973년 석유위기 이후 한국은 아랍의 석유달러를 벌기 위하여 중동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중동진출 이후 아랍 특히 산유국으로부터 한국의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한국인에 대한 평판이 일반적으로 좋게 되었다. 석유달러를 발판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한국기업들이 중동에 긍정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예를 들어 공영토건, 대우건설, 신성, 한양, 현대엔지니어링, LG 엔지니어링, 쌍용건설, 풍림산업, 삼환기업, 동아건설 등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중동에 진출하였고, 이들 건설근로자들을 통하여 아랍중동인들은 한국을 인식하게 되었다.

반면 북한의 경우는 건설업체나 무역업체가 진출하지 않고 북한문화원이나 외교사절을 통하여 북한을 알리고 있다. 예를 들어 카이로에 있는 북한문화원은 김정일선전을 포함한 북한을 선전하고 있다.

## (2) 아랍의 한반도 인식

한국의 경우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아랍의 관심분야이고, 북한의 경우에는 군사협력이 아랍의 주 관심사이다. 이러한 가운데 아랍은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한민족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아랍이 한반도를 보는 시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이다. 아랍인들의 한국에 대한 주요 관심은 경제발전, 민주주의로의 이행, 한국 내 미군주둔, 한반도 통일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이 아시아의 용들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어떻게 하면 아랍이 한국처럼 경제발전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 그들이 한국을 보는 중심시각이다. 특히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 어떻게 경제발전을 이루었는가에 관하여 커다란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한국에서 공부하는 아랍 학생들은 이 문제를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한국이 컴퓨터,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기술이 매우 발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이 자본투자에 적절한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이하게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은 한국이 이슬람을 전파하기에 좋은 국가라고 인식하는 반면, 북한의 경우는 북한이 레닌의 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알라를 신봉하는 사우디로서 신을 숭배하지 않는 북한은 상대할 가치가 없는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다.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아랍의 학자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랍국가들 대부분이 군부통치를 하거나 왕정같은 권위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즉 어떻게 한국이 군부통치를 종식시키고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적 권력이양을 진행하였는가에 대하여 아랍의 학자들은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내 미군주둔을 보는 아랍의 시각에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지역에서 패권국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실, 미국이 아랍이 싫어하는 이스라엘을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몰심양면으로 지원해 온 사실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아랍인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 네 차례 걸쳐 아랍과 이스라엘간에 벌어진 중동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아랍의 영토를 조금씩 점령하여왔고, 점령지에 이스라엘군을 주둔시켜왔다. 이러한 사정에서 아랍인들은 한국내 미군의 주둔을 이스라엘군의 점령지 주둔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 결과 아랍인들은 일반적으로 한국내 미군주둔을 반대하고 팀스피리트 같은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군사작전에 반대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문제의 경우 아랍인들은 기본적으로 한반도통일은 한민족 자신의 문제라고 본다. 이집트의 경우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체결하여 사실상 한반도에서 2개의 국가를 인정하고 있고, 그 외 대부분의 아랍국들도 남북한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적절한 등거리외교를 추진하면서 아랍인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전적으로 한민족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경우 핵문제가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랍인들은 북한을 군사강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제 스커드미사일이 이스라엘로 향할 때 더욱 이러한 점을 느끼고 있다. 근래에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되자 여기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북한과 특히 군사협력관계를 중시하였다. 과거 한국전쟁 중에 이집트는 북한에 의약품을 제공한 바 있었고, 이에 대하여 북한은 1956년 2차 중동전쟁시 이집트에게 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이후 이집트의



나세르와 김일성은 1964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정상 회담을 하였고, 무바라크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무바라크가 1980년, 1983년, 1990년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회담을 하였다. 특히 제4차 중동전쟁 시에는 북한이 이집트군 장교들을 훈련시켰고, 북한제 무기가 이집트에 제공되었다. 더욱이 북한 공군조종사들이 미그기를 몰고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불거진 북한의 핵문제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아랍인들은 한반도의 핵문제는 무엇보다 과거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미국과 구소련이 한반도에서 경쟁을 한 결과로 나왔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의 좌파정권들은 한반도에서 핵문제의 발생은 원초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왔기 때문에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레비논의 경우 현시 언론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기를 원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레비논인들은 레비논을 침공한 이스라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는 미국을 싫어하고, 이에 맞물려 이라크침공을 감행한 미국과 맞상대하는 북한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기를 원하고 있다.

### (3) 이집트의 주요 연구기관

북한은 이집트 내 공관 중에서 2번째로 큰 공관을 운영하고 있는 바, 아랍권 중에서도 이집트와 돈독한 외교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따라서 향후 아랍권에 대한 통일외교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집트 내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적으로 이집트 내 연구기관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Al Ahram Center for Political and Strategic

Studies(ACPSS)를 들 수 있다. ACPSS는 Al Ahram Foundation 내의 독립연구소로서 1968년에 설립되었다. 특히 ACPSS는 이집트 내에서 영향력 있는 Al-Ahram News Paper의 산하 기관이다. 현재 19명의 전문가, 9명의 연구자, 7명의 행정요원 등 총 3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Political Systems Unit, International Relations Unit, Arab Research Unit, Economic Research Unit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Al-Ahram News Paper는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시설을 게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향후 긴밀한 협조관계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기관으로 Egyptian Center for Economic Studies(ECES)를 들 수 있다. ECES는 1992년에 설립된 비영리, 비정부 연구기관으로 이집트 경제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특히 카이로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Center for Asian Studies, Cairo University )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한국학의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연구소의 El-Sayed Sedky Abdeen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서 동 인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인적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부록 1. 비동맹운동의 조직과 현황<sup>137</sup>

### 가. 비동맹운동의 자격

비동맹운동의 회원국이 될 자격 요건은 1961년 6월 1일 제1차 베오그라드 비동맹 정상회의 준비회의로서 카이로에서 채택되었다.

첫째, 정치, 사회제도가 상이한 국가와의 평화공존 및 비동맹을 기초로 한 독자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거나 또는 이러한 정책을 지향하는 국가

둘째, 민족독립운동을 일관하여 지지하는 국가

셋째, 강대국의 각축과 관계되어 체결된 다자군사동맹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넷째, 강대국과의 다자군사조약 또는 지역 방위조약 체결 당사국의 경우, 당해조약이 강대국의 각축과 관계되어 체결된 것이 아니어야 함.

다섯째, 외국에게 군사기지를 제공한 국가의 경우, 동 제공이 강대국의 각축과 관계된 것이 아니어야 함.

1961년에 채택된 회원국의 자격요건은 국제정치 현실의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1979년 하바나에서 열린 제6차 비동맹정상회의의 정치선언 부분의 ‘비동맹정책과 그 지주적 역할의 강화’라는 장에서 1961년에 채택된 ‘비동맹 회원국이 갖추어야 할 자격 기준 5개 항목’을 재확인하고 있다.

---

137 부록 1, 2, 3은 외무부 국제연합국, “비동맹 운동 개황”, 집무자료 97-(집연), 1997.5에 의거하여 작성.

그런데 비동맹운동의 정식회원 이외에 옵서버 (Observer)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제1차 정상회의부터 옵서버국가 참여가 허용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는 절차는 비동맹 의장국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조정위원회 토의를 거쳐 정상회의 또는 전체 외상회의에서 합의제로 결정된다. 옵서버의 권한은 정상회의 및 전체 외상회의의 시 공개 또는 비공개로 열리는 전체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권은 없다. 그리고 조정위원회 회의에는 참가할 수 없다.

이러한 옵서버 이외에 게스트(Guest :빈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비동맹운동은 1976년 콜롬보 제 5차 정상회의부터 게스트를 초청하고 있다. 게스트 자격 획득 절차는 옵서버 자격과 동일하다. 게스트의 권한은 정상회의 및 전체 외상회의의 공개회의만 참가할 수 있으며 발언권 및 의사결정권은 없다. 그런데 96년 5월 카르타헤나 Methodology 회의 이전에는 게스트의 지위가 이원화 되어 비동맹이 초청하는 Guest of the Movement의 경우는 한번 Guest 지위를 획득하면 그 지위를 계속 향유할 수 있으나, 의장국이 초청하는 Guest of the Chair는 Guest지위를 회의 당해연도에만 향유하였다. 그러나 카르타헤나 Methodology 회의를 계기로 이원화된 Guest의 지위가 일원화 되고 모든 Guest는 ad hoc basis로 초청되도록 결정됨으로써 Guest는 원칙적으로는 매 회의시마다 비동맹 조정위에서 초청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비동맹운동의 회원자격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sup>138</sup>

138 『연합뉴스』.

## 나. 의결방식

비동맹운동이 의제를 의결하게 될 경우 모든 문제는 투표 없이 합의제(Consensus)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96년 5월 카르타헤나 Methodology 각료회의에서 합의제에 대해 엄격한 전원 일치(Unanimity)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인 동의(Substantial agreement)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개념을 재확인하고, 이에 관한 의장국의 역할 및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과거에 합의(콘센서스)의 의미를 협의적으로 “강한 반대의 부재(absence of strong opposition)”로 해석할 때는 1개 국가가 특정사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할 경우에는 동 사안이 비동맹 회의에서 의결될 수 없었다. 그런데 현재는 소수의 국가만이 반대할 경우, 의장국이 이를 소수의견(reservation)으로 처리,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결의에 대해 반대할 경우 발언 또는 서면으로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한 유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정상회의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of Non-Aligned Countries)

비동맹운동은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다 1970년대 이후 조직과 지속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정상회담 이외에 70년대 이후 비동맹외상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게 된다. 아울러 조정국이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정상회의는 1961년이래 매 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sup>139</sup> 정상회의가

열리기 이전 고위실무회의 및 외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이 관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의장국을 두도록 되어 있는 의장국은 회원국간의 연락 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 회의 계속성 확보, 비동맹회의 재결정, 결의 및 명령 이행,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상설사무국은 특정국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여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다.

#### 라. 각료회의

먼저 전체 외상회의(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of Non-Aligned Countries)가 두 정상회의 중간에 매 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외상회의에서는 정상회의 결정사항의 이행 및 진전상황 검토, 차기 정상회의 준비, 긴급사항 등을 토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의장국은 회의 주최국이 맡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특별 각료회의로서 필요시 특별외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매년 유엔에서의 비동맹 전략토의를 위해 총회 직전 뉴욕에서 외상회의가 별도로 개최되고 있다. 기타 재무장관회의 등 각료급 회의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 마. 조정위원회 회의

1970년 제3차 루사가 정상회의 이후 비동맹회원국간의 접촉유지, 회

---

139 다만 1967년에는 개최되지 않았고 1998년 제12차 회의 이후 제13차 회의는 2003년에 개최되었다.

의의제 준비, 비동맹회원국간의 활동조정 등을 위하여 비동맹운동의 제도화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루사가 정상회의까지는 준비위원회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는데, 1973년 제4차 알지에 정상회의는 의장단국가 15개국으로 하여금 차기 외상회의와 정상회의의 준비 및 유엔 등에서의 비동맹 회원국간의 활동 및 입장 조정문제 등의 임무를 부여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1976년 제5차 콜롬보 정상회의는 25개국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Coordinating Bureau) 설치를 결정하였다. 위원국은 지역적 안배(아프리카 12, 아시아 8, 중남미 8, 유럽 1) 원칙에 따라 선출하되 임기는 차기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조정위가 구성될 때까지로 하였다. 각 지역은 합의로 그 지역에 할당된 수만큼의 위원국을 선출하고 있다. 1979년 제6차 아비나 정상회의는 조정위위원국수를 36개국으로 확대하였으며, 1983년 제7차 뉴델리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74개국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는 사실상 희망하는 회원국은 모두 조정위위원국이 될 수 있어 문호가 모든 비동맹 회원국에 개방되어있다. 북한은 1979년 제6차 정상회의에서 조정위위원국으로 피선되었다.

조정국 회의는 년회 또는 필요시 외상급 또는 특별 정부대표급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차기 비동맹정상회의의 준비를 위해 개최되는 조정위 외상회의는 현 의장국에서 개최되는 것이 관례이다. 원래 월1회(긴급사항 발생시에는 수시로) 주유엔대사급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최근에는 유엔회기가 연중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그리고 조정위위원국을 포함한 모든 비동맹회원국은 조정위원회 회의개최 요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회의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조정위 의장은 모든 조정위위원국에 통보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모든 비동맹회원국은 조정위 회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데, 조정위위원국

이 아닌 국가는 의사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조정국이 수행하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급 비동맹회의에서는 채택된 결정 및 계획의 이행, 이를 위한 비동맹 제국의 활동 조정, 동 이행을 위한 제반조치 제의(공동활동 조정 기관), 각급 비동맹회의의 준비업무 수행, 국제문제, 국제위기(special crisis situation) 및 비동맹제국의 급박한 공동관심사 검토를 위한 회의개최, 필요시 Working Group 설치, 비동맹 제국간 경제협력 활동계획의 이행 검토 및 지원, 각급 비동맹 회의의 결정에 기초하여 유엔에서의 비동맹그룹의 공동활동 조정, 유엔 내 비동맹그룹 국가들에게 77그룹의 활동 내용 통보 및 77그룹과의 지속적인 접촉 유지 그리고 의장국은 유엔에서의 비동맹그룹 회의 및 조정위원회 회의의 개최, 동 회의의제 제의, 각료급 또는 특별 정부대표급 회의 개최 요청이 있을 경우 동회의 개최에 대한 일반적인 컨센서스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조정위원국들과 협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조정위 의장국은 비동맹 의장국(직전 정상회의 개최국)이 겸직하며 조정위의 효율적인 기능 및 협조를 위하여 유엔주재 자국대표부의 인력 및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바. 작업반 (Working Group)

1976년 콜롬보 5차 정상회의 결정(mandate)에 따라 8개의 Working Group이 설치 또는 재구성되어 있으며 1976년 9월 뉴욕 조정위 대사급 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작업반은 주로 조정위원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차기 정상회의시까지)이다. 작업반은 유엔에서 비동맹운동의 특별관심사항 토의시 이에 대한 공동입장을 설정하는 목적을 부여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결의안 제출, 지지획득 교섭, 회의진행을 주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6년 제31차 유엔총회 기간중 군축, 한반도, 사이프러스, 팔레스타인 등 8개 사항에 대한 Working Group이 설치되었다. 31차 유엔총회 이후 각급 비동맹회의 및 유엔총회 관련 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1980년 10월 3일 뉴욕 각료회의에서 7개 작업반(Working Group)으로 조정되었다.<sup>140</sup>

### 사. 비정치분야 조정위원회 회의

1972년 조지타운 외상회의는 개도국간 협력과 집단자립(collective self-reliance)을 위한 경제협력 행동계획(Action Programme for Economic Cooperation : APEC)을 채택하였으며 APEC은 1973년 알지에 제4차 정상회의에서 승인되었다. 그리고 Trade, Transport and Industry(가이아나),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인도, 인도네시아),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알제리, 유고),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conomic Development(이집트, 나이지리아) 4개 협력분야별로 조정위원국을 지명하였다. 그런데 1976년

---

140 W/G Group on Korea, W/G on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W/G on Southern Africa, W/G on Palestine and the Middle East, W/G on the United Nations, Contact Group on Cyprus, Drafting Group on 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of States. Working Group on Korea는 Algeria, Cuba, Somalia, Sri Lanka, Syria 5개국으로 구성되었는데, 1976년 31차 총회시 한국문제 안전 철회로 총회 관련 기능이 정지된 바 있다. 그 이후 특별 각료회의 개최문제 토의를 위한 1980.6.18-19. 뉴욕 대사급 총회를 겨냥하여 북한이 소집을 요청함으로써 한때 그 기능이 부활되었으나 다시 활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제5차 정상회의(콜롬보)는 협력분야를 16개 분야로 1983년 제6차 정상회의(뉴델리)는 22개 분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1986년 제8차 정상회의(하리레)는 Raw materials, Industry and Trade, Standardization, Weights and Measures and Quality Control, Transport and Telecommunications(\*), Monetary and Financial Cooperation and Insuranc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Consultancy Services(\*), Food and Agriculture and Fisheries(\*), Health(\*), Employment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Research and Information System and Transnational, Cooperations and Foreign Private Investment, Role of Women in Development(\*),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Housing and Cooperation in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Education and Culture, Sports and Tourism(\*) 13개 분야로 재조정하였다.<sup>141</sup>

정상회의에서 분야별로 조정위원국을 선출하며 조정위원국은 매년 번갈아가며 회의 개최를 주관하며, 해당분야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국 및 비조정위원국들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그리고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경제협력 행동계획(APEC)의 이행, 비동맹위원회 및 기타 개도국(77그룹 회원국)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비동맹국 상호간 협력방안 수립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년1회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조정위 외상회의에서 검토하여 정상회의에서 최종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

141 \* 북한이 조정위원국으로 있는 분야이다.

부록 2: 비동맹회원국 현황

1. 정 회원국 (114개국)

아프리카 (47)

Angola  
Burkina Faso  
Cape Verde  
Comoros  
D.R.C.  
Eritrea  
Gambia  
Guinea-Bissau  
Liberia  
Mali  
Mozambique  
Nigeria  
Senegal  
Somalia  
Tanzania  
Zambia

Benin  
Burundi  
Central African Rep.  
Congo  
Djibouti  
Ethiopia  
Ghana  
Kenya  
Madagascar  
Mauritania  
Namibia  
Rwanda  
Seychelles  
South Africa  
Togo  
Zimbabwe

Botswana  
Cameroon  
Chad  
Cote D'Ivoire  
Equatorial Guinea  
Gabon  
Guinea  
Lesotho  
Malawi  
Mauritius  
Niger  
Sao Tome & Principe  
Sierra Leone  
Swaziland  
Uganda

아 시 아 (23)

Afghanistan  
Brunei Darussalam  
India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ri Lanka  
Thailand

Bangladesh  
Cambodia  
Indonesia  
Maldives  
Nepal  
PNG  
Vanuatu  
Turkmenistan

Bhutan  
DPRK  
LP.D.R.  
Mongolia  
Pakistan  
Singapore  
Vietnam

중 동 (19)

Algeria  
Iran  
Kuwait  
Morocco  
Qatar  
Syrian Arab Rep.  
Yemen

Bahrain  
Iraq  
Lebanon  
Oran  
Saudi Arabia  
Tunisia

Egypt  
Jordan  
L.A.J.  
Palestine  
Sudan  
U.A.E

중 남 미 (21)

Bahamas  
Bolivia  
Cuba  
Grenada  
Honduras  
Panama  
Suriname

Barbados  
Chile  
Dominican Republic  
Guatemala Jamaica  
Peru  
Trinidad & Tobago

Belize  
Colombia  
Ecuador  
Guyana  
Nicaragua  
Saint Lucia  
Venezuela

유 럽 (4)

Belarus  
Uzbekistan

Cyprus

Malta

2. 읍 서 버 (15개국)

Antigua and Barbuda  
Brazil  
Croatia  
Kazakhstan  
Paraguay

Armenia  
China, People's Rep.  
Dominica  
Kyrgyzstan  
Ukraine

Azerbaijan  
Costa Rica  
El Salvador  
Mexico  
Uruguay

3. 게 스트 (31개국)

Australia  
Bulgaria  
Finland  
Greece  
Ireland  
Korea, Republic of  
Norway  
Romania  
Slovak Republic  
Sweden  
U.S.A.

Austria  
Canada  
France  
Holy-See  
Italy  
Netherlands  
Poland  
Russian Federation  
Slovenia  
Switzerland

Bosnia-Herzegovina  
Czech Republic  
Germany  
Hungary  
Japan  
New Zealand  
Portugal  
San Marino  
Spain  
United Kingdom

**부록 3: 비동맹회의 정상회의 개최현황**

	회원국	옵서버		게스트		비고
		국가	기구·단체	국가	기구·단체	
1차 정상회의 (1961, 베오그라드)	25	3	-	-	-	
2차 정상회의 (1964, 카이로)	47	10	2	-	-	
3차 정상회의 (1970, 루사카)	53	10	2	2	5	UN이 옵서버로 첫 참가
4차 정상회의 (1973, 알자이)	75	8	20	3	-	아프리카, 중동의 16개 민족 해방전선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
5차 정상회의 (1976, 콜롬보)	85	9	12	7	-	
6차 정상회의 (1979, 아바나)	92	12	8	8	11	
7차 정상회의 (1983, 뉴델리)	99	7	8	10	16	
8차 정상회의 (1986, 하라레)	99	10	9	13	22	
9차 정상회의 (1989, 베오그라드)	103	12	9	20	28	
10차 정상회의 (1992, 자카르타)	108	12	9	23	19	
11차 정상회의 (1995, 카르타헤나)	113	12	7	26	19	

\* 제12차 비동맹정상회의는 1998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개최되었으며, 회원국이 114개로 1개국 증가하였다.

\* 제13차 비동맹정상회의는 2001년 방글라데시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되었으나 2003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다.

5. 통일·북한정보관련 국내외 전문가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방안<sup>142</sup>

가. 인터넷과 국제협력 환경

지난 세기말부터 급격히 진행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에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인터넷의 이용이 단순히 편리한 생활 및 일 처리를 가능하게 한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의 작동원리와 개인의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과히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만한 총체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운데에서도 가장 주목할 점은 사회구조가 서열중심의 위계 체계에서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체계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흔히들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정보사회는 네트워크 사회이다. 온라인 네트워크는 정보사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규정하는 핵심요소이다. 네트워크 구조는 산업사회의 기반을 이루었던 위계적(hierarchical)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대비되는 개념이다. 위계적 구조가 서열 중심적이고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에 의해 움직였다면 네트워크 사회는 수평적 협력과 유기적 상호보완에 의해 움직이는 구조이다. 네트워크 사회란 정확히 네트워크의 규모가 확장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각종 네트워크를 타고 흐르는 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네트워크 사회는 분산처리의 사회이다. 종래에 단일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던 일들이 많은 독립적인 시스템들의 협력체제에 의해 이

---

142 본 장은 경상대 윤성이 교수에게 의뢰한 용역과제 “Knowledge Networking”을 재정리한 것이다.

루어진다. 따라서 네트워크 사회는 다원화·수평화된 사회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네트워크는 협력과 조정의 채널이며 이 채널을 통해 정보가 유통된다. 네트워크가 정보사회를 구성하는 구조와 작동원리라 한다면 정보는 네트워크 사회의 내용을 규정한다. 따라서 사회가 네트워크화 될수록 정보의 중요성은 커진다.

둘째로, 네트워크 사회에서 개인들은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며, 개인들은 자기의 능력과 전문성으로 경쟁하게 된다. 조직이 개인의 평생고용을 보장하지도 못하고, 개인도 조직을 위해 희생해야한다는 의식도 의미를 잃게 된다. 조직이란 시안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만나서 일을 하고 헤어지는 만남의 장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된다. 이는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조직구조인 관료제에서의 ‘경력직(career)’ 원칙이 무너짐을 의미한다.

셋째로 네트워크 사회는 본원적으로 커다란 외부경제효과를 갖는 사회이다. 전화망이나 컴퓨터망과 같은 네트워크는 그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망 자체의 가치가 커진다. 가입자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면 자동적으로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네트워크도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더구나 네트워크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훨씬 커지게 된다. 네트워크의 확장은 정보의 공유가능성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정보는 비소모성과 누적효과성을 갖는 공공재이므로 공유할수록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 (1) 정보의 특성

21세기는 정보사회 또는 지식사회라 일컬어지고 있다. 정보사회는 흔히 정보가 사회의 기축적인 재화가 되는 사회라 정의된다. 농업사회에서는 풍요한 자연자원이, 산업사회에서는 공업생산력이 국부의 원천이 되었던 것처럼 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자원이 국부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인간의 지적 능력 및 지적 노동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의존도가 대단히 높아진다. 산업사회 역시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높았으나 기본적으로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육체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반면에 정보사회에서는 지식노동의 생산성 자체에 주된 목표가 주어진다.

노동과 자본이 산업사회의 양대 생산요소였다면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에 의해 대체된다. 정보사회의 기축적 재화인 정보와 지식은 그 기본적인 특성에 있어 산업사회의 노동과 자본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sup>143</sup>. 정보재화의 특성을 몇 가지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소모성이다. 정보는 아무리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는다. 정보는 지금까지의 상품에서처럼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 되거나, 감가상각되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용할수록 더욱 그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둘째로 정보는 누적효과성을 지닌다. 정보는 쌓이면 쌓일수록 그 효과가 누증한다. 정보데이터베이스에서처럼 정보가 누적되면 될수록 더욱 그 가치나 효용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정보재는 비이전성의 특징이 있다. 일단 정보를 소유하면 이를

143 소영진 “정보사회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최성모 편, 『정보사회와 정보화 정책』, (서울: 나남, 1998), p. 73.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이전되지 않고 소유주에게 계속 남아있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보재화는 무한재생산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정보는 복제를 통해 매우 낮은 가격으로 무한히 재생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사회의 상품은 1단위를 추가할 때마다 동일한 비용이 추가되지만 정보는 일단 생산되면 정보의 전달방법에 따라서 무한복제가 가능하다.

## 나. 통일관련 지식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조건

### (1) 전자적 네트워크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는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원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ICT의 확산으로 세계 곳곳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훨씬 용이해지게 되고 이는 국경과 언어 그리고 문화를 초월하는 네트워킹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지식 네트워크는 학제간 연구활성화, 정책개발 지원, 다양한 사용자 집단의 연계 등을 통해 국가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자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는 연구 네트워크의 속도와 효율성에 많은 장애가 되어 왔다. 대부분의 연구교류는 간간이 열리는 학술세미나나 출판물을 통한 정보공유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따라서 지역적 혹은 국제적 차원의 연구 협력이 진행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전자적 네트워킹은 전자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접근 및 정보확산 그리고 상호협력을 의미한다.

인터넷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에 있다. 이러한 속도로 인해 인터넷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정보확산 도구로 이용된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은 전자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과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개인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논문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순간 그 논문은 전 세계 모든 네티즌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다. 전자적 네트워킹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방법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다는데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연구자들은 동시적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비동시적 상호교류도 가능하다. 동료 연구자와의 정보교환이나 토론을 위해 굳이 쌍방이 같은 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할 필요 없이 각자 편리한 시간에 인터넷 접속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장점은 시간대가 다른 외국의 연구자와 공동작업을 하거나 각자 스케줄이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공동작업을 해야 할 상황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전자적 네트워크는 정부, 교육기관, 기업, 일반 시민 등 사회 모든 분야를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집단들을 포괄하는 토론과 협의가 가능하다.

## (2) 지식 네트워크의 필요성

재정적, 인적 자원이 한정된 환경에서 잘 관리된 정보의 공유를 통한 협동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활발한 정보공유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협동작업은 연구자들의 활동의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능력의 한계로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게 한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이제까지 거리와 시간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연구자

들의 참여를 가능케 하여 더욱 폭넓은 연구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지식 네트워크는 국경과 언어 그리고 문화를 초월하는 지식공동체를 구성하게 한다. 이러한 지식공동체는 민족적이고 국지적인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게 되며 일방 중심의 시각도 극복할 수 있다.

지식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가 확산되고 공유됨으로써 그 사회는 자신들에게 보이는 정보만이 가장 우수하고 최선의 선택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식네트워크는 이해당사자들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정보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까지 통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보의 확산은 이러한 낙관적 기대를 충족시키기보다는 기존의 권력구조를 확대 강화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시민들의 정치교육과 적극적 정치참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와 같이 걸려지지 않은 정보가 범람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sup>144</sup>.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상의 정보를 검색할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정보전달 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인터넷의 등장은 시민들에게 과거처럼 정보부족이 아니라 정보과다의 문제를 가져다 주었다. 사이버공간에는 15억 개가 넘는 사이트가 무한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대인은 자신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정보폭증으로 인해 집중력

144 Beth Simone Noveck, "Paradoxical Partners: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Electronic Democracy", Peter Ferdinand, eds., *The Internet,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London ·Portland, OR: Frank Cass, 2000), p.244

결핍장애(Attention Deficit Disorder)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sup>145</sup> 이러한 정보범람의 상황에서는 정보의 체계적인 전달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웹상의 정보를 검색할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며 그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정보전달 구조는 매우 중요하며 그러한 정보의 체계적 전달은 기존의 전통적 제도들-매스미디어, 정당, 정부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sup>146</sup> 또한 정보범람의 상황에서 웹상에서 얻은 정보의 신뢰성도 문제가 된다. 기존의 정보제공자들은 이러한 신뢰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인터넷 소스는 아직까지 정보제공자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판지일보와 오마이뉴스, 미국의 드리저리포트와 같이 대안언론을 표방한 인터넷 신문이 등장하여 빠른 뉴스와 틈새 뉴스전달의 측면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존 언론에 비해 신뢰도는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터넷 초기 시절 사람들은 이타적인 이유에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누구도 비용이나 신뢰도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수많은 개인들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정보의 급격한 증가는 정보의 질과 선택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현재와 같이 시장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정보공유는 국가간,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권력의

---

145 David Shenk, *Data Smog: Surviving the Information Glu* (New York: Harper Collins 1997).

146 Beth Simone Noveck, "Paradoxical Partners: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Electronic Democracy", Peter Ferdinand, eds., *The Internet,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p. 24.

집중화 현상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시장지배적 정보확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요구되는 것이 정보공동체 건설이다. 정보공동체란 지식네트워크를 매개로 지적 자산과 정보에 대한 사회적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과 연대,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실질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식네트워크가 구축될 때 정보화가 소수의 상업적 이익을 보장하는 대가로 다수를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sup>147</sup>

정보의 민주적 활용과 정확한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은 디지털 거버넌스의 구현을 통해 촉진될 것이다. 일상생활 곳곳에 정보통신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 속에서 개인과 개인 그리고 개인과 조직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또한 사회 전체의 운영 및 지배방식, 즉 거버넌스의 변화를 겪고 있다. 사회는 점차 지식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사회구성원들도 지식네트워크 속으로 편입되고 있다. 모든 지식이 디지털화되어 개인과 정책결정자들에게 접근이 개방된 지식네트워크에 저장된다면 모든 개인은 자유롭게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거버넌스의 등장을 촉진하게 된다.

지식네트워크 구성원은 자신의 주변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지식네트워크 구성원들의 행동은 객관적이고 시기적절하며 다양한 소스로 검증된 정보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이렇게 얻은 정보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목적을 위해 정보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

---

147 박형준, 「정보화의 문명사적 의미와 국가전략의 방향」 (서울: 박영률출판사, 1996), pp. 33-34.

기술의 활용이 이러한 지식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보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지식네트워크로 편입되면서 자신의 권리와 기회 그리고 자신 앞에 놓인 위험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인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현재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며 자신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현명한 선택’(Informed Choice)을 할 수 있다.

### (3) 지식네트워크 구현조건

#### (가) 정보접근성

정보접근성은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인터넷과 쌍방향 기술의 확산은 정보의 저장, 재생, 활용 그리고 분배의 과정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만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토플러(Alvin Toffler),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 라인골드(Howard Rheingold) 등과 같은 디제라티(digerati)들은 인터넷의 접속이 평등(equality)과 권능(empowerment), 그리고 인락(ease)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148</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정보불평등이라는 장벽에 막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정보불

---

148 Timothy W. Luke, "The Politics of Digital Inequality: Access, Capability and Distribution in Cyberspace", 1998; Chris Toulouse & Timothy W. Luke, eds., *The Politics of Cyberspac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0), p.124.

평등은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접근(access to)과 정보 데이터에 대한 접속(access in)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 수준은 여전히 사회 계층, 소득수준, 개인직업,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단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보데이터에 대한 접속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디제라티들은 네티즌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지구상의 어떤 컴퓨터나 개인과 접속하여 즉각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여전히 지나친 환상에 불과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비용과 허가 그리고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많은 도메인들은 원치 않는 침입자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벽(firewall)을 구축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개된 정보들은 별다른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들이며 접속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정보들은 대부분 엄격히 폐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폐쇄적 접속권한 부여로 인해 생겨나는 네트워크 상의 경계는 현실세계에서 존재하는 영토와 인종사이의 경계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폐쇄적인 정보접근은 정보가치의 보호, 사이버공간에 대한 접근 거부, 재정 권력의 보존, 커뮤니케이션 망의 지배, 혹은 계급적 특권 보존 등을 위해 불평등 현상을 사이버 공간에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개방된 정보공유만이 지식네트워크가 원래 추구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접근성 이외에도 심리적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조직의 관리자급들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전자적 네트워킹의 활성화는 기존 조직구조와 업무처리방식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그간 전자정부사업에 있어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문제가 정보사회에 적합한 조직구조의 변화와 사용자의 정보화마인드가 없이 단순히 정보기술만 도입함으로 인해 전자정

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많은 부분에 있어 기득권의 포기를 의미할 수 있다. 정보공개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누리던 전략적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한과 폐쇄적 혹은 효율적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희생을 의미한다.

### (나) 정보관리

정보관리(management of information)는 정보의 수집(collection), 축적(compilation), 조직화(organization) 그리고 분배(dissemination)를 포괄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정보관리의 핵심은 지식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의 질을 관리하는데 있다. 네트워크상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인터넷에는 수많은 정보가 넘치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검색은 많은 인내와 요령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접근한 정보에 대한 평가능력이 필요하다. 인쇄물들과 달리 인터넷을 통한 정보생산은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는 정보의 다양화와 민주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측면도 있으나 출판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다 보니 정보의 정확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작용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접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확성 여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생산자의 신뢰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다른 정보와의 비교검토도 필요하다.

정보관리에 있어 또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지식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는 정보의 시의성(timeliness)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보는 시간의 차원



을 가진다. 일단 생산된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떨어지게 되면 따라서 정보는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정보의 특성상 동일한 정보나 유사한 정보는 나중에 생산되면 거의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인터넷 사이트는 한 시점에 머물러 있는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항시 변화하는 동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작업은 일시적 일이 아니라 정보공유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정보생산자는 꾸준히 정보를 업데이트하여야 하며 정보소비자는 자신이 접한 정보가 이미 시기가 지나 부정확하고 쓸모없는 정보가 아닌지 검토하여야 한다.

#### (다) 헌신과 참여

지식네트워크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네트워크 참가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 지식 네트워크는 연구자들에게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많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연구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지는 않는다. 지식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새로운 노력과 역할이 요구된다. 새로운 역할은 소비자, 생산자, 토론자 등 세 가지로 구분되어 설명된다. 우선 정보소비자로서 연구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범람의 상황에서 연구자들에게는 정보검색의 능력이 요구된다. 과거 공유된 정보의 양이 제한된 시기에는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만으로 충분하였으나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곧잘 정보의 바다에 침몰될 수가 있다. 따라서 정보소비자로서 연구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정보의 소재를 찾는 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

한 정보생산자로서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물을 즉각적으로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타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자신의 연구물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업데이트하는 작업은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연구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있다. 이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연구자들 간에 네트워킹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와 지식네트워크

##### (1) 통일·북한관련 지식네트워크의 방향

통일관련 지식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의 주요현안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건보도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북한핵문제 및 인권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기존 남북한사회에 대한 연구와 홍보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와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단순히 지역연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과 북한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사회의 전문연구자들 간에만 진행되어 온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외동포들의 역할도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통일분야 지식네트워크 구축은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통일관련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됨으로써 통일 관련 정책이 기존의 공식적 제도 내에서만 논의되던 관료적 모델에서 벗어나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정책결정이 가능하다. 이는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함으로써 현재 빚어지고 있는 한국사회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성공적인 네트워크의 출발점은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있다. 통일에 관련된 많은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보전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필요한 정보가 제때에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을 이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일반시민들도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된다. CMC가 도입되기 전에는 일반시민들의 정책결정 참여 기회가 주로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참석으로 제한되었으며 그나마 제한된 시간과 공간으로 인해 활발한 정책토론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쌍방향 통신뿐만 아니라 일 대 일(one-to-one), 다수 대 일(many-to-one), 다수 대 다수(many-to-many) 등의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드는 CMC의 발달은 이전에 '정치적 청중' 혹은 '정치적 수용자'에 불과하였던 개인들을 '정치적 참여자'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통일연구원 홈페이지가 통일분야 지식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중개조직

(intermediary organization)의 기능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개조직은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관심사와 주장을 표현하고 적합한 참가자가 적절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야 한다. 중개조직은 정보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접점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로 하여금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하여 사회경제적 결실을 수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인터넷이 갖는 멀티미디어 기능은 정보의 생성, 저장, 공유, 재생 그리고 분배의 범위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토론방, 게시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스트리밍 뉴스(streaming news)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이용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한다. 인터넷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분야 지식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정책결정과 관련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 과거 정책에 대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통일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토론방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는 통일분야 정책결정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분야의 정부조직과 연구기관 그리고 전문가를 네트워킹하는 게이트웨이(gateway) 역할을 하여야 한다. 통일분야의 게이트웨이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통일 자원을 연계하여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며 이들 간의 상호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관련 정보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자원동원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2) 통일분야 지식네트워크 구축방안

(가)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일 지식네트워크는 통일과 관련된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웹사이트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최근 뉴스 업데이트, 주요 이슈에 대한 논점과 해석, 통일관련 정부정책의 변화 내용, 통일관련 연구물, 토론그룹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통일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주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공유의 쌍방향성 강화, 그리고 사이트 링크가 아닌 정보 링크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통일연구원이 연구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차적으로 관련연구들을 국·영문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통일연구원은 개별연구자의 연구보고서 및 정세분석보고서 등 연구물을 국문으로 XML 원문검색을 통해 전문서비스하고 있으며, 영문의 경우에는 요약본(abstract)을 제공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정보제공 서비스>



우선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단일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주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통일연구원 홈페이지는 통일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과 같은 정보범람의 시대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은 정보의 양보다도 체계적 정보전달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통합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세분화하여 정부의 통일정책, 남북 경제협력, 북한 국내정보, 북한의 통일정책 등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보다 용이한 정보공유를 도울 필요가 있다.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 다음으로는 일방적 정보전달과 비체계적 정보공유는 피하여야 한다. 정보기술의 쌍방향성을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운영자들에 의한 일방적 정보전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네트워크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인터넷의 쌍방향성으로 인해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 구분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통일연구원 홈페이지가 주로 정보생산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고 있고 사이트 접속자들은 소비자로서 남는 현재의 정보공유 방식은 사용자들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개선하고자 한다. 사이트 접속자들에게도 정보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사이트 이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부분적으로 회원들이 설문조사(Cyber poll)를 위한 문항에 대한 제언을 접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본인들의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 항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에 응답한 개인들의 세부정보(연령, 성별, 거주지별 등)에 따른 차이를 알 수 있도록 개인들이 회원인증을 하고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회원인증 후 설문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게시판 사례>

899	음 박사급연구원 채용장부	kktrn...	03-07-13	174	
900	음 무료강의지침-북한문화연대실	공공01	03-07-04	143	
907	음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7.1 조치 해제됩니다	25anhsa01	03-08-24	142	
906	음 [도어주제]도어주제요	hu001	03-08-22	135	
—	음 [홍익] 직접 보셔서 알아보세요	sa	03-08-25	134	
905	음 [공지] 국내서 대외 링크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rodmsa1	03-08-07	130	
904	음 제1회 민족통일연구대회 수상안내	trbun070	03-06-27	131	
903	음 새봄 일출동부활합니다	북기공	03-05-12	249	
—	음 [홍익] 통일연구원 폐원합니다	eei	03-05-15	239	
902	음 [포럼]인제대학교 국내외 협력과 우리식 통일	새봄연구소	03-05-07	157	
901	음 북한 연구참마한 직접...	afhsaah07	03-05-06	230	
—	음 [홍익] 좋은 생각	nam0001	03-05-07	192	
900	음 중국의 SARS 환자 발생에 대한 발표를 보고....	afhsa02	03-05-05	122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자유게시판에는 일반 네티즌들의 의견, 자료문의, 관련연구기관의 세미나 안내 등의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 체계적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자유게시판과는 별도로 관련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채용정보나 세미나 안내 그리고 연구결과물들을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관련 단체와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자들로 하여금 연구논문, 출판물, 데이터베이스 등을 직접 연구원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업로드된 자료들은 모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게 된다.

###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링크 서비스〉

공공기관 | 연구원 및 도서관 | 관련 대학 및 부설 연구소 | 국내언론 | 종교·사회단체

해외북한관련 연구기관, 단체 | 언론(외국) | 국제기구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등의 사이트에 링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이트 링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보검색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정보검색을 하였을 경우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저장된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의 자료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 기능이 구축되면 네티즌들은 통일관련 정보검색시 굳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 없이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6자 회담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정보검색을 하면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통일부, 국회, 그리고 관련 연구소와 시민단체 홈페이지의 6자 회담 관련 자료들이 동시에 링크되어 검색될 수 있어야 한다. 백악관 홈페이지의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정부 서비스, 전자도서관, 문의처리 등 10개의 기본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의 기본메뉴는 관련 웹사이트와 무수히 링크되어 백악관뿐만 아니라 연방 및 지방정부, 경제, 사회, 문화 등 미국 관련 모든 정보를 검색하는 시발점이 된다. 통일연구원 홈페이지도 남북문제와 통일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



는데 있어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나) 온라인 토론기능

전자적 네트워킹의 가장 큰 매력은 온라인 토론에 있을 것이다. 최근 이러한 온라인 토론은 전자메일이나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해 이루어진다. 이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메일링 그룹을 조직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메일링 그룹의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단순히 사이버상에 공간만을 마련하는 것으로만 결코 온라인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술한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정책토론이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구체적인 토론 주제선정, 토론관리자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체계적 토론방 운영방식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토론주제선정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의성있는 토론주제선택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사회 내 이슈가 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을 선택함으로써 토론의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의성있는 주제선택을 위해서는 자유게시판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관련단체나 일반시민들로 또한 정책토론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토론주제와 관련된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토론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토론 참가자들이 문제의 핵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토론관리자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토론참가자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업무와 일상에 바쁜 스케줄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토

론에 전적으로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만 이러한 토론은 성공할 수 있다. 토론관리자는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토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토의 내용을 요약정리 하여야 하며,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는 참여자를 위한 기술적 지원의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정책토론을 위하여 토론참가자를 일반시민, 시민운동단체 대표자, 정치인 등으로 구분하여 토론방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토론방을 대중포럼, 시민단체포럼, 정치인포럼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토론방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일반시민, 시민단체대표, 정치인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토론방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모든 시민들에게 제한 없이 주어진다. 시민운동단체 대표들에게 개별적인 토론방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운동단체와 정부 사이의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제공하게 되어 이들이 가진 전문적 지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시민운동단체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정치인포럼을 통해 국회의원의 정책연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국회의원들이 가진 정책적 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시민단체, 일반시민이 참가하는 사이버 정책포럼은 영국의 UK Citizens Online Democracy(UKCOD)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이트([www.democracy.org.uk](http://www.democracy.org.uk))는 대중포럼(Public Forum), 시민단체포럼(Civic Forum), 정치인 포럼(Politician Forum)의 세 개의 포럼으로 분리 구성되어 있다. 대중포럼은 국민 누구나 의견제시가 가능하며, 시민단체포럼은 시민단체 대표에게만 의견제시 자격을 부여하고,

정치인 포럼은 국회의원과 후보자들만 사용할 수 있다. 정책토론포럼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토론방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세 개의 포럼방은 각각 몇 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토론을 담당할 전담인력이 지정되어 각 주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토론의 결과를 정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사이버정책포럼이 실질적인 정책결정과정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사이버정책포럼의 결과가 현실정치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실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책포럼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 <통일진단>

총합적 포럼 7 records Pages 1/1

포럼순번	주제	등록일	기간	조회
7	북한 위기와 미국의 대북정책 <i>11.06.01</i>	0	2009-09-29 ~ 2009-09-29	0
6	문화번영정책의 추진 과제와 방법	3	기간대 완료된 포럼	182
5	현대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개연	1	기간대 완료된 포럼	242
4	미국회해협정책의 실질적 평가	3	기간대 완료된 포럼	445
3	최근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2	기간대 완료된 포럼	564
2	신정부의 대북정책	1	기간대 완료된 포럼	376
1	최근 북한연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기간대 완료된 포럼	829

현재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통일진단’이 토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토론에 참여하는 인원은 많아야 3명 정도이다. 토론이라 하기에는 무색할 만큼 네티즌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 이러한 저조한 토론참여는 앞서 살펴본 토론주제의 시의성, 토론관리자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체계적 토론방 운영 등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달 참여자중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에 대해 시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쟁점과 여론>

설문조사

번호	교양주제	답변자수	시작일	종료일	결과
36	노무현 대통령의 간곡한 사과 사회	2	2003-05-25	2003-05-22	간담
34	미국군인과 평북한 최장기 육류	5	2003-05-08	2003-05-20	합의
33	북한연평포격 사태는 단순한 사과	7	2003-07-08	2003-03-20	합의
32	실대정부 남북관계의 개혁성 정도	9	2003-07-08	2003-07-22	합의
31	북한에 남산 300봉조 남북관계 개선	100	2003-05-24	2003-07-07	합의
30	한일합성화학공-북한합성	88	2003-05-11	2003-05-23	합의

통일진단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또 다른 공간으로 ‘쟁점과 여론’이 있으나 사이트에 대한 홍보부족과 네티즌들의 무관심으로 설문조사 참여자가 극히 소수에 그친다. 현재의 설문조사 형태로는 네티즌들의 참여를 기대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쟁점에 대한 토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여론조사는 크게 의미가 없다. 네티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쟁점과 관련된 주요 자료들을 제공하여 네티즌들로 하여금 각 쟁점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각 쟁점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쟁점의 핵심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의 토론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통일진단’과 ‘쟁점과 여론’을 통합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 하다. ‘통일진단’의 경우 포럼주제가 일반시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게재된 글의 내용을 보더라도 토론을 유도할 만한 쟁점이나 이슈를 분명히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편 ‘설문조사’의 주제는 현재 우리사회에

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일단 주제의 시의성 면에 있어서는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대로 주제에 대한 토론 없이 단순한 찬반투표는 정확한 여론을 선포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의미있고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는 현재 '설문조사'의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정치인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각각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앞서 지적한 바대로 각 토론방 관리자의 적극적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다.

#### (다) 메일링 리스트 서비스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는 네티즌들이 굳이 관련 홈페이지를 찾지 않고서도 정기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국내외 최신 정보의 경우 사용자들의 굳이 통일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e-mail로 받아 볼 수 있는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통일연구원 홈페이지는 게시판 형식으로 최근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 쫓기는 네티즌들로서는 매일 매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서비스는 단순히 최근 뉴스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정책자료와 관련 연구물 그리고 주요 정보 소스까지 안내하는 포괄적 정보 제공이 되어야 한다.

최근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이 증가하면서, 스팸메일 기관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적절한 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제공을 통일연구원의 회원으로 등록된 개인과 기관에 게 한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정보 제공의 질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남북관계현안 및 북한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북한 관련 뉴스>

번호	제목	출처	날짜	조회	국외
3088	D 「3차대선사 남북관계 재기 불문」 <중앙일보>	백성문	03-09-22	13	국내
3087	D 「北, 중동군사훈련 발상행보 미정론」	백성문	03-09-22	14	국내
3086	D 북한 「통일합곡역대주 입국일, 부대주 리군」	백성문	03-09-21	30	국내
3085	D 남북, 개성시 철도 도량연결 실무협약	백성문	03-09-21	20	국내
3084	D 「北, 조국출, 연주시 전행철의」	백성문	03-09-21	15	북한
3083	D 「美, 남북지 통행 수송 검토」 <로동신문>	백성문	03-09-21	20	국외
3082	D 북한 「리사대 역동군사훈련 발상 발상」	백성문	03-09-21	12	국외
3081	D 「6자회담-평화선언협의 연계」	백성문	03-09-21	13	국내
3080	D 「조기사실로 18일회담」 <북동진>	백성문	03-09-21	14	국내
3079	D 남북국합업이제 오를부터 발표	백성문	03-09-21	18	국내

미국의 전자민주주의 사이트 운영자인 Steve Clift가 운영하는 Democracy Online 사이트(<http://e-democracy.org/do>)의 경우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하여 전자민주주의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매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전달하는 정보는 각국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소식뿐만 아니라 각국의 주요 전자민주주의 사업, 관련 논문 원본, 전자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요 정보소스를 안내하고 있다. Democracy Online의 메일링리스트 가입자는 자신의 이메일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전자민주주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아서 얻을 수 있어 정보검색에 필요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포럼의 경우도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할 경우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 활발한 토론을 위해서는 포럼 운영방식도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 토론방

의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토론방들은 게시판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토론에 직접 참여하거나 토론 진행상황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매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야 하는 수고를 필요로 한다. 토론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미네소타주의 e-democracy 프로그램은 이메일 리스트서버와 하이퍼메일 방식을 혼용하고 있다. 즉 개인은 이메일 리스트로 글을 올려 모든 회원에게 직접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며 이 메시지는 자동적으로 웹사이트의 목록에도 저장되게 된다. 이 경우 등록된 회원들은 웹사이트에 접속할 필요가 없이 곧 바로 이메일로 다른 사람들의 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으며, 비회원들도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토론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포럼에 대한 접근성을 매우 높이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에게 이 메일 확인은 일상화되어 있는 반면, 일상생활에 비싼 개인들로서는 포럼의 존재 자체를 잊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 <정세분석보고서>

기존의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활용도(접속건수)를 보면, 정세분석보고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라는 점에서 통일연구원의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최근 정세분석보고서의 목록은 아래와 같이 타 연구기관과는 차별성이 부각되는 주제이다. 2003년 정세분석의 주제는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분석(통일정세분석 2003-07), 북한병역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통일정세분석 2003-06),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정비(통일정세분석 2003-05), 한 미 정상회담과 향후 공조 방향(통일정세분석 2003-04),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통일정세분석 2003-03),

핵문제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통일정세분석 2003-02),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통일정세 분석 2003-01)이다.

정세분석보고서와 함께, 통일연구원이 주요 현안에 대해 작성하고 있는 정책건의서의 내용을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건의서의 사안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개가 지연되어 왔으나, 주요 현안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도모 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 정책건의서를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 라. 결론 및 향후과제

국내외 통일관련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킹이 모색될 수 있으나, 시대적 변화를 고려할 때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 협력체계 강화는 무엇보다도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ff-line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협력도 on-line 상에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의 연구자나 일반인,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동포 및 외국의 전문가들이 통일연구원의 자료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자료서비스 부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웹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문으로는 연구보고서, 정책건의서, 정세분석보고서 등이 전문으로 제공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연구결과물중에서 남북관계 현안 및 북한의 최근 현황



및 변화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영역화하여 국제사회에 서비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관련 중요자료들을 영역화하며 웹상으로 제공하고, 특히 북한관련 각종 통계 및 주요 수치자료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내용을 제공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대한 국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니터원들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북한관련 국내의 전문가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재외 동포 및 외국인 전문가의 의견 개진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타 기관의 온라인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태지역 네트워크(Asia-Pacific Area Network, <http://www.apan-info.net>)과는 협력의사를 교환한 바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교류기관들을 확대하여 통일·북한관련 온라인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정보자료·연구실적의 온라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의 통일정책수립 및 집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내외적으로 통일·북한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결 론

#### 1. 국제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국제적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의 국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통일안보역량을 다른 지역으로도 분산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이 경우 통일에 대비한 국제적 역량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외교는 주변 4강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주변 4강 이외지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포괄적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은 북핵 문제의 우선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공동변영 실현과 동북아 공동변영의 추구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유럽, 호주, 동남아 국가, 비동맹국가들은 비록 한반도 주변국은 아니지만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북핵, 남북 및 동북아 경협, 한반도 안정과 평화 문제 등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 국가들과의 긴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북핵문제의 해결, 북한의 변화와 개방 유도 등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수행의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변 4강 이외지역으로부터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경우 주변 4강에 대한 우리 외교의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정부의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여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보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

국의 대북정책은 단기적으로 남북한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외교수단임을 인식시킴으로써 한반도 불안정성을 줄이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한다면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정당성은 보다 넓은 공감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은 주변 4강 이외의 국가들에게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도록 권유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주변 4강 이외국가들도 국제무대에서 독자적 외교영역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여 냉전적 시각보다는 보다 열린 관점으로 북한과의 외교관계 확대 및 경험추진이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주변 4강 이외국가들의 지지를 얻도록 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적 안보문제로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이 일차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대북압박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북핵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중·미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결과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안보 및 경제에 대해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는 6자회담 및 남북대화 등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주변 4강 이외국가들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이들 국가들의 지지와 긍정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일한국이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결코 위협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한반도 주변 4강 이외지역의 국가들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학계, 언론계, 기업, NGO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예컨대 양국간에는 지방 단위에서도 도별, 시별, 구별 단위로 자매도시를 체결하여 각 단위간 교류협력의 활성화 도모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우리정부의 통일외교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의 국제통일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물론, 전경련이나 대기업의 주요 민간연구소, 금융기관 등은 ‘한국의 21세기 경제구상과 남북경협’을 주요 국가들의 금융기관, 무역단체, 주요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의 심화를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전문적인 학술연구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한국의 통일외교역량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방안 중 하나는 해당국가에서 한반도문제 학술연구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는 것이다. 한국의 통일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주요 고려사항은 각국의 여론 주도층에 대해 한국 통일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재외동포는 한국의 국가목표를 추구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외동포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접촉을

통해 이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따라서 현지사정에 적합한 재외동포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해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은 양적 관리정책에서 질적 발전정책으로의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현지교민들의 입장과 의사를 해당국가나 모국의 교민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정책프로그램을 보다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정부-비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은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밖에도 저비용으로 이들 지역에게 on-line이나 off-line과 같은 정보매체를 통하여 정보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정보화는 개인을 비롯하여 기업, 초국가적 기구나 비정부적 기구들의 국가에 대한 도전능력을 혁명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통일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 2. 세부추진 방안

### 가. 정부차원

북핵 위기가 해결되면 우리 정부는 동북아에서 핵에너지와 핵연구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대체에너지, 환경, 원자로안전 분야에서 협력을 위해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와 유사한 「동북아원자력공동체」(NEATOM)의 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남북한과 EU는 EURATOM의 사례를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EU측에 중개자 역할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경제공동체와 동북아경제공동체 및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형성을 위해 남북한과 EU 3자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EU 사례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영국은 미·영 동맹이 미국의 세계전략의 핵심 기반인 만큼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주요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여론의 형성과 관련하여 대영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정보기관의 교류 강화, 해당부처 국장급 수준 실무급 관료들의 정책협의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영 의원연맹 등을 조직·강화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외교에 있어 스웨덴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 스웨덴이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관계개선, 한반도비핵화 등을 지지하도록 하고 핵문제가 해결된 경우 경수로사업 재개에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정식 회원국이 된 이후 정상회의 등 각종 비동맹운동 조직 내에서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서 지속적으로 취급되어 오고 있다. 체제경쟁에 기반한 통일외교를 지양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비동맹운동에 대한 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동맹운동에 대한 통일 외교는 정상회담 이후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전파하는 데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비동맹운동에서 영향력이 큰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이란권,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권역을 나누고 권역별로 특정국가에 대한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인도, 이집트,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쿠바 등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보다는 한반도 통일의 현주소,

북한의 실상,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동맹운동의 정상회의, 외상회의 등을 주관하는 의장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비동맹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감안할 때 이념과 원칙 일변도의 구호투쟁에서 실리주의가 더욱 중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동맹운동 내에서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수준의 격차를 축소하지 않고서는 국제적 안정을 이룩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비동맹운동 회원국기들을 대상으로 통일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동맹회원국에 대한 협력사업의 강화 및 확대가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이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연결 고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비동맹회원국과의 교역을 연계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지지를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무지한 비동맹회원국 국민들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된다. 다시 말해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로 직결되는 경우 대부분인 바,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집트 등에서의 한국상품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바, 이러한 것을 고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간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의 국가들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학계, 언론계, 기업, NGO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예컨대 양국간에는 지방

단위에서도 도별, 시별, 구별 단위로 자매도시를 체결하여 각 단위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뉴사일즈웨일즈주, 경기도는 퀸스랜드주, 부산시는 빅토리아주, 충남은 남호주주, 제주도는 타즈마이나주, 수원시는 타운즈빌시 등이 각각 정보교환과 인적교류를 통하여 상호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협력 모델은 동남아시아, 비동맹국가들에게도 도입되게 하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주독 통일주재관이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것은 상기와 같은 성과를 감안할 때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도 독일통합 과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독일통일을 평가한 보고서, 책자 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통일주재관을 주독 대사관에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정부는 해외동포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접촉을 통해 이들이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재단」의 해외한민족 포털사이트인 Global Korean NetWork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23세 해외동포들은 우리의 국제적 통일역량 구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역군들이기 때문에 해외국가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에 대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 정부의 해외동포 정책은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재단」,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제교육진흥원」, 문화관광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승격시켜 업무의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현지사정에 적합한 재외동포 정책의 개발



이 필요하다. 양적 관리정책에서 질적 발전정책으로의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현지교민들의 입장과 의사를 해당국가나 모국의 교민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정책프로그램을 보다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뉴질랜드에서는 남부 크라이스트처치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24시간 한국어로 방송할 수 있는 라디오방송국(KFM)이 현지인들의 노력으로 개국하였다. 이러한 장치들이 “동포에 의한 동포를 위한 방송”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및 한국방송계의 적극적인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해외 거주 한국민들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현지에서 한국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모국의 입장을 홍보할 수 있는 한국인들이 전문직업인으로서 거주국의 상층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현지단체나 한국에서 파견된 정부기관 및 재외동포 관련단체들의 기능과 역할이 교민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동남아, 유럽, 호주, 비동맹국가들에게 한반도 문제 및 한국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활용하여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들의 정치, 외교, 경제 분야의 유능한 인재들을 한국에 유학시켜 한국 및 한반도 문제를 전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몇몇 일부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는 있으나 재정지원이 부족하다. 보다 과감한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여러 국가들의 많은 인재를 한국에서 교육시켜 동남아 각국에 다수의 한국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동남아 각국이 한국 및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를 다수 확보할 수 있어야,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그들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해 나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EU, 동남아, 호주, 비동맹국가들은 21세기 동북아 경제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21세기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국가들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물론, 전경련이나 대기업의 주요 민간연구소, 금융기관 등은 '한국의 21세기 경제구상과 남북경협'을 주요 국가들의 금융기관, 무역단체, 주요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의 심화를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정부의 통일외교정책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의 국제통일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 거점국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오세아니아주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거점지역으로 하여 주변국가나 지역에 진출하는 방안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남태평양의 지도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의 도서국가들에 대한 진출을 위한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주변의 도서국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호주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솔로몬제도에 대해 치안유지와 질서회복을 위해 상당한 수의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 나. 민간차원

한국의 통일외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주요 고려사항은 각국

의 여론 주도층에 대해 한국 통일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각국의 정치인, 관료, 외교관, 군부인사, 언론인, 학자, 기업인, 학생, 문화 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여론 주도 집단을 수시로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한국의 통일정책과 비전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자국에서 한국 및 한반도 문제 해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업은 이미 한국정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분야별, 직업별로 초청인원을 다양화하고 개인별 초청과 집단별 초청 등으로 초청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몇 개 나라의 여론지도층을 동시에 초청하고 이들에게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한반도문제에 대한 종합적 시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저비용으로 이들 지역에게 on-line이나 off-line과 같은 정보매체를 통하여 정보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연구원 등과 같은 전문연구기관 등지에서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련된 영문자료나 연구성과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것도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동남아 등에는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적인 학술단체나 NGO들이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도 한국으로서는 중요한 외교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반도 관련 단체들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과의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전문적인 학술연구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 호주에서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는 호주국립대 한국학연구센터, 호주국립대 전략방위연구센터, 그린피스대 호주한국연구센터, 뉴사우스웨일즈대 한 호연구센터(소장 서증석 교수), 그리고 오틀랜드대 한국연구센터 등을 열거해 볼 수 있다. EU 회원국들 중에서 이러한 기관들이 많이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연차적으로 다른 국가들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을 비롯한 국책기관들은 분야별로 EU내 주요 연구기관들을 선정하고, 이들과 정기적인 정보교환, 정책연구 성과의 교환, 국제학술지 공동기고, 전문가 교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부터는 EU 회원국이 동구국가들로 확대되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회복이 빠른 폴란드, 체코, 헝가리 소재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동구국가들은 북한과 오래전부터 외교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차적으로 아세안국가 가운데 연구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하고 이들과 협력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ISEAS(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인도네시아의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말레이시아의 ISIS(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태국의 출라랑콘 대학과 타미사트대학, 필리핀의 필리핀 국립대학과 제 3세계연구소, 베트남의 사회과학원 등이 협력대상이 될 수 있는 연구기관이다. 한국의 협력 주관기관은 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통일연구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의 통일외교역량을 중 장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 방

안 중 하나는 해당국가에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꾸준히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전문가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정부출연기관이나 학술연구단체, 그리고 대학 등지에서 인적 교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은 좋은 사례에 해당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전문가와 한국측 전문가의 상호방문, 워크샵,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3개월내지 6개월씩 상대방의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안보와 경제협력,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문제 등에 대해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영문으로 공동출판하는 작업도 추진될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 대학교의 유학생 유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주요 연구기관이 권역별로 연계를 맺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권역별 주요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기적인 포럼이 구성될 경우 한국과 권역을 순회하면서 학술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지한, 친한인사의 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해외언론 매체, 교역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언론사의 특파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재외동포는 한국의 국가목표를 추구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재외동포는 남북한간의 불신의 벽과 적대감을 여과시키고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매개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가치와 역할이 자못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외동포는 국적개념이 아닌 민족개념에 의거하여 남·북·한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통일문제를 정치

적 차원이 아닌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재외동포 기업은 남한기업보다 북한접근이 용이하여 북한의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의 경우 동포기업인 코스트(KOAST)그룹(회장 천용수)은 북한이 전량수입하고 있는 설탕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북한주민들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한편 광산개발이나 폴리우레탄 공장, 임가공 사업 등 활발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역량을 결집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 있는 친북적 한인단체들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들의 활동이 한반도 문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다. 국제기구차원

한국이 정부-비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은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예컨대 ARF는 ASEAN이 주도하는 아태지역 유일의 다자안보대화체로서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다. 다수의 회이체로 구성되어 있는 ARF는 동남아국가, 호주, 뉴질랜드에게 한국의 통일정책을 알리고 그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다.

북한은 2000년 7월 ARF에 가입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 북한은 ARF를 정치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 등 자신들의 공식적

인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로 간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본입장은 북한을 국제적 다자기구의 장으로 끌어들이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향후 ARF에서 한국과 북한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과 비공식적 협의의 채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ARF를 주도하고 있는 ASEAN 국가 및 호주의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차원의 공식적 채널은 아니지만 민간 협의기구인 CSCAP도 ASEAN과 동남아국가들에게 한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유용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CSCAP은 아태지역의 안보정책 연구기관과 학자, 전문가 그리고 각국 정부관리들이 개인적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 차원의 다자안보대화체이며, 다수 동남아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CSCAP과 관련된 다양한 차원의 각종 회의가 매년 다수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이를 통해 우리의 통일정책을 ASEAN 국가들에게 알리고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도 CSCAP에 일부 참여하고는 있으나, ARF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이지 않다. 따라서 북한이 CSCAP에 참여하여 국제적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북한과 동아시아국가와의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CSCAP 회원국들에게도 북한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북한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득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 3. 통일인프라 구축

#### <통일·북한관련 지식네트워크의 방향>

정보화는 개인을 비롯하여 기업, 초국가적 기구나 비정부적 기구들의 국가에 대한 도전능력을 혁명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통일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통일관련 지식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부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의 주요현안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통일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건보도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북한핵문제 및 인권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기존에 남북한사회에 대한 연구와 홍보가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와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단순히 지역연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과 북한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사회의 전문연구자들 간에만 진행되어 온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통일분야 지식네트워크 구축은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통일관련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됨으로써 통일 관련 정책이 기존의 공식적 제도 내에서만 논의되던 관료적 모델에서 벗어나 전



문기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정책결정이 가능하다. 이는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함으로써 현재 빚어지고 있는 한국사회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성공적인 네트워킹의 출발점은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있다. 통일에 관련된 많은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보전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필요한 정보가 제때에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을 이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일반시민들도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갖게 된다. CMC가 도입되기 전에는 일반시민들의 정책결정 참여 기회가 주로 정책토론회나 공청회 참석으로 제한되었으며 그나마 제한된 시간과 공간으로 인해 활발한 정책토론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쌍방향 통신뿐만 아니라 일 대 일(one-to-one), 다수 대 일(many-to-one), 다수 대 다수(many-to-many) 등의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만드는 CMC의 발달은 이전에 '정치적 청중' 혹은 '정치적 수용자에 불과하였던 개인들을 '정치적 참여자'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통일연구원 홈페이지가 통일분야 지식네트워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중개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의 기능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개조직은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관심사와 주장을 표현하고 적합한 참가자가 적절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야 한다. 중개조직은 정보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접점을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로 하여금 정보네트워

크 구축에 투자하여 사회경제적 결실을 수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인터넷이 갖는 멀티미디어 기능은 정보의 생성, 저장, 공유, 재생 그리고 분배의 범위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토론방, 게시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스트리밍 뉴스(streaming news)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이용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한다. 인터넷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분야 지식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정책결정과 관련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 과거 정책에 대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통일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부와 전문가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토론방을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는 통일분야 정책결정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분야의 정부조직과 연구기관 그리고 전문가를 네트워킹하는 게이트웨이(gateway) 역할을 해야 한다. 통일분야의 게이트웨이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통일 자원을 연계하여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며 이들 간의 상호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관련 정보 메일링리스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자원 동원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통일관련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킹이 모색될 수 있으나, 시대적 변화를 고려할 때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 협력체계 강화는 무엇보다도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ff-line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협력도 on-line 상에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의 연구자나 일반인, 해외에 거

주하고 있는 해외동포 및 외국의 전문가들이 통일연구원의 자료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자료서비스 부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웹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문으로는 연구보고서, 정책건의서, 정세분석보고서 등이 전문으로 제공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연구결과물 중에서 남북관계 현안 및 북한의 최근 현황 및 변화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영역화하여 국제사회에 서비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관련 중요자료들을 영역화하며 웹상으로 제공하고, 특히 북한관련 각종 통계 및 주요 수치자료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워크샵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내용을 제공하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대한 국내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모니터요원들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북한관련 국내외 전문가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 전문가의 의견 개진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타 기관의 온라인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태지역 네트워크(Asia-Pacific Area Network, <http://www.apan-info.net>)과는 협력의사를 교환한 바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교류기관들을 확대하여 통일·북한관련 온라인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정보자료·연구실적의 온라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의 통일정책수립 및 집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내외적으로 통일·북한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학성. 『북한-독일 수교의 배경과 EU 국가들의 한반도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2001-07.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박형준. 『1『정보화의 문명사적 의미와 국가전략의 방향』. 서울: 박영률출판사, 1996.
- 신상진 외.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주변국 협력유도 방안』.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99-24 1999.
- 양승윤 외. 『오세아니아-동남아의 가장 가까운 이웃』.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3.
-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별편람』.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 2003.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서울: 한국은행, 2003.
- Baratta, Mario von and Jan Ulrich Clauss. *Fischer Almanach der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Frankfurt am Main: Fischer Taschenbuch Verlag, 1995.
- Dent, Christopher M. *The European Union and East Asia: An economic relationship*.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 India. *Parliamentary Debates*, vol. 5 of 1950, pt. 2. 1950.
- Shenk, David. *Data Smog: Surviving the Information Glu*. New York: Harper Collins, 1997.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session 2, plen. Mtgs., vol. 1.

## 2. 논문

소영진 “정보사회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최성모 편 『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 서울: 나남, 1998.

황인수. “영국과 북한관계.” 통일연구원 정책간담회 발표논문. 2003.10.15.

Noveck, Beth Simone. “Paradoxical Partners: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Electronic Democracy.” Peter Ferdinand, eds, *The Internet,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London ·Portland, OR: Frank Cass, 2000.

Luke, Timothy W.. “The Politics of Digital Inequality: Access, Capability and Distribution in Cyberspace.” 1998. Chris Toulouse & Timothy W. Luke, eds. *The Politics of Cyberspace*.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0.

“Anna Lindh applauds re-opening of railway lin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ress Release, Swed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0.9.14.

“Anna Lindh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decision to abandon the Non-Proliferation Treaty.” Press Release, Swed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3.1.10.”

### 3. 기타

「로동신문」

「문화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중앙일보」

「KOREA 북한뉴스레터」

「YTN」

외무부 국제연합국. “비동맹 운동 개황.” 집무자료 97-(집연).1997.5.

FBIS-WEU-2003-1120.

“ASEAN-EU-Ministertagung in Karlsruhe vom 22.-23. September 1994.” Dokumente von 1949 bis 1994.

“Lage in Nordkorea, Rede von Staatsminister Ludger Volmer vor dem Deutschen Bundestag am 05.07.2001 (Auszüge).”

UN Doc. A/523, 1948.2.9

<[http://www.acdpu.go.kr/n\\_news1/bodo/bd2002\\_03.htm](http://www.acdpu.go.kr/n_news1/bodo/bd2002_03.htm)>.

<[http://www.acdpu.go.kr/n\\_news1/bodo/bd2002\\_25.htm](http://www.acdpu.go.kr/n_news1/bodo/bd2002_25.htm)>.

<[http://www.delkor.cec.eu.int/kr/eukorea/eu\\_relations.htm](http://www.delkor.cec.eu.int/kr/eukorea/eu_relations.htm)> .

<[http://www.mofat.go.kr/file/addmenu/EU<sup>r</sup>1\\_1\\_hwp](http://www.mofat.go.kr/file/addmenu/EU<sup>r</sup>1_1_hwp)>.

- <<http://news.naver.com/news>> (2003.10.20).
- <[http://research.hanminjok.net/global/docs/d\\_directory.html](http://research.hanminjok.net/global/docs/d_directory.html)>.
- <<http://www.australia.or.kr/>>.
- <[http://www.delkor.cec.eu.int/kr/about\\_us/delegation.htm](http://www.delkor.cec.eu.int/kr/about_us/delegation.htm)>.
- <<http://www.hanminjok.net/research/stat/organ5.asp>>.
- <[http://www.mofat.go.kr/file/addmenu/EU%11\\_hwp](http://www.mofat.go.kr/file/addmenu/EU%11_hwp)>.
- “급진전 보이는 북-EU 관계” <<http://www3.yonhapnews.net>> (2001.3.1).
- “북한, 독일 쇠고기 지원조건 수용.” <<http://www3.yonhapnews.net>> (2001.3.2).
- “북한-독일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종합 2보).” <<http://www3.yonhapnews.net>> (2001.3.1).
- “북한-독일 4개항 합의.” <<http://www3.yonhapnews.net>> (2001.3.2).
- “정부, 북한-독일 수교 ‘환영.’” <<http://www3.yonhapnews.net>> (2001.3.2).
- “EU, 북 미사일 판매 계속되면 대화 중단” <<http://www3.yonhapnews.net>> (2001.5.8).
- “Beziehungen zwischen Nordkorea und Deutschland.” <<http://www.auswaertiges-amt.de>> (2001.6).
- “Beziehungen zwischen Nordkorea und Deutschland.” <<http://www.auswaertiges-amt.de>> (June 2001).
- “Bundesaußenminister Fischer zu Berichten über ein nordkoreanisches Programm zur Urananreicherung für Nuklearwaffen.” <<http://www.auswaertiges-amt.de>> (2002.10.17).
- “Deutschland und Nordkorea nehmen diplomatische

Beziehungen auf.” <<http://www.auswaertiges-amt.de>>  
(2001.3.1).

“Erklärung von Seoul für Friede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20. Oktober 2000.” <[www.auswaertiges-amt.de](http://www.auswaertiges-amt.de)>  
(2000. 10. 20).

“Korea/Demokratische Volksrepublik (Nordkorea).”  
<<http://www.auswaertiges-amt.de>> (2002.1.28).

“Korea/Demokratische Volksrepublik (Nordkorea).”  
<<http://www.auswaertiges-amt.de>> (Juni 2001).

“Korea/Demokratische Volksrepublik (Nordkorea),”  
<<http://www.auswaertiges-amt.de> (Juni 2001)>

“Lage in Nordkorea, Rede von Staatsminister Ludger Volmer  
vor dem Deutschen Bundestag am 05.07.2001 (Auszüge).”  
<<http://www.auswaertiges-amt.de>> (2001.7.5).

“Staatsminister Volmer ruft zum Dialog zwischen Nord- und  
Südkorea ohne Vorbedingungen auf.”  
<<http://www.auswaertiges-amt.de>> (2000.4.5).

“Staatsminister Volmer ruft zum Dialog zwischen Nord- und  
Südkorea ohne Vorbedingungen auf.”  
<<http://www.auswaertiges-amt.de>> (2000.4.5).

“Staatsminister Volmer zu seiner Nordkoreareise und zum  
ASEAN-Gipfel-Interview im DLF(Auszüge).”  
<<http://www.auswaertiges-amt.de>> (2000.10.19).



“Thessaloniki European Council, 19 and 20 June 2003,  
Presidency Conclusions.” <[http://ue.eu.int/  
pressData/en/ec/76279.pdf](http://ue.eu.int/pressData/en/ec/76279.pdf)>.